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Economic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I

[지출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상우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이동엽 경제분석관
권일 경제분석관
김민혁 경제분석관

작성 |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신웅재 경제분석관

지원 | 엄상미 행정실무원
방지원 자료분석연구원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4년 우리 경제는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 올해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 약화로 인한 재정 여력 하락과 총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1권 「지출부문」은 실질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 민간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며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나 하방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과 성장률 둔화 가속화,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 여건의 개선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영 여건상 어려움으로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성장률 상승 폭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증가세가 높아지고, 소비자물가는 수요둔화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 압력이 둔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4년 및 중기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국내총생산 (RGDP)	2.6	1.1	2.0	3.0	2.6	2.3
최종소비	4.1	2.2	2.2	2.3	2.1	2.1
민간소비	4.1	2.4	2.2	2.2	2.1	2.1
정부소비	4.0	1.9	2.2	2.4	2.2	2.0
총고정투자	-0.5	1.4	2.4	3.5	3.1	3.0
민간투자	0.4	1.5	2.6	4.0	3.4	3.3
정부투자	-5.1	0.9	1.0	0.7	1.4	1.4
총수출	3.4	0.3	7.0	6.6	6.3	5.9
총수입	3.5	2.2	7.5	5.6	5.7	5.9
경상수지(억달러)	298	280	360	430	500	570
상품수출(통관)	6.1	-9.6	7.2	7.1	7.1	7.1
상품수입(통관)	18.9	-10.5	5.7	6.4	6.5	6.6
GDP디플레이터	1.3	1.1	2.2	2.0	2.2	2.1
소비자물가	5.1	3.4	2.4	2.2	2.2	2.1
명목 국내총생산 (NGDP)	3.9	2.2	4.2	5.1	4.8	4.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I. 동향

1. 세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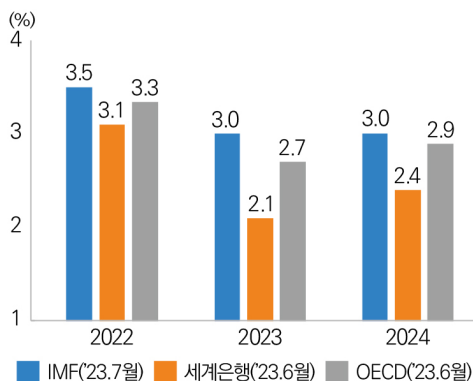
□ 2023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

- 통화 긴축과 금리 상승 지속, 미·중 갈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의 경제 재개 효과 등의 영향
 - 제조업 및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지속과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진정 국면 진입
 - 다만 견조한 고용여건과 서비스 소비 증가 등으로 근원물가상승률은 아직 높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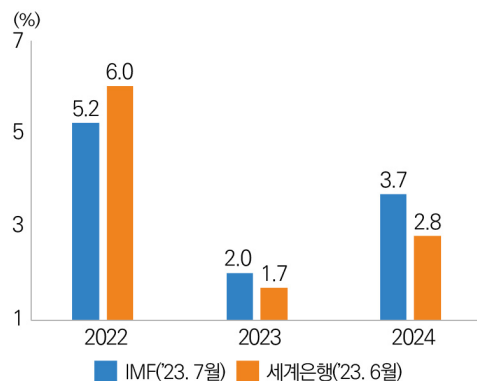
□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량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회복 흐름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은 2.8%, 세계교역량은 3.3% 증가 예상
 - 교역량 회복과 제조업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국제기구의 세계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 세계 물가상승률은 2023년 6.8%(선진국 4.7%, 신흥국 8.3%)에서 2024년 5.2%(선진국 2.8%, 신흥국 6.8%)로 낮아질 예상
 - 근원물가의 견조한 오름세 지속, 중국의 대내외 수요 부진,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공급 불안 등으로 상하방 요인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2024년 전년대비 1.7%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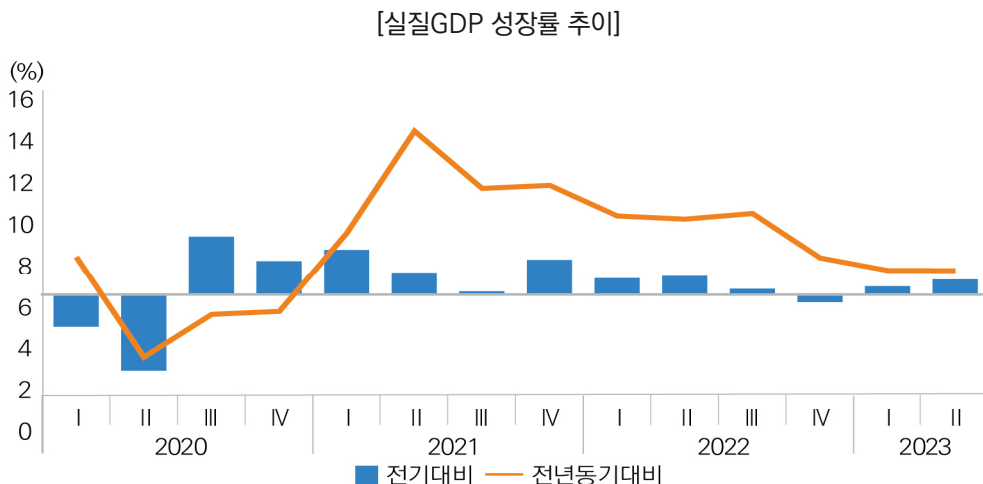
□ 전망의 위험 요인

- (상방요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과 통화긴축 종료, 중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등
- (하방요인)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 가속화,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2. 국내 경제

□ 2023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약화

- 상반기 중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세계교역 둔화의 여파로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성장세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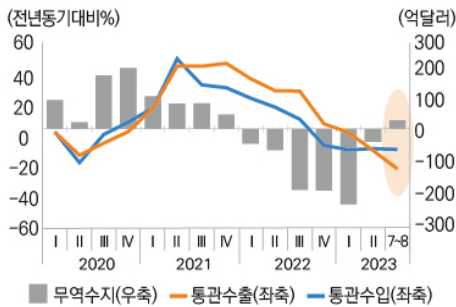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내수 흐름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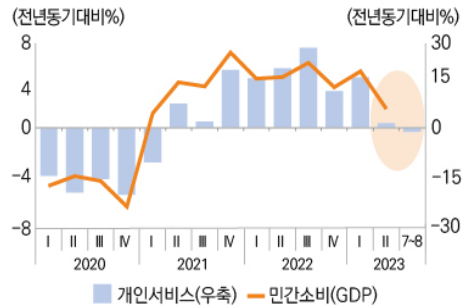
-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하던 개인서비스 증가율이 2분기 들어 급락
- 다만 최근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통계청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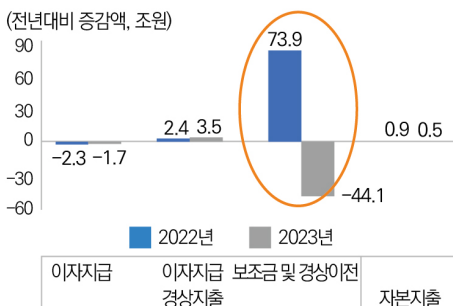
□ 고용은 회복 흐름이 약해지고, 물가는 하향 안정

-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1분기 40만 → 2분기 30만 → 7월 21만 명)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오름세가 진정되며 안정되는 모습

□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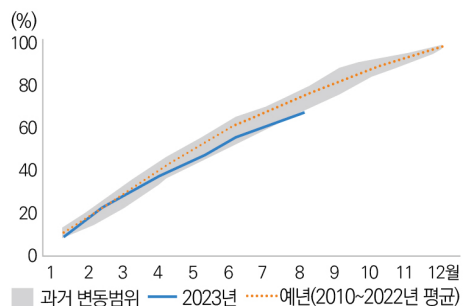
- 세입 결손이 자칫 지방정부의 세출 자원 부족과 재정축소로 이어질 우려
- 올해 지방정부 경상이전 예산이 크게 준 데다 집행률도 크게 부진

[지출용도별 예산증감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집행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II. 2024년 및 중기 전망

1.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22. 10월)에 비해 하향 조정

- 정부소비와 투자 등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며 0.3%p 하향 조정

□ 2023~2027년 중 연평균 성장률은 2.2%로 지난 전망과 동일한 수준

- 연별로 보면 2023년과 2024년이 1.1%, 2.0%로 각각 1.0%p, 0.3%p 하향 조정되고, 2025~2027년 중에는 0.7%p, 0.5%p, 0.2%p 상향 조정
-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였으나, 민간소비 상향 조정과 총수입의 하향 조정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수준 유지

2. 경제성장률

□ 2024년 국내 경제는 2.0% 성장 예상

- 우리 경제의 실질GDP는 세계경제 둔화, 미·중 갈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1.1%와 2.0% 성장할 전망
- 정부소비는 2024년 총지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1.9%)보다 높은 2.2% 증가할 전망
- 정부투자는 2024년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1.0%늘어 2023년 0.9%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24년 소득 여건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2% 증가하여 2023년(2.4%)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 민간투자는 2024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2.6% 증가하여 2023년(1.5%)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2024년 건설투자는 0.2%, 설비투자는 4.5%,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4% 증가할 전망
- 총수출은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2024년 7.0%로 2023년 (0.3%)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총수입은 2024년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증가율이 7.5% 까지 높아질 전망(2023년 2.2%)
-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2.0%p에서 2024년 2.3%p로 높아지겠으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0.9%p에서 2023년 -0.3%p로 소폭 증가

□ 2024년 명목GDP 성장률은 4.2%로 예상

-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3년에 비해 높아질 예상(실질GDP 1.1% → 2.0%, GDP디플레이터 1.1% → 2.2%)

[명목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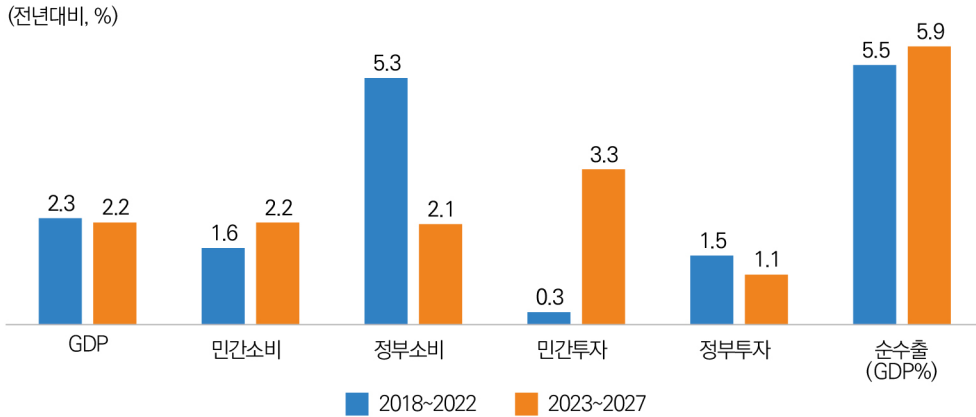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3.9	1.8	2.7	2.2	4.2
실질국내총생산	2.6	0.9	1.3	1.1	2.0
GDP디플레이터	1.3	0.9	1.3	1.1	2.2

주: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음영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3~2027년중 실질GDP는 연평균 2.2% 성장 예상

- 이전 5년(2018~2022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하락
- 내수 성장기여도가 이전 5년에 비해 상승하겠으나 순수출 기여도는 하락
 - 성장기여도(연평균, %p): 내수 1.6 → 2.4, 순수출 0.7 → -0.2
- 명목GDP는 연평균 4.2% 성장 예상

[실질GDP 지출부문별 증기 전망(5년단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정부소비 및 투자

□ 2024년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2024년 정부소비는 총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대비 2.2% 증가
 -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은 큰 폭으로 둔화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의 증가세 회복,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오름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늘어 2023년(1.9%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정부소비는 연평균 2.1% 증가하여 지난 5년(연평균 5.3%)에 비해 증가율이 연평균 3.2%p 하락
 - 명목성장률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여건 악화,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
 - 2023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의 의무지출은 2022년 계획 대비 2024~2026년 기간 중 연평균 11.3조원(3.0%) 적게 편성

□ 2024년 정부투자는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2024년 정부투자는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 늘어 2023년(0.9% 전망)과 비슷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SOC, 환경, 국방, 공공질서·안전 분야 등에서 정부투자 관련 예산의 증가는 정부의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 요인
- 반면 R&D 분야는 전년대비 16.6%(5.6조원) 줄며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감소 요인이 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정부투자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지난 5년(연평균 1.5%)에 비해 증가율이 연평균 0.4%p 하락
 - 2023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의 재량지출은 2022년 계획 대비 2024~2026년 기간 중 연평균 3.8조원(1.2%) 적게 편성

4. 민간소비

□ 2024년 민간소비는 2.2% 증가할 전망

- 2024년 민간소비는 2023년(2.4% 증가 전망)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가계의 양호한 소비 여력과 소득 여건 개선, 소비심리 상승 등의 상방 요인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
 - 중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수준(2%)으로 안정화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인구구조 변화로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중기 민간 소비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5. 민간투자

□ 2024년 민간투자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2.6% 증가할 전망

□ 2024년 건설투자는 0.2% 증가할 전망

- 2024년 건설투자는 2023년(1.0%) 대비 0.8%p 감소할 전망
 - SOC 예산 증가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건설 관련 선행지표(건설수주, 인허가 등) 부진, 건설비용 상승 등 하방요인이 이를 제약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동안 SOC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겠으나(연평균 2.9% 증가), 건물건설 부문의 선행지표 부진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4년 설비투자는 4.5% 증가할 전망

- 2024년 설비투자는 2023년(0.6%) 대비 3.9%p 증가할 전망
 - 반도체 경기 상승, 세제 개편으로 인한 국내 투자 유인 증가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및 대외불확실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
 - 전기차, 고성능반도체 등 친환경·차세대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가 관련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

□ 2024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4% 증가할 전망

- 2024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3년(3.3%) 대비 1.1%p 증가할 전망
 - 기업 투자여력 확대 및 신성장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촉진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
 - 인공지능, 패키지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6. 대외거래

□ 2024년 총수출(국민계정)은 7.0%p 증가할 전망

- 2024년 총수출은 2023년(0.3%) 대비 6.7%p 증가할 전망
 - 세계수입수요확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은 전망의 상방요인이나, 중국경제 성장세 약화와 IT 교체주기 증가 등은 감소 요인이 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증가는 총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4년 총수입(국민계정)은 7.5%p 증가할 전망

- 2024년 총수입은 2023년(2.2%) 대비 5.3%p 증가할 전망
 - 민간투자 등 내수 부문의 수요증가 및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요증가가 수입을 확대시킬 전망
 - 해외여행 등 서비스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3~2027년 기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진작은 총수입 확대에 이어질 전망

7. 물가

□ 2024년 소비자물가는 2.4% 상승할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는 2023년(3.4% 상승 전망)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비용상승압력 완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5% 상승할 전망
 - 2026년부터 GDP 갭이 플러스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중기 시계에서 수요 측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화, 기준금리 인상의 시차효과 등은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제 I 부 동향]

제1장 세계 경제 3

제2장 국내 경제 15

[제 II 부 2024년 및 중기 전망]

제1장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35

제2장 경제성장률 38

제3장 정부소비 및 투자 45

제4장 민간소비 59

제5장 민간투자 66

제6장 대외거래 82

제7장 소비자물가 91

[부록: NABO 10년 전망] 98



BOX 차례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10
[BOX 2]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중기 전망	12
[BOX 3] 품목별·지역별 수출	22
[BOX 4] 예·결산 자료의 정부부문 GDP 전망 활용	29
[BOX 5] 세계개편과 기업투자	71
[BOX 6]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우리 경제	88



[제 II 부]

[표 II-1] 2024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36
[표 II-2] 2023~2027년 국내 경제전망	40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40
[표 II-4]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4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43
[표 II-5] 2024년 SOC 분야 예산안	49
[표 II-6] 2024년 정부투자 관련 주요 분야별 증액 예산	50
[표 II-7] 2024년 R&D 분야 예산안	51
[표 II-8] 2023~202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54
[표 II-9] 중기 정부소비 전망	55
[표 II-10] 중기 정부투자 전망	57
[표 II-11] 국내소비지출	59
[표 II-12] 가계대출 증가 규모(전월대비)	60
[표 II-13]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60
[표 II-14] 가구당 월평균 실질근로소득	61
[표 II-15] 2024년 반도체 시장 전망	69
[표 II-16] 2023~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 SOC 예산	75
[표 II-17] 주요 기업 전기차 관련 설비투자 계획	77
[표 II-18] 생성형 AI 시장 매출액 전망	78
[표 II-19] 글로벌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 규모전망	80
[표 II-20] 소비자물가상승률	91
[표 II-21] 공공요금 인상 계획: 수도권	93
[표 II-22] 국제원자재가격 전망(중간값)	96

[제 I 부]

[그림 I -1]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3
[그림 I -2]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률 추이	3
[그림 I -3]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4
[그림 I -4] OECD 경기선행지수	4
[그림 I -5] 세계 제조업·서비스업 PMI	4
[그림 I -6] 선진국과 신흥국 제조업 PMI	4
[그림 I -7]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5
[그림 I -8]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5
[그림 I -9]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5
[그림 I -10]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추이	5
[그림 I -11]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6
[그림 I -12] 국제기구의 세계교역량 전망	6
[그림 I -13]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7
[그림 I -14]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통관수출 추이	7
[그림 I -15] 국제유가 추이	8
[그림 I -16]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8
[그림 I -17] 국제유가 전망	9
[그림 I -18]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9
[그림 I -19] OPEC 생산능력과 공급량 전망	9
[그림 I -20] 석유 소비 전망	9
[그림 I -21] 실질GDP 성장률 추이	15
[그림 I -22]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16
[그림 I -23]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16
[그림 I -24] 명목GDP 성장률 추이	17
[그림 I -25]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17
[그림 I -26]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18
[그림 I -27]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18



[그림 I -28]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18
[그림 I -29]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18
[그림 I -30]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19
[그림 I -31] 제조업 재고순환선	19
[그림 I -32]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20
[그림 I -33]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20
[그림 I -34]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21
[그림 I -35]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21
[그림 I -36]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21
[그림 I -37]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21
[그림 I -38] 경상수지 추이	23
[그림 I -39]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23
[그림 I -40]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추이	24
[그림 I -41]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24
[그림 I -42] 출입국자 수 추이	24
[그림 I -43] 취업자 수 증감	25
[그림 I -44]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25
[그림 I -4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26
[그림 I -46]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26
[그림 I -47]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26
[그림 I -48] 세입·세출 및 재정수지 추이	27
[그림 I -49] 총지출 집행률(누적) 추이	27
[그림 I -50] 총산출 집행액과 정부소비	28
[그림 I -51] 투자지출 집행액과 정부투자	28
[그림 I -52] 지출용도별 예산증감액	28
[그림 I -53] 중앙과 지방의 항목별 예산증감액	28

[제 II 부]

[그림 II-1] 2024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36
[그림 II-2] [총수출 비교] - 5년	37
[그림 II-3]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 5년	37
[그림 II-4]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39
[그림 II-5]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41
[그림 II-6]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41
[그림 II-7] 실질GDP 지출부문별 증기 전망(5년단위 평균)	42
[그림 II-8]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44
[그림 II-9] 2024년 총지출과 의무지출 증가율	46
[그림 II-10]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율 추이	47
[그림 II-11]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 추이	47
[그림 II-12]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이	48
[그림 II-13] 2024년 총지출과 재량지출 증가율	49
[그림 II-14] 통합재정과 국민계정의 정부지출	52
[그림 II-15] 증기 정부소비 전망	53
[그림 II-16] '22년과 '23년 증기 재정지출계획 비교	54
[그림 II-17] '22년과 '23년 증기 재정지출계획의 의무지출 비교	55
[그림 II-18] '22년과 '23년 증기 재정지출계획의 재량지출 비교	55
[그림 II-19] 증기 명목정부소비 예측치와 신뢰구간	56
[그림 II-20]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예측치와 신뢰구간	56
[그림 II-21] 증기 정부투자 전망	57
[그림 II-22] 증기 명목정부투자 예측치와 신뢰구간	58
[그림 II-23]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예측치와 신뢰구간	58
[그림 II-24] 가구 흑자율	61
[그림 II-25] 소비자심리지수	62
[그림 II-26]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62
[그림 II-27] 증기 민간소비 전망	63



[그림 II-28]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64
[그림 II-29]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64
[그림 II-30]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64
[그림 II-31] 민간소비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65
[그림 II-32] 중기 민간소비 예측치	65
[그림 II-33]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67
[그림 II-34] 건설기성액 추이	67
[그림 II-35] 건설수주액 추이	68
[그림 II-36] 건축허가면적 추이	68
[그림 II-37] 미분양 주택 추이	68
[그림 II-38] 건설자재 및 건설업 임금 추이	68
[그림 II-39] 설비투자 추이	69
[그림 II-40] 반도체 생산지수 및 수출액	70
[그림 II-41] 반도체 설비투자액 비중	70
[그림 II-42] 제조업 설비투자 압력	70
[그림 II-43]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70
[그림 II-44] GDP 연구개발 및 제조업 영업이익	72
[그림 II-45] AI 시장 규모 전망	72
[그림 II-46] 정부 R&D 예산 추이	73
[그림 II-47] 중기 건설투자 전망	74
[그림 II-48] 건설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76
[그림 II-49] 중기 건설투자 예측치	76
[그림 II-50] 중기 설비투자 전망	77
[그림 II-51] 설비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78
[그림 II-52] 중기 설비투자 예측치	79
[그림 II-53]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80
[그림 II-54]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81
[그림 II-55]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예측치	81



[그림 II-56] 수출전망	83
[그림 II-57] 수출물량지수	83
[그림 II-58] 수입전망	84
[그림 II-59]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추이	84
[그림 II-60] 반도체 수출 하강속도 비교	84
[그림 II-61] 유형별 수입증가율	84
[그림 II-62]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수입	85
[그림 II-63] 해외직접투자 자산의 국가별 비중	85
[그림 II-64] 중기 총수출 및 총수입 전망	86
[그림 II-65] 대외거래부문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87
[그림 II-66] 중기 총수출 예측치	87
[그림 II-67] 중기 총수입 예측치	87
[그림 II-68]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	92
[그림 II-69] OPEC 원유생산량	92
[그림 II-70] 경기선행지수	94
[그림 II-71] 국제원자재 가격	94
[그림 II-72]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95
[그림 II-73] GDP 갭	96
[그림 II-74] 기준금리인상 event	96
[그림 II-75] 소비자물가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97
[그림 II-76] 중기 소비자물가 예측치	97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부문)

I 동향

제1장 세계 경제

제2장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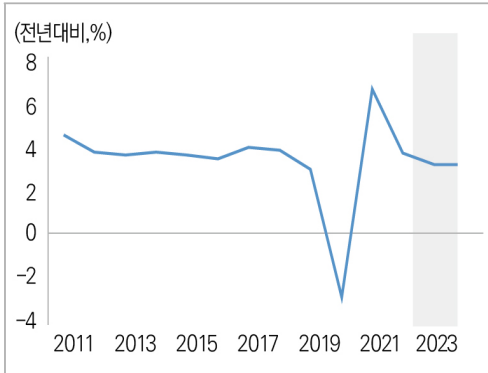
세계 경제

제1절 경제성장률 및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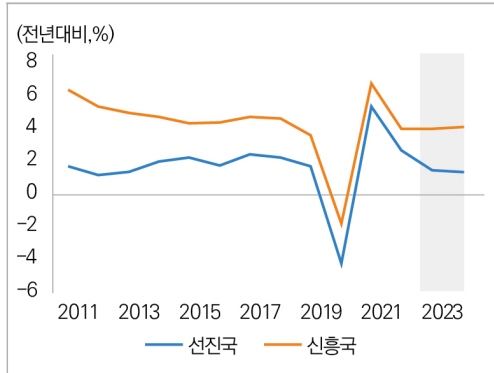
- 2023년 세계 경제는 생산과 교역량이 둔화
- 선진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통화 긴축 지속
-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은 안정세

2023년 세계 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통화 긴축과 금리 상승 지속, 미·중 갈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의 경제재개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그리고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된 데 기인한다.

[그림 I-1]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I-2]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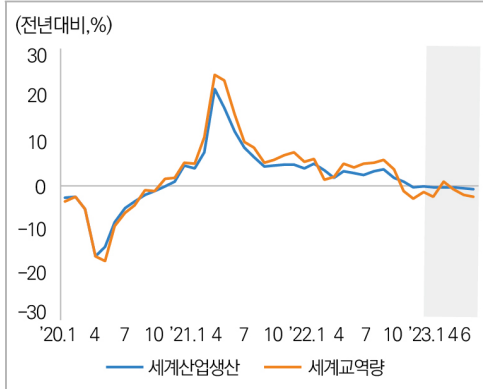


주: 2023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 7월)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6~9개월 선행)는 주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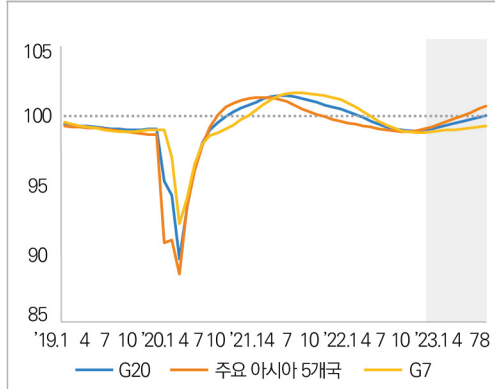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그림 I-3]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자료: C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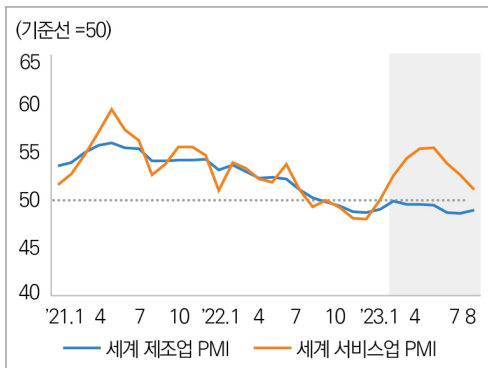
[그림 I-4] OECD 경기선행지수



주: 주요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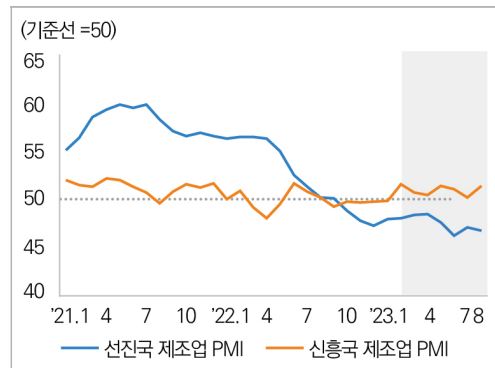
세계경기 선행지표인 세계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¹⁾는 제조업PMI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며 최근 8월까지 12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고 있다. 세계서비스업 PMI는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며 기준치 50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으나 6월 이후 하락 전환되며 서비스업의 성장세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림 I-5] 세계 제조업·서비스업 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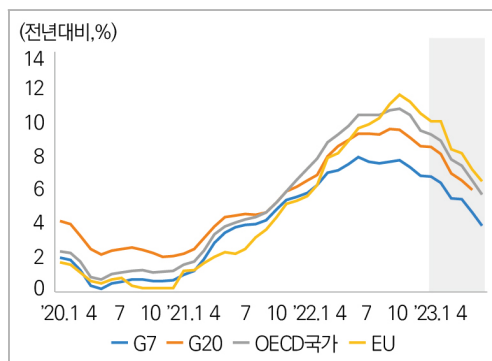
[그림 I-6] 선진국과 신흥국 제조업 PMI



1)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는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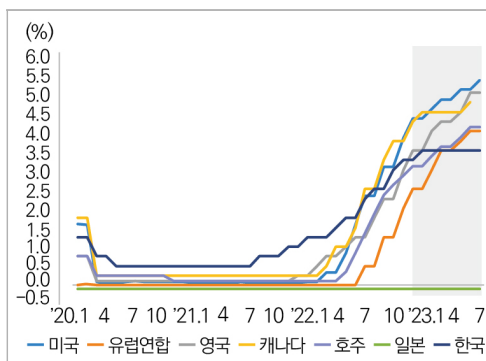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지속과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빠르게 진정되었다. 미 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올해에도 대차대조표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다. 주요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안정되는 가운데 견조한 고용여건과 서비스 소비 증가 등으로 근원물가상승률은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I-7]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OECD,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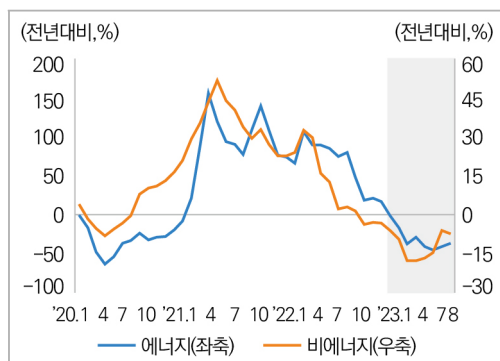
[그림 I-8]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CEIC,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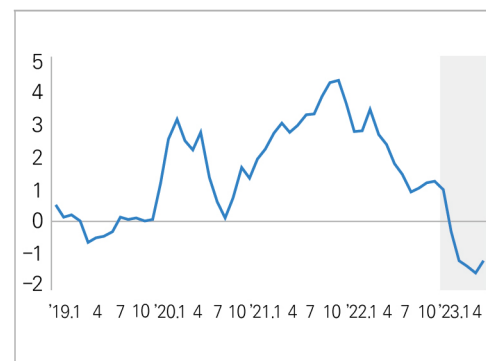
국제원자재가격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비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은 공급량 및 운임, 배송시간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빠르게 안정되었다.

[그림 I-9]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Price Data

[그림 I-10]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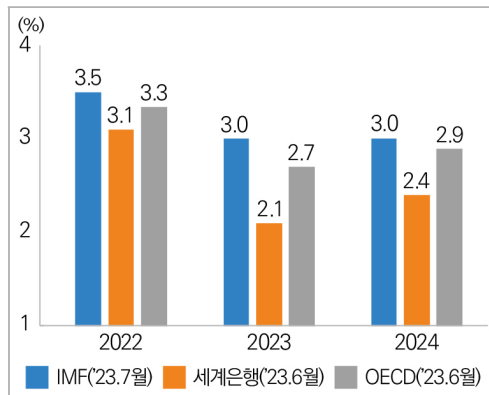
주: 단위는 평균으로부터의 표준편차임
 자료: 미 FRB New York,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8%, 세계교역량은 3.3% 증가 예상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선진국 2.8%, 신흥국 6.8%)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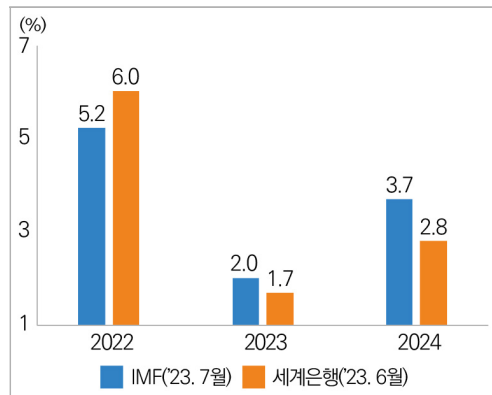
2024년 세계경제는 교역량 회복과 제조업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 2.6%에서 2024년 2.8%로 상승할 예정이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23년 1.9%에서 2024년 3.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11]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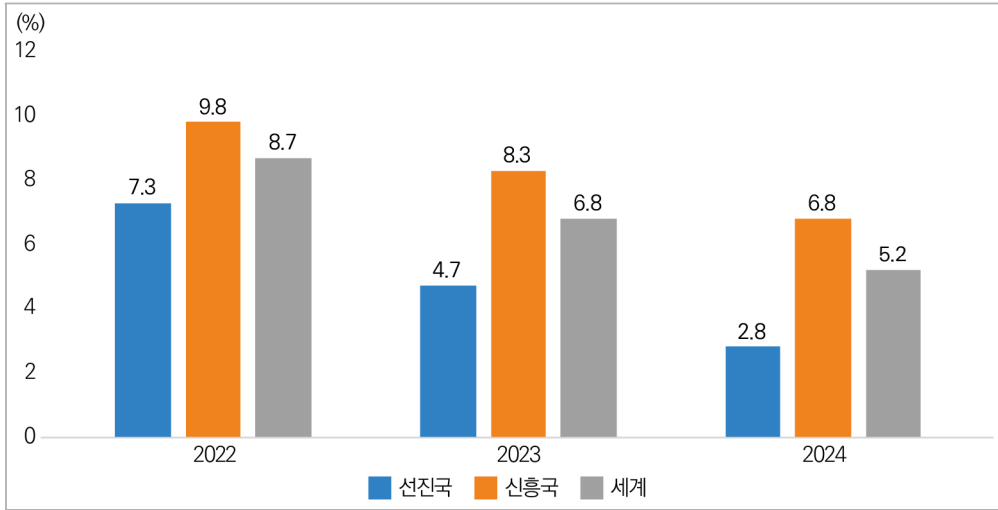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그림 I-12] 국제기구의 세계교역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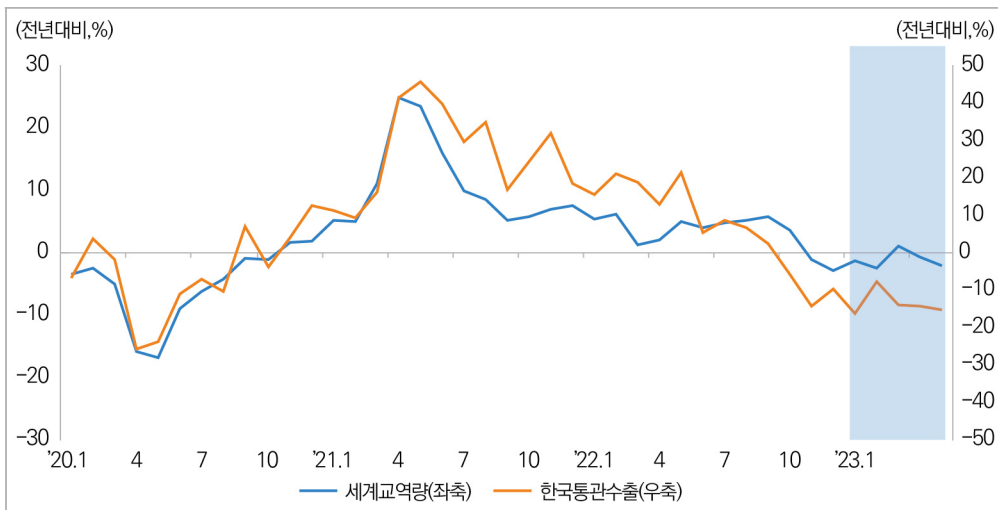
2024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올해 이어 하락 안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6.8%(선진국 4.7%, 신흥국 8.3%)에서 2024년 5.2%(선진국 2.8%, 신흥국 6.8%)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팽팽한 노동시장 여건과 근원 인플레이션의 견조한 오름세 지속, 중국의 대내외 수요 부진 등의 상하방 요인이 맞물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시기와 통화 긴축 기조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그림 I-13]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 7월)

[그림 I-14]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통관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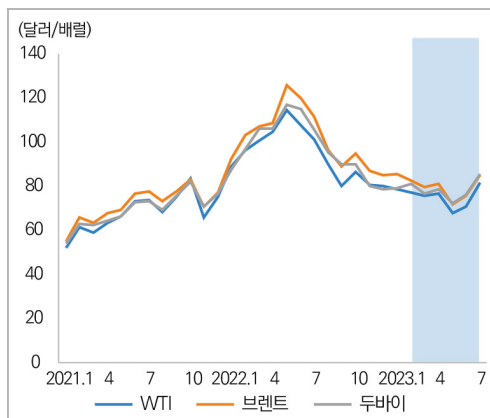
자료: 네덜란드 CPB, 한국무역협회DB

제3절 국제 원자재가격

- 2024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로 전제
- 곡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2024년 전년대비 1.7%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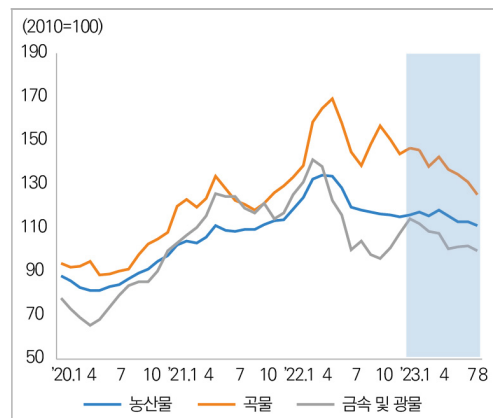
2024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75달러로 전제하였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72달러까지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원유 감산 연장 등의 영향으로 6월 이후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다. 곡물, 금속 등 기타원자재 가격은 2023년 대비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기타원자재 가격은 곡물, 금속 및 광물 가격이 연초 대비 10% 이상 하락 등 안정되고 있다.

[그림 I-15]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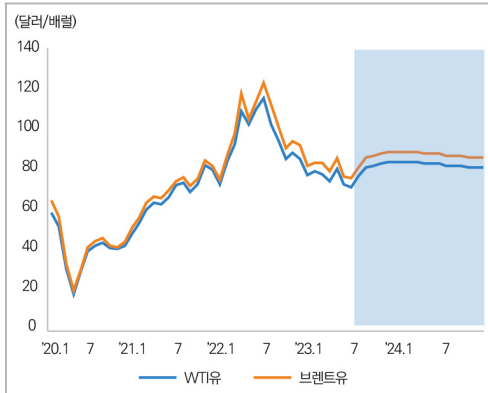
[그림 I-16]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Pink Sheet"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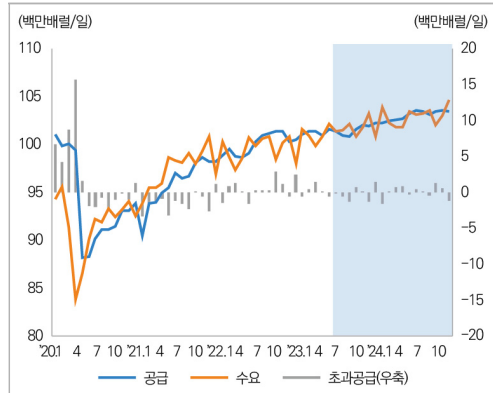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에서는 유가가 올 상반기 이후 2024년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IA(미 에너지 정보청, 6월 전망 기준)는 국제유가가 2024년 말 80달러(WTI 기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72달러와 79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I-17] 국제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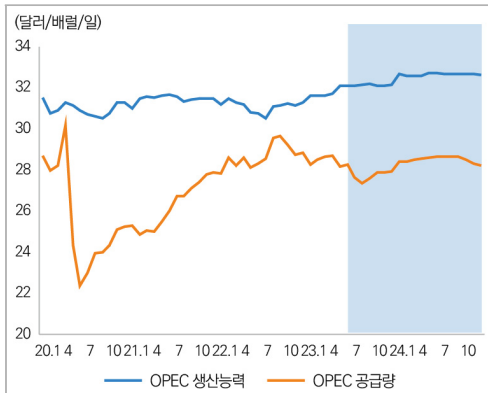
주: 음영부분은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2023. 6월 전망치
자료: EIA

[그림 I-18]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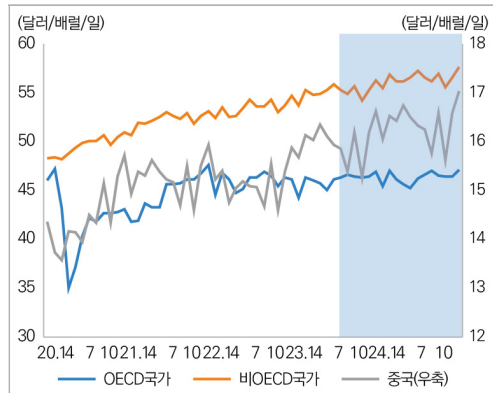
전세계 원유 수급여건은 충분한 공급여력 하에서 완만한 소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OPEC+의 원유 감산 연장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공급측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I-19] OPEC 생산능력과 공급량 전망



주: 음영부분은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2023. 6월 전망치
자료: EIA

[그림 I-20] 석유 소비 전망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금번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전제치]

(단위: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세계경제성장률 ¹⁾	3.3	2.6	2.8	3.1	3.2	3.1
- IMF(2023.7)	3.5	3.0	3.0	3.2	3.2	3.1
- World Bank(2023.6)	3.1	2.1	2.4	3.0	-	-
- OECD(2023.6)	3.3	2.7	2.9	-	-	-
세계교역량 증가율 ¹⁾	5.6	1.9	3.3	3.3	3.6	3.5
- IMF(2023.7)	5.2	2.0	3.7	3.6	3.6	3.5
- World Bank(2023.6)	6.0	1.7	2.8	3.0	-	-
국제유가 ²⁾	95.3	76.8	75.4	75.5	73.7	72.2
- EIA(2023.6, 달러/배럴)	102.1	79.5	83.5	-	-	-
- IMF(2023.7)	39.2	-20.7	-6.2	-2.8	-2.3	-2.1
- World Bank(2023.6)	41.8	-19.8	2.5	2.9	-	-
기타 원자재가격	10.6	-5.2	-1.7	0.5	1.4	1.5
금리(국고채 3년물) ³⁾	3.20	3.50	3.00	2.80	2.60	2.50

주: 1) 국제기구 전망치의 단순 평균

2) 두바이유 기준 (단, EIA는 브렌트유 기준)

3)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IA, OECD, IMF, World Bank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과 통화 긴축 종료 • 중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 • 미국 경제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 중국의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 가속화 •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경제전망의 상방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안정 및 통화 긴축 종료,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세 회복, 미국경제 연착륙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 가속화, 통화 긴축 지속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글로벌 교역량 위축 가능성 등이다. 중국 등 주요국의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은 하방 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중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회복 속도와 가파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주요한 하방 위험 요인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연초 재개방 효과로 소비 등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계획한 ‘5% 내외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구조 개혁 지연에 따른 중기적인 성장률 둔화 위험도 크다.

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고금리와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세계경기가 일시에 가파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원유 감산 연장 등 공급측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되었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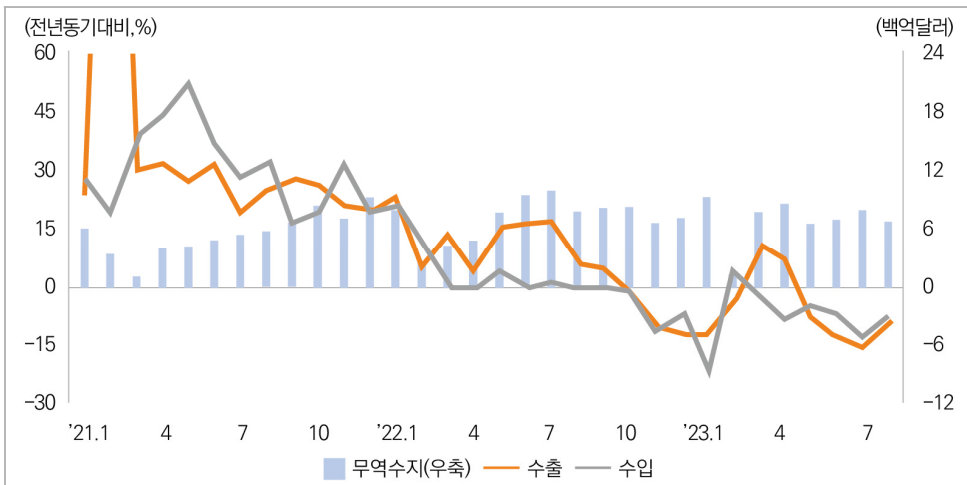
미·중 간 기술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희토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BOX 2]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중기 전망

□ 최근 동향

최근 중국 경제는 주요 실물지표 회복세 둔화, 수출 감소 지속 등으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수출은 최근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지난 7월에는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두 곳이 채무불이행 상태(디폴트)에 빠지면서 부동산 𡇗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 고정자본투자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GDP 중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은 약 25%로 부동산 시장 부진이 투자, 소비 등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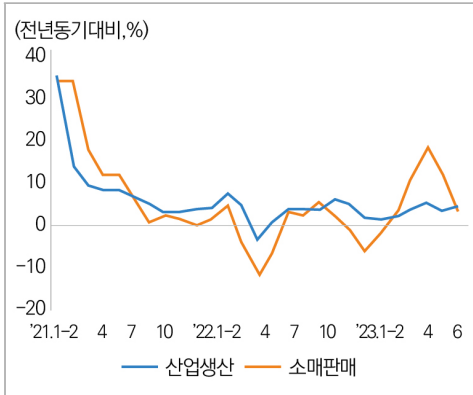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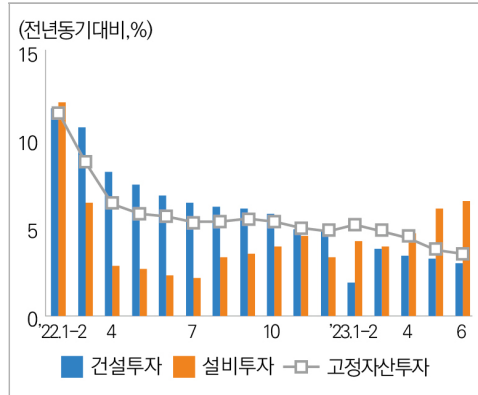
[BOX 2]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중기 전망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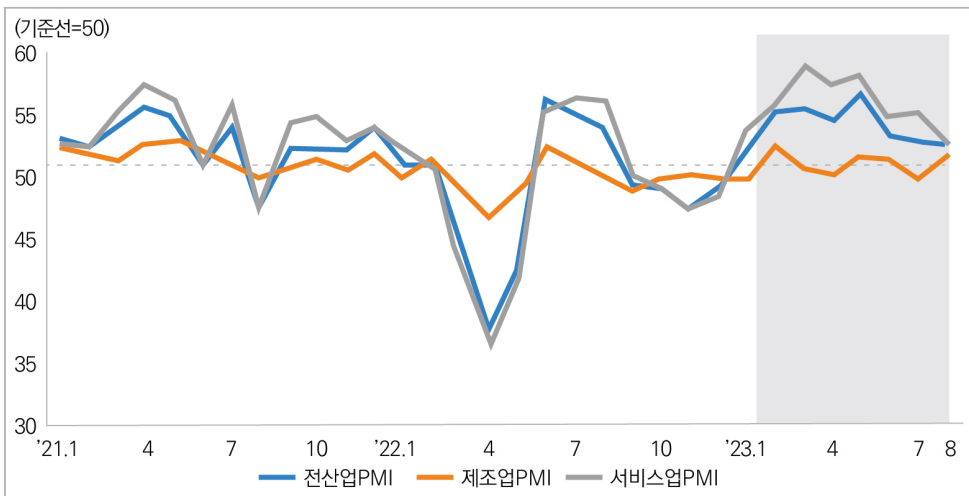
[중국 누적 고정자산투자]



자료: CEIC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 전산업 PMI는 제조업 PMI가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세를 주도했던 서비스업에서 관련 PMI가 2분기 들어 가파르게 하락 반전되면서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주: Caixin Composite, Manufacturing, Services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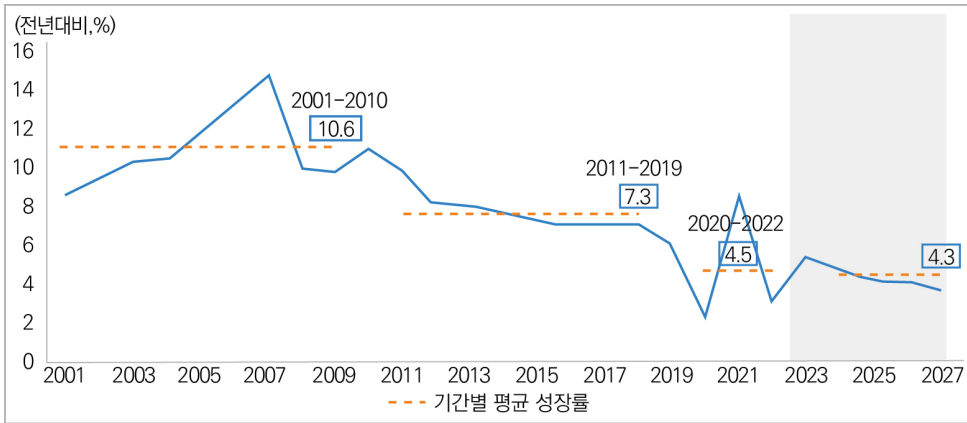
자료: CEIC

[BOX 2]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중기 전망

□ 중기 성장 전망

중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세 둔화 속도가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등에 미칠 영향은 크다. IMF는 최근 전망에서 향후 5년(2023~2027년) 기간 중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3%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 기간(2011~2019년)에 비해 연평균 3.0%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주: 2023~2027년은 IMF 전망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IMF WEO(2023. 7월)

세계은행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내수 중심의 성장 전환의 성공 여부에 따라 2030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1%p 내외의 둔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비관적(제한적 개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개혁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개혁(reforms)	2021-2030	2031-2040	2041-2050
전면적 개혁(comprehensive)	5.1	4.1	3.0
완만한 개혁(moderate reforms)	5.1	2.9	2.2
제한적 개혁(limited reforms)	4.0	1.7	2.3

자료: 「Innovative China」, World Bank(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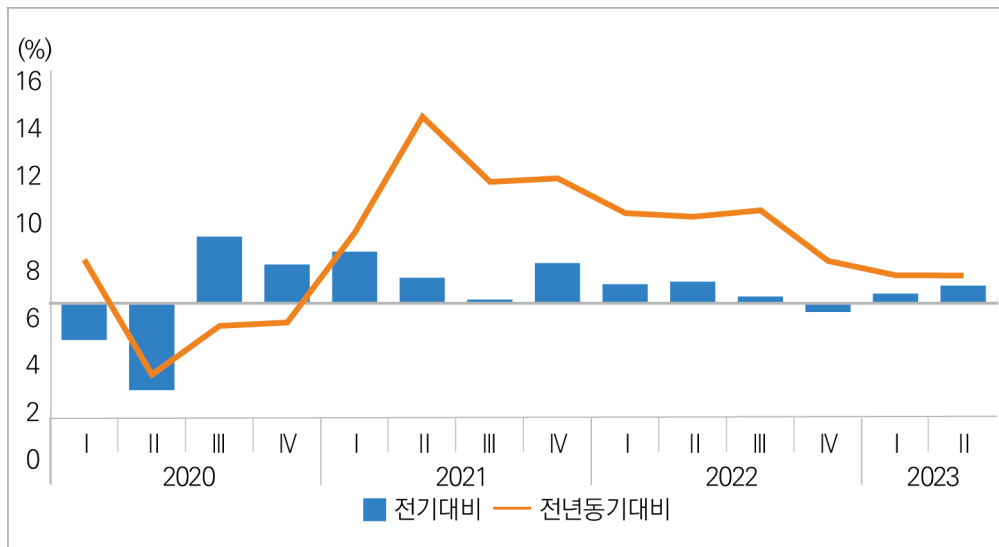
국내 경제

제1절 경제성장률

- 2023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약화
- 경기는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하향

국내경제는 2023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세계 교역 둔화의 여파로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성장세가 약해졌다. 실질GDP 성장률은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여 2022년 하반기의 2.3%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다.²⁾

[그림 I-21]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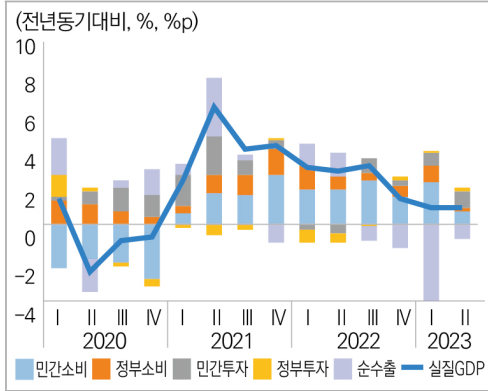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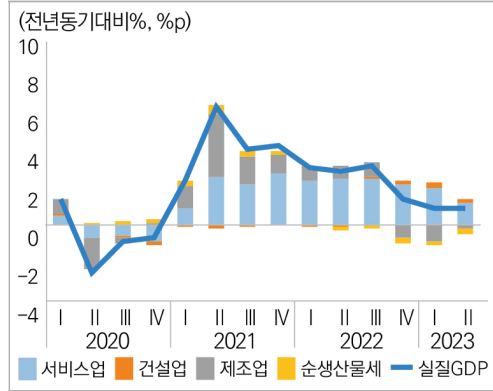
2) 계절변동 조정계열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금년 들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1분기 0.3% → 2분기 0.6%). 그러나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I-22]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23]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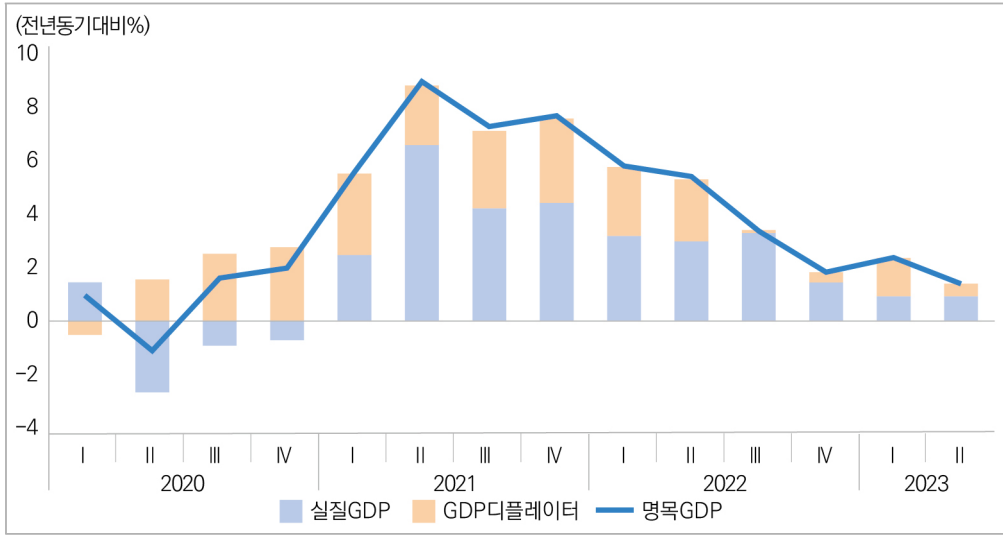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상반기 중 3.1% 증가하면서 내수 성장을 이끌었다(기여도 1.5%p). 민간투자는 세계개편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예상 밖의 호조(5.3%)를 보인 데 힘입어 3.1% 증가하였다.³⁾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도 각각 2.5%, 2.7% 증가하면서 성장에 보탬이 됐다.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세계 교역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0.9% 역성장하였다. 그러나 총수입(GDP물량 기준)은 같은 기간 중 오히려 늘어나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2.5%p에 이르렀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2023년 상반기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갔으나(기여도 1.6%p), 제조업은 수출 부진이 깊어지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기여도 -0.6%p). 한편, 2분기에는 총수출(GDP물량 기준)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며 제조업 부진도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되레 약해졌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 1.8%로 2022년의 3.9%(연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실질GDP 성장률이 1.7%p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다.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같은 기간 0.4%p 하락하였다.

3) IMF(7월 기준)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미국(2023년 1.8%→2024년 1.0%)을 중심으로 소폭 둔화(2023년 1.5%→2024년 1.4%)되지만 신흥국은 소폭 확대(2023년 4.0%→2024년 4.1%)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I-24]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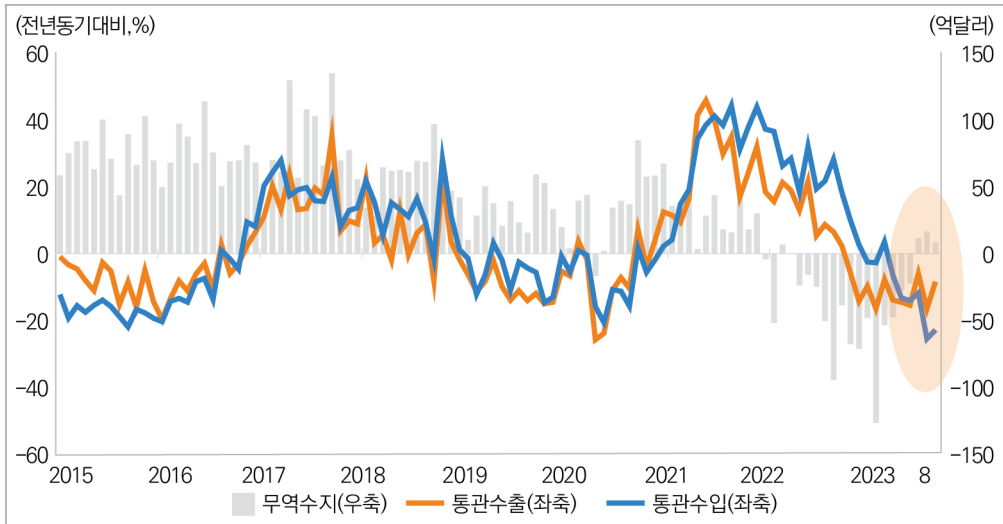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가. 경기국면 진단

국내경기는 2023년 상반기 중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업황이 크게 부진하며, 경기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최근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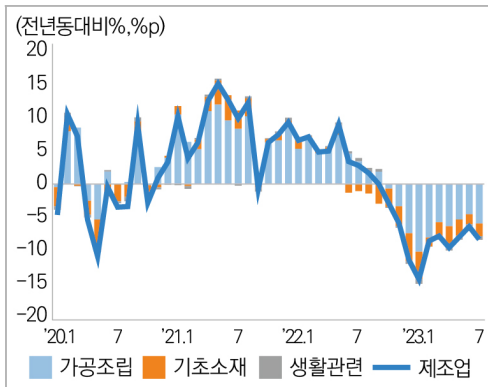
[그림 I-25]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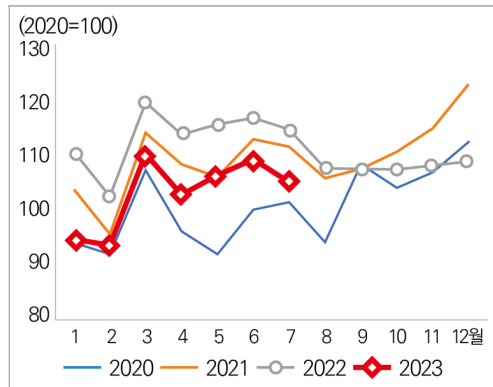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은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가공조립형 제조업⁴⁾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하다. 상반기 내내 증가율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 수준도 2021년 수준을 계속하여 밀돌고 있다.

[그림 I-26]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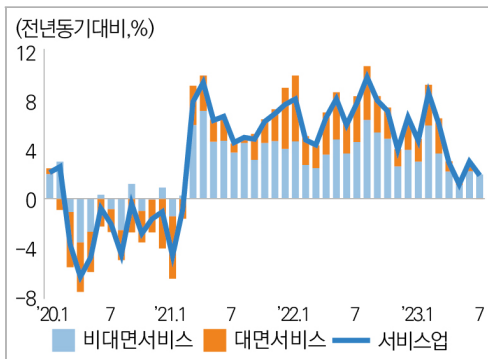
[그림 I-27]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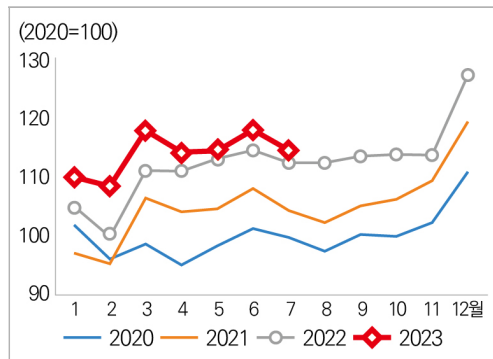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업⁵⁾ 모두 4월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1분기 6%대 → 2분기 2%대). 서비스업 생산 수준은 여전히 2022년을 웃돌고 있으나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림 I-28]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29]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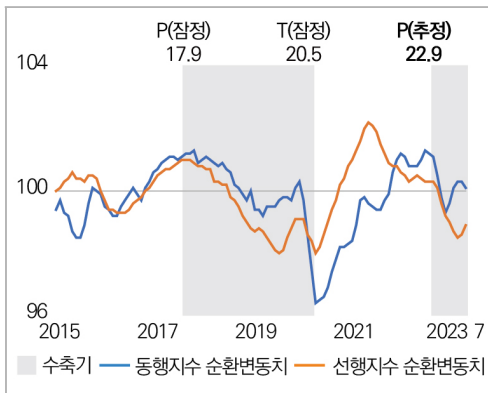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4) 제조업 생산지수를 산업형태별로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기초소재형(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목재, 펄프 등 제조업), 생활관련형(음식료품, 의복, 가죽, 가구 등 제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8%, 30.4%, 8.7%이다(2020년 기준).

5)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대면(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비대면(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사회 서비스,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7%, 67.3%이다(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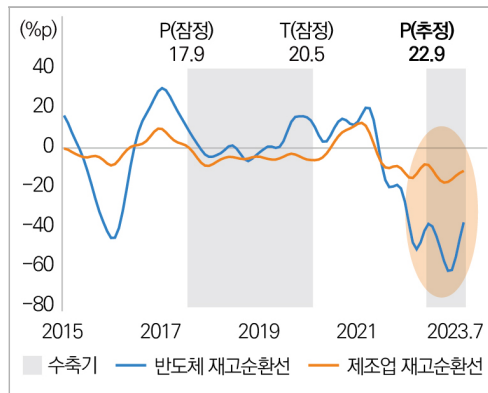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3년 상반기 중 소폭 반등하였으나 5월 이후 재차 하락하였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 이후 상승 전환하였다. 또 다른 경기예고지표인 제조업 재고순환선(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3월 이후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종합하면, 제조업 생산 부진과 서비스업 회복세 약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기예고지표가 반등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I-30]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31] 제조업 재고순환선



주: 1) 재고순환선 =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X-12에 의한 추세순환 요인 추정치 기준)
 2)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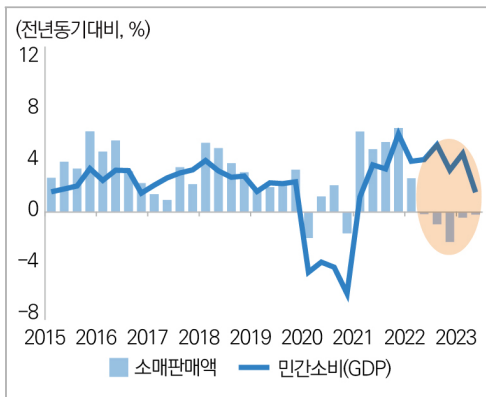
제2절 내수와 수출입

- 내수는 회복 흐름이 약화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
- 수입은 감소 폭이 빠르게 확대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들며 흑자 반전
-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 유지

가.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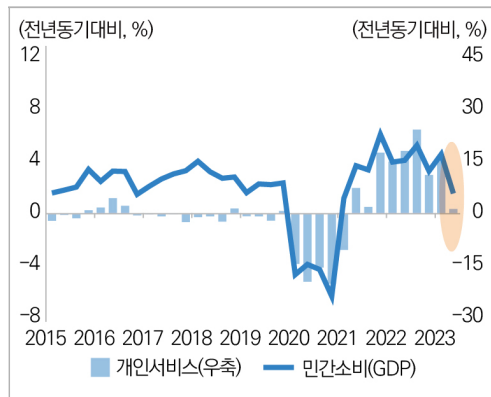
소비지표들은 최근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하였다(아래 왼쪽). 개인서비스⁶⁾는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하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증가율이 1.3%로 급락하였다(아래 오른쪽). 이는 앞으로 금리 등 소비제약 요인들의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⁷⁾ 민간소비는 형태별로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I-32]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I-33]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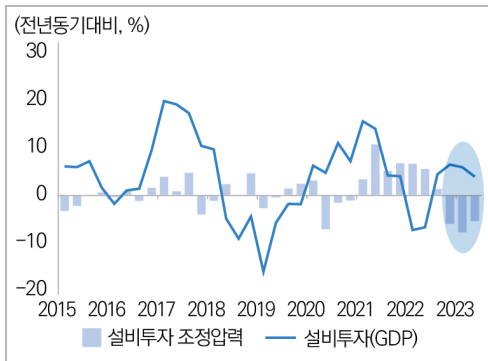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6)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등으로 구성하였다.

7) 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1년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2022.4월) 직후인 2022년 3분기에는 24.2%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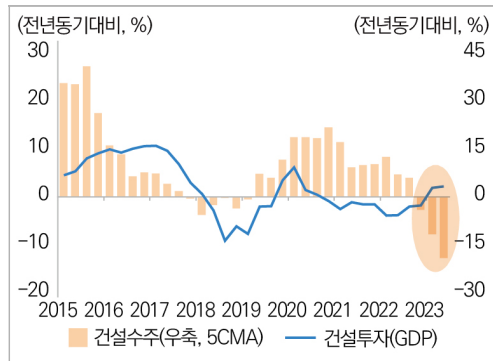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과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은 3분기 연속 감소하여 하반기 이후의 투자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두 지표의 2000년 이후 평균 선행시차는 각각 1분기와 5분기이다.

[그림 I-34]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I-35]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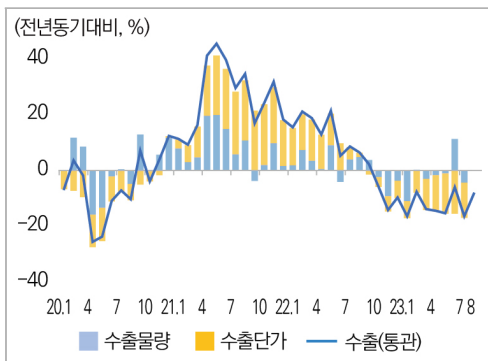
주: 건설수주액은 5분기 중심항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나. 수출입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큰 폭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분기 이후 증가율이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 하락하였으며 물량(실질금액)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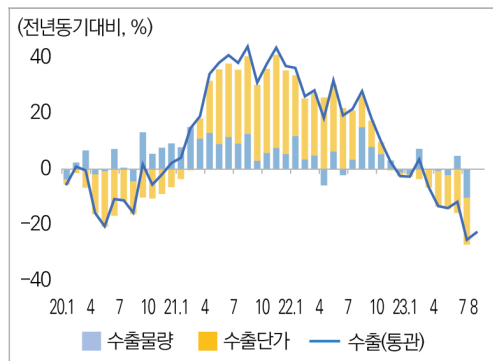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최근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7월에는 수입단가와 수입물량(실질금액)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하며 폭을 키웠다.

[그림 I-36]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I-37]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OX 3] 품목별·지역별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전년동기대비, 비중, %, 기여도 %p)

	품목명	2022		2023(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반도체	1.0	18.9	-34.9	14.5	-5.1
2	자동차	16.4	7.9	39.5	11.4	4.5
3	일반기계	2.0	7.5	2.6	8.6	0.2
4	석유제품	64.9	9.2	-25.4	8.0	-2.0
5	석유화학	-1.4	7.9	-22.1	7.5	-1.7
6	철강제품	5.7	5.6	-10.8	5.9	-0.6
7	자동차부품	2.4	3.4	-0.4	3.8	0.0
8	선박	-20.9	2.7	5.2	3.1	0.2
9	디스플레이	-1.1	3.1	-22.0	2.7	-0.6
10	무선통신기기	-10.4	2.5	-15.6	2.3	-0.4
11	바이오헬스	0.1	2.4	-25.5	2.1	-0.5
12	섬유	-4.0	1.8	-13.2	1.8	-0.2
13	이차전지	15.1	1.5	-0.5	1.6	0.0
14	가전	-7.4	1.2	-4.7	1.3	-0.1
15	컴퓨터	-4.7	2.3	-58.4	1.2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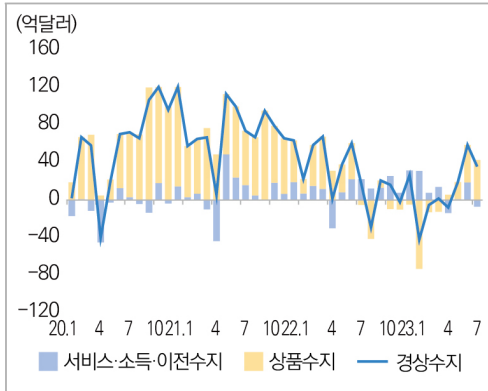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전년동기대비, 비중, %, 기여도 %p)

		2022		2023(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중국	-4.4	22.8	-25.2	19.7	-5.0
2	미국	14.5	16.1	-0.6	17.9	-0.1
3	아세안	14.8	18.3	-19.7	17.1	-3.4
4	EU(27)	7.0	10.0	3.4	11.5	0.4
5	베트남	7.5	8.9	-18.3	8.3	-1.5
6	일본	1.8	4.5	-9.8	4.6	-0.5
7	중남미	3.0	3.9	-13.3	4.0	-0.5
8	중동	12.3	2.6	11.5	3.1	0.4
9	인도	20.9	2.8	-10.2	2.8	-0.3
10	CIS	-17.8	1.6	31.8	2.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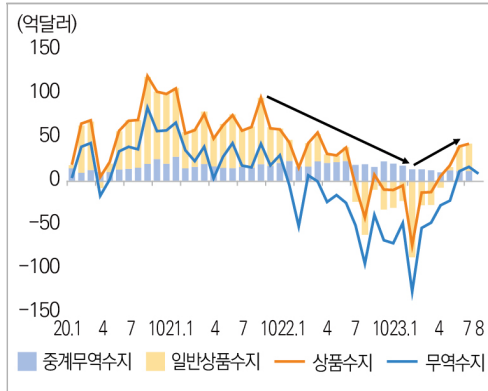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I-38]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39]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주: 무역수지(수출입차)는 통관 기준, 상품수지 등은 국제수지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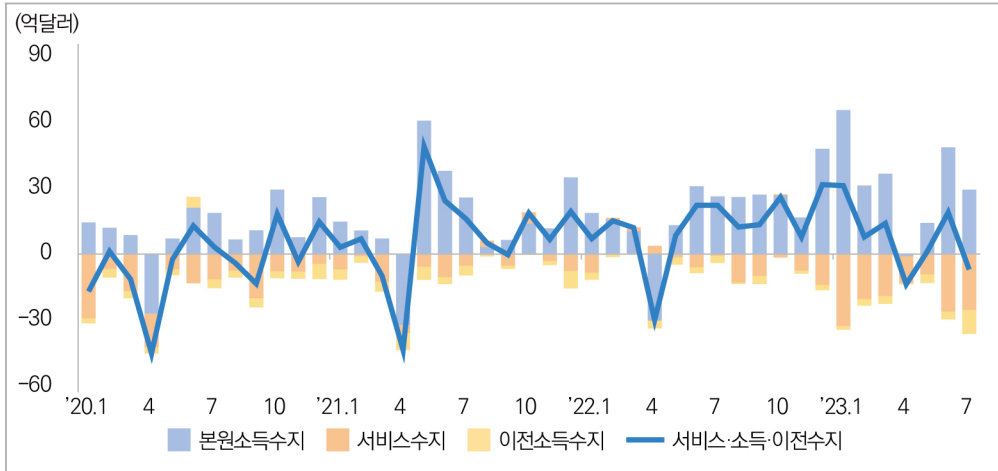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올해 1월 126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개선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3개월 연속 10억 달러 내외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리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었으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여전히 크게 부진하다(1~8월 중 25%와 20% 감소).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는 상품수지와 함께 개선되었다. 상품수지는 올해 1월 73억 달러 적자로 출발하였으나 4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후 흑자 폭도 확대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중계무역수지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반상품수지도 5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8월에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⁸⁾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1~7월 중 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010년 이후 투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개편의 영향으로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흑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올해 들어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하면서 운송수지가 소폭 적자로 돌아선 데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8) 상품수지와 밀접한 무역수지의 흑자 폭이 8월 줄어들었다(7월 16.5억 달러 → 8월 8.7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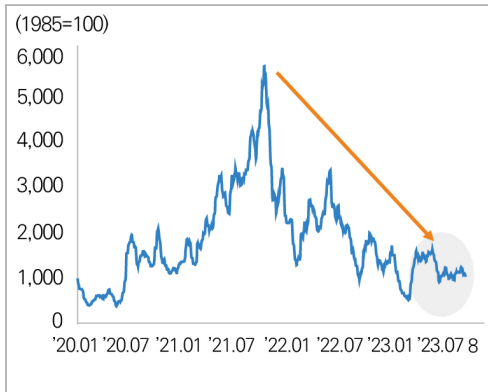
[그림 I-40]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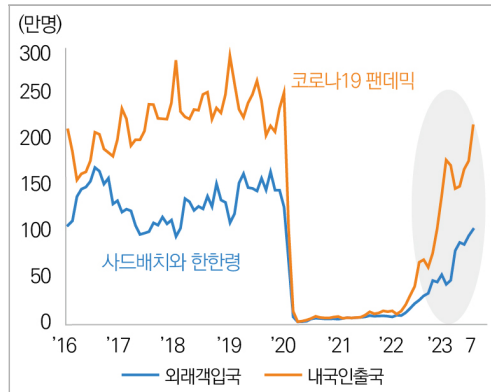
서비스수지는 당분간 적자 폭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해외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7월의 해외여행객 수는 215만명으로 예년 수준인 233만명(2017~2019년 월평균)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8월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을 단체여행 허용국가에 포함하였다.⁹⁾

[그림 I-41]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I-42] 출입국자 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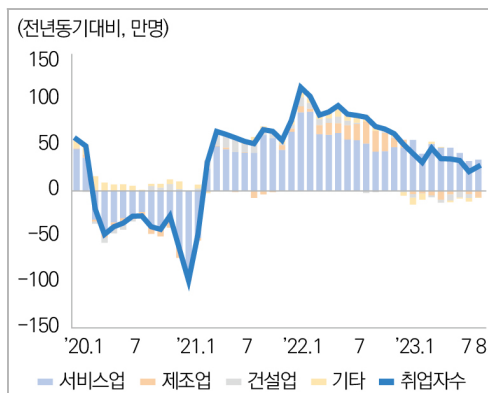
9) 2023년 7월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3만명으로 예년 수준(128만명)을 많이 회복하였으나(회복률 80%), 중국인 관광객 수는 22만명으로 예년 수준(42만명)의 절반(54%)에 머물렀다.

제3절 고용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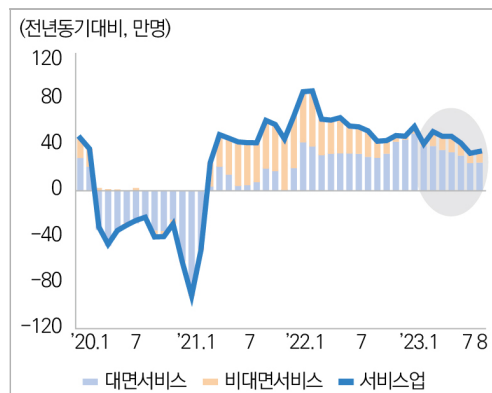
- 고용은 회복 흐름이 계속 약화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하향 안정 움직임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하향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분기 40만 명 선이었으나 2분기 30만 명 선으로 줄고 이어 7~8월에는 20만 명 선까지 낮아졌다. 산업별로 보면 그동안 고용 회복을 주도하던 대면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고 있으며 비대면서비스업도 흐름이 약해졌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그림 I-43]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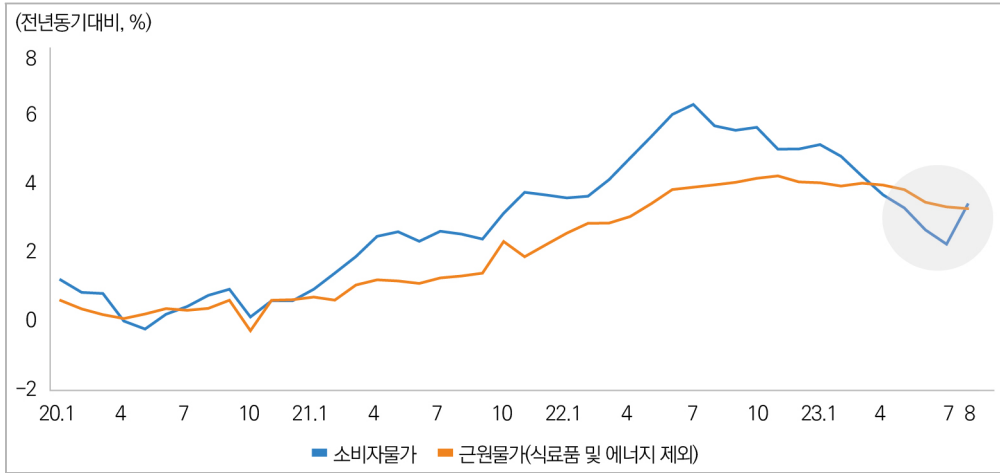


[그림 I-44]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오름세가 진정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7월 6.3%를 정점으로 2023년 5월과 6월에는 2%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8월에는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3.4%로 급반등하였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8월에도 7월과 같은 3.3%를 유지하여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8월 이후 환율과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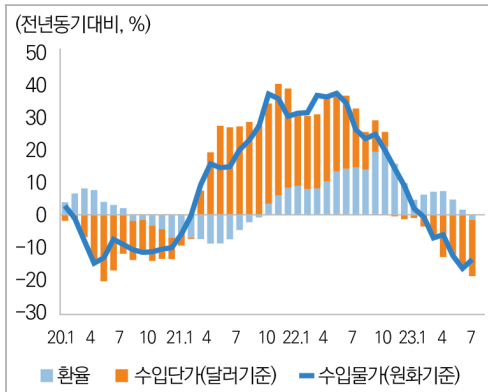
[그림 I-4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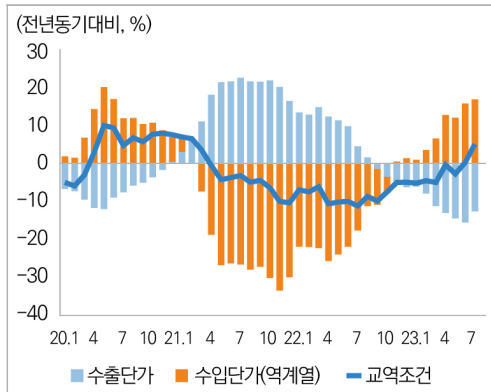
수입물가를 변동요인별로 살펴보면, 2023년 들어 수입단가가 떨어지고 환율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림 I-46]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47]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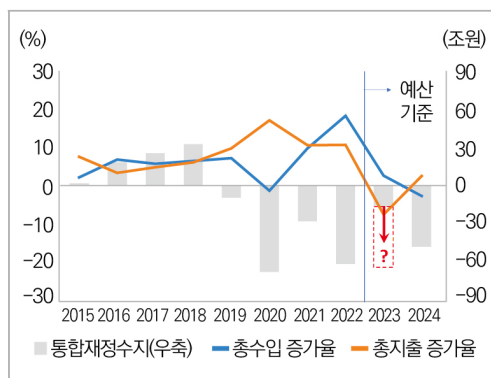
제4절 정부 재정지출

- 정부 세입은 법인세 등 부진으로 대규모 결손이 예상
- 정부 세출도 영향이 불가피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3.4조원 줄어들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수감소가 두드러져 올해 1~7월 중 전년 대비 각각 17.1조, 12.7조, 6.1조원 감소하였다. 7월까지의 진도율(실제 세입액/세입예산)도 54.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64.8%를 10%p 정도 밑돌고 있다. 연말까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59조 원 내외의 대규모 세입 결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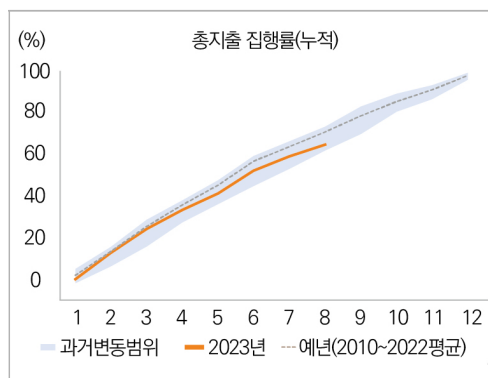
정부는 중앙의 경우 불용, 세계잉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을 활용하여 부족분을 메우고(각각 8조, 4조, 24조원), 지방은 여유재원¹¹⁾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세입 결손이 자칫 지방정부의 세출 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축소로 이어질까 하는 점이다. 총지출 집행률(실제 지출액/세출예산)이 8월까지 67.8%로 예년보다 5.4%p 낮은데, 부문별로는 지방정부 경상이전 집행률이 가장 부진하기 때문이다(68.3%, 예년 대비 -7.2%p).

[그림 I-48] 세입·세출 및 재정수지 추이



주: 2023년 이후 값은 예산기준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그림 I-49] 총지출 집행률(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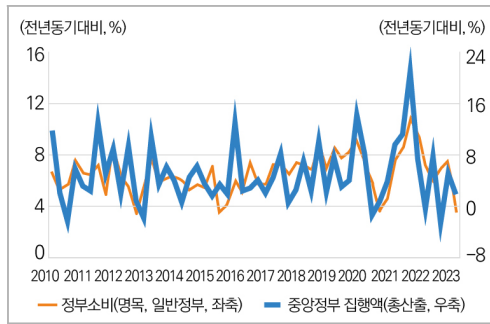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10) 세수 부족분 59조원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몫은 각각 36조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정도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11) 재정안정화기금(23조원) 등(「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9.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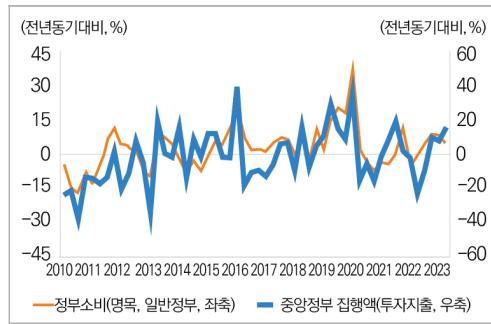
정부 재정지출은 정부소비 및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관계는 분기별 총산출 및 투자지출 집행액¹²⁾과 국민계정 상 명목 정부소비 및 투자 간 관계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¹³⁾

[그림 I-50] 총산출 집행액과 정부소비



주: dBrain을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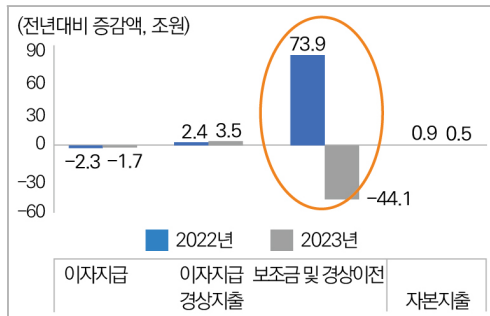
[그림 I-51] 투자지출 집행액과 정부투자



주: dBrain을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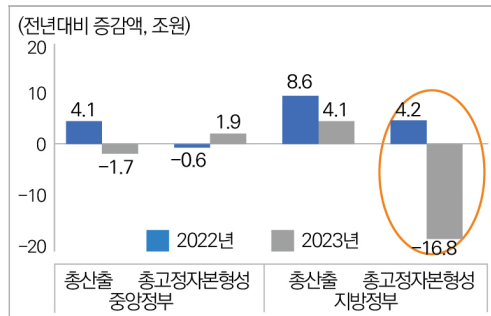
한편 지방정부는 2023년도에 투자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17조원 줄였다. 이는 보조금 및 경상이전 예산이 크게 축소된 때문이다.¹⁴⁾ 더욱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을 중심으로 동 예산을 2023년 대비 10조원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¹⁵⁾.

[그림 I-52] 지출용도별 예산증감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그림 I-53] 중앙과 지방의 항목별 예산증감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 12) 연도별 세출 예산자료에 월별 집행을 자료를 곱하여 월별 집행액을 추산한 다음 분기로 전환하였다.
- 13)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와 투자는 예·결산 자료와 다른 기준으로 편제되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dBrain에 수록된 예·결산 자료를 「2021 회계연도 한국 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2023.4.10.일)에 수록된 2001 정부재정통계 기준(2001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IMF)을 따라 각 계정의 구성과 범위를 국민계정에 맞춘 후 둘을 비교하였다. 지출세목별 집행을 자료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환하였다.
- 14) 동 예산 중 지방정부 경상이전 관련 예산은 2022년 전년대비 33.3조원 증가에서 2023년 1.4조원 감소로 급락하였다.
- 15) 정부는 용자재원을 10조원 늘려 이를 보완할 계획이나 용자는 이자부담이 따른다.

[BOX 4] 예·결산 자료의 정부부문 GDP 전망 활용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예·결산 자료는 국민계정 등과 자료 구조가 달라 그대로는 재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에 사용하기 어렵다. 예컨대, 지출 세목별 자료는 16대 재정분야를 따라 구분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재정 전체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결산 자료를 정부부문 GDP 전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석체계를 마련하였다(아래 그림). 아울러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지출 세목별 실적자료에 이 분석체계를 적용하면 정부부문 GDP의 구성지표별 재정 집행실적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쪽에 제시된 도표는 이 같은 절차로 추정된 항목별 집행률이다.

[예·결산 자료와 국민계정 및 통합재정수지와의 관계]

예산/결산 원자료

세입		세출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구분	회계구분	회계구분	회계구분
소관	소관	소관	소관
회계	회계	회계	회계
계정	계정	계정	계정
수입관	수입관	분야	분야
세입금액	세입금액	부문	부문
(수입항/목별)	(수입항/목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출금액	세출금액
		(지출목/세목별)	(지출목/세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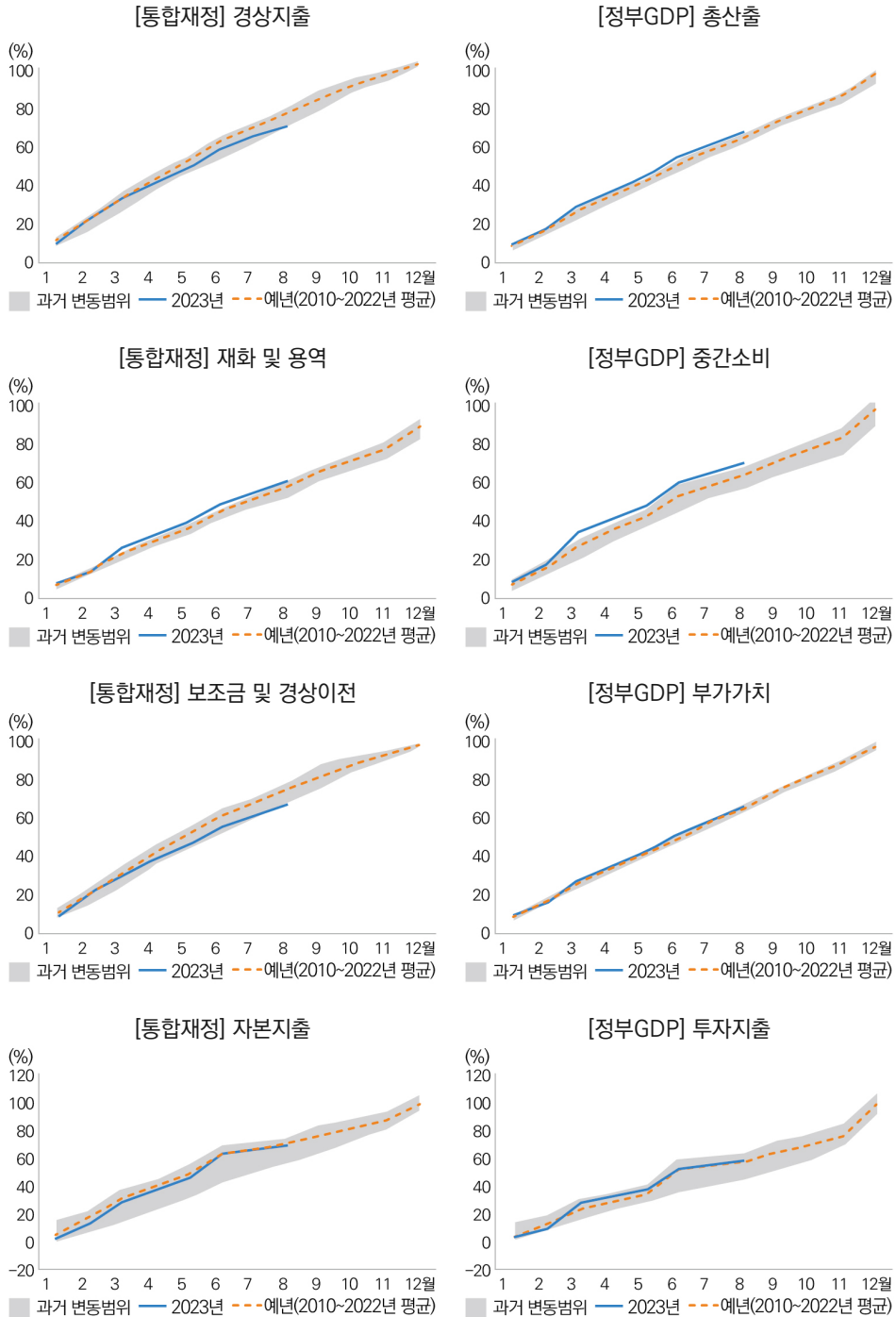
국민계정 (일반정부)

	일반정부 (2020년, 조원)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최종소비지출	350	100	165	85
총산출	274	114	154	6
부가가치	199	76	120	4
(피용자보수)	139	55	81	3
(기타)	60	21	39	0
중간소비	75	39	34	2
상품및비상품판매(공제)	31	15	15	1
사회보장현물수혜	108	1	26	81
총고정자본형성	100	42	58	0
자본지출 총액	159	62	96	1
고정자본소모(공제)	59	20	39	0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2020년, 조원)	
	세입	총수입
총수입		447
경상수입		444
조세수입		360
세외수입		84
자본수입		3
총지출및순용자		518
총지출		490
경상지출		455
자본지출		35
순용자		28
수지		통합재정수지 -71

[중앙정부 재정지출 및 중앙정부 GDP 지출항목별 집행률]



제5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자원 마련을 통한 세수 부족 해소 • 물가 오름세 하향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 물가 불안 재현과 통화 긴축 강화

경제전망의 상방 요인으로는 대체 자원 마련을 통한 세수 부족 해소, 물가 오름세 하향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안 재현과 통화 긴축 강화 등이 있다. 최근 동향을 보면 법인세 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중 크게 낮아지는 등 전망의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치는 모습이다.

먼저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7월까지 법인세를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43.4조원(누계기준)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4%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도 7.1%에서 올해에는 3.6%로 낮아졌다.¹⁶⁾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8월 현재 68.3%로 예년평균 76.6%을 크게 밀돌고 있다.¹⁷⁾

또한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으며, 환율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가의 하향 안정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의미하여 통화 긴축기조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강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¹⁸⁾

16) 한국은행의 “2023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2023.9.12일)를 참조하였다.

17) 국회예산정책처가 dBrain에 수록된 예·결산자료와 정부의 월별 지출 세목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정한 결과이다.

18) 한국은행은 9.14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수준(2%)에 안정적으로 수렴할지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II 2024년 및 중기 전망

제1장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경제성장률

제3장 정부소비 및 투자

제4장 민간소비

제5장 민간투자

제6장 대외거래

제7장 소비자물가

[부록: NABO 10년 전망]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1. 2024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은 2.0%로 지난 전망(2022. 10월)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하였다. 지출 부문별로 보면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하향 조정되어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이었으나 총수출이 상향 조정되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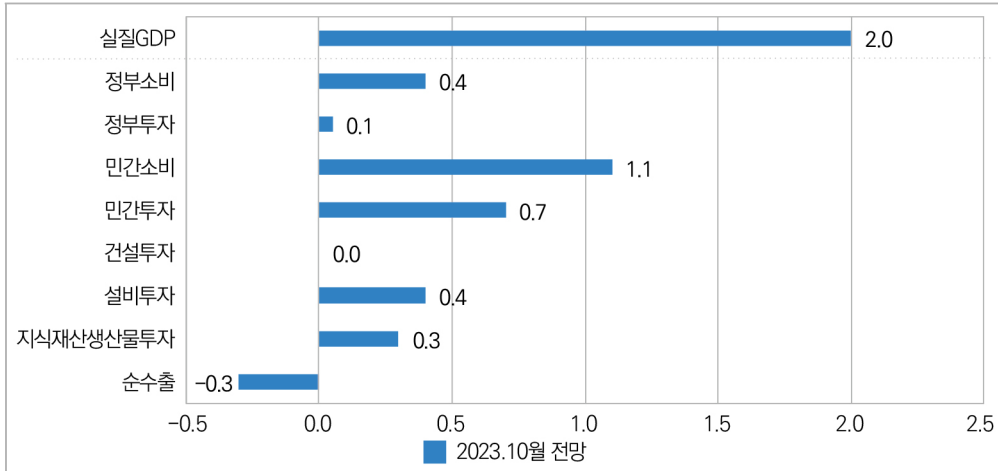
정부소비는 2024년의 총지출이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축소 편성된 것을 반영하여 4.0%에서 2.2%로 큰 폭 하향 조정하였다. 명목정부소비 전망의 전제가 되는 2024년 총지출이 큰 폭으로 축소 편성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상의 총지출은 656.9조원으로 지난해 중기 재정지출 계획보다 -12.8조원(-1.9%) 축소 편성되었다. 특히 정부소비와 관계가 깊은 의무지출 규모는 348.2조원으로 -13.6조원(-3.8%) 축소 편성되었다.

민간소비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대, 실질임금 하락 등의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양호한 소비 여력과 소비심리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부문 선행지표(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의 부진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3.6%) 대비 3.4%p 하향조정하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대외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악화된 자금조달여건 및 예상보다 낮은 기업 영업이익 전망을 반영하여 4.7%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

총수출은 세계교역량증가율과 주요수출품목의 회복속도를 고려하여 5.2%에서 7.0%로 상향 조정했으며, 총수입은 수출회복 속도와 둔화된 내수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1] 2024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I-1] 2024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단위: %, %p)

	22.10월 전망	23.10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2.3	2.0	-0.3
정부소비	4.0	2.2	-1.8
정부투자	-	1.0	-
민간소비	2.2	2.2	0.0
민간투자	-	2.6	-
건설투자	3.6	0.2	-3.4
설비투자	4.5	4.5	0.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7	4.4	-0.3
순수출(총수출-총수입)	-2.3	-0.5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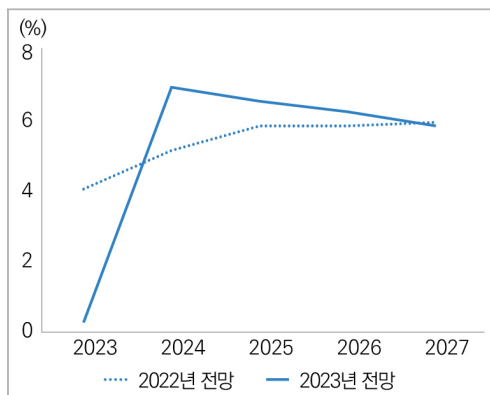
2. 중기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실질GDP 성장률의 2023년 중기 전망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2.2%로 2022년 중기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별로 보면 2023년과 2024년 성장률이 1.1%, 2.0%로 각각 1.0%p, 0.3%p 하향 조정되고, 2025~2027년 중에는 0.7%p, 0.5%p, 0.2%p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소비가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기여도가 하락하였으나, 민간소비 상향 조정(연평균 0.1%p)과 총수입의 하향 조정

(연평균 -2.0%p)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2022년과 같은 연평균 성장률 수준이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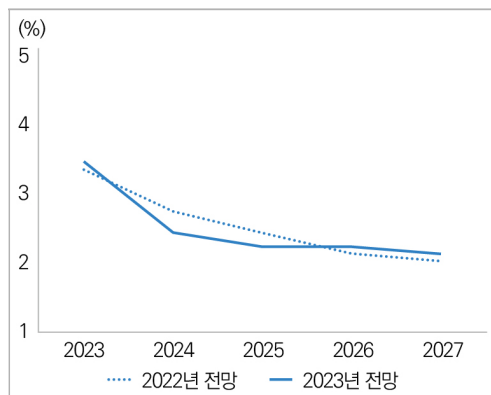
정부소비의 증기전망은 전년과 비교하여 연평균 3.9%에서 2.2%로 1.7%p 하향 조정되었다. 명목정부소비를 결정하는 정부의 2023년 증기 재정지출계획상 재정 지출이 재정 건전화 기조가 강화되며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 편성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2023년 증기 재정지출 계획상의 총지출은 2022년 계획대비 2024~2026년 기간 중 2024년 12.8조원(1.9%), 2025년 14.8조원(2.1%), 2026년 17.5조원(2.4%)으로 연평균 15조원(2.1%) 축소 편성되었다. 특히 증기적으로 정부소비의 추세를 결정하는 의무지출은 2022년 계획 대비 2024년 13.6조원(3.8%), 2025년 9.2조원(2.4%), 2026년 11.1조원(2.7%), 연평균 11.3조원(3.0%) 축소 편성되었다.

[그림 II-2] [총수출 비교] - 5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3]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 5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출의 증기전망은 5.2%로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하향조정했다. 연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예상보다 낮아진 세계수출교역 증가율(4.1%→1.9%)과 중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리오프닝 효과를 반영하여 0.3%로 3.8%p 하향 조정했다. 2024~2027년은 반도체 등 주력수출산업의 회복정도를 반영하여 5.7%에서 6.4%로 0.7%p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의 증기전망은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하향조정되었다. 이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기준금리 인상 등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

경제성장률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예상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2.6	0.9	1.3	1.1	2.0

주: 음영은 전망치. 이하 원고에서 동일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과 통화 긴축 종료	• 중국의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 가속화
• 중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	•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 미국 경제 연착륙	•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2024년 우리 경제는 2.0% 성장하여 2023년의 1.1%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겠지만 정부 재정운영 여건 상 어려움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 폭이 제한되겠다. 2024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량이 2023년의 둔화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정부소비는 2024년 2.2% 증가하여 2023년(1.9%)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투자는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2024년 1.0% 증가하여 2023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년(0.9%)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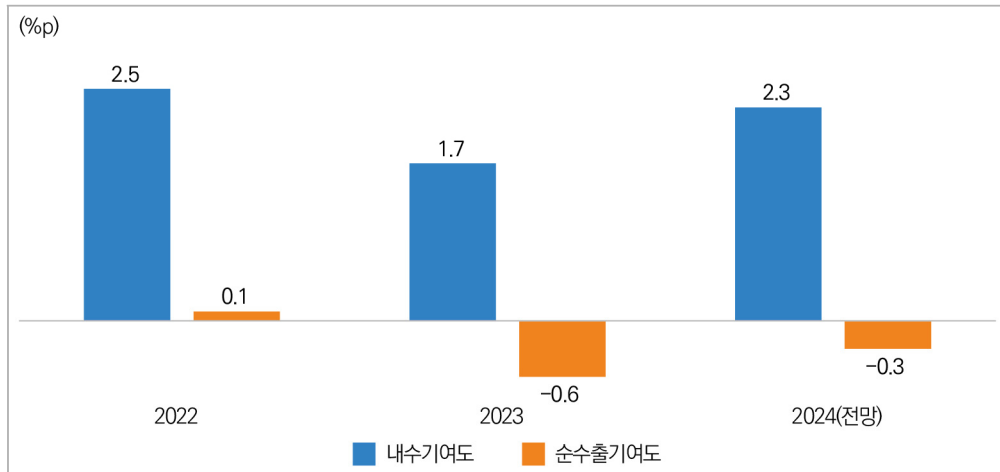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2024년 소득 여건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2% 증가하여 2023년(2.4%)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간투자는 2024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2.6% 증가하여 2023년(1.5%)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4년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개선, 세제개편 효과 등에 힘입어 4.5% 증가하겠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경영실적 회복에 기대어 4.4%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24년 0.2% 증가하겠다.

총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2024년 7.0%로 2023년(0.3%)에 비해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총수입은 2024년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증가율이 7.5%까지 높아질 전망(2023년 2.2%)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2.0%p에서 2024년 2.3%p로 높아지겠으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0.9%p에서 2023년 -0.3%p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겠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4년 4.2%로 전망한다.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3년에 비해 높아질 예정이다(실질GDP 1.1% → 2.0%, GDP디플레이터 1.1% → 2.2%). 2023년의 명목성장률은 2.2%로 예상한다.

[그림 II-4]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표 II-2] 2023~2027년 국내 경제전망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국내총생산	2.6	1.1	2.0	3.0	2.6	2.3
최종소비	4.1	2.2	2.2	2.3	2.1	2.1
민간소비	4.1	2.4	2.2	2.2	2.1	2.1
정부소비	4.0	1.9	2.2	2.4	2.2	2.0
총고정투자	-0.5	1.4	2.4	3.5	3.1	3.0
민간투자	0.4	1.5	2.6	4.0	3.4	3.3
정부투자	-5.1	0.9	1.0	0.7	1.4	1.4
총수출	3.4	0.3	7.0	6.6	6.3	5.9
총수입	3.5	2.2	7.5	5.6	5.7	5.9
경상수지(억달러)	298	280	360	430	500	570
상품수출(통관)	6.1	-9.6	7.2	7.1	7.1	7.1
상품수입(통관)	18.9	-10.5	5.7	6.4	6.5	6.6
GDP디플레이터	1.3	1.1	2.2	2.0	2.2	2.1
소비자물가	5.1	3.4	2.4	2.2	2.2	2.1
명목 국내총생산	3.9	2.2	4.2	5.1	4.8	4.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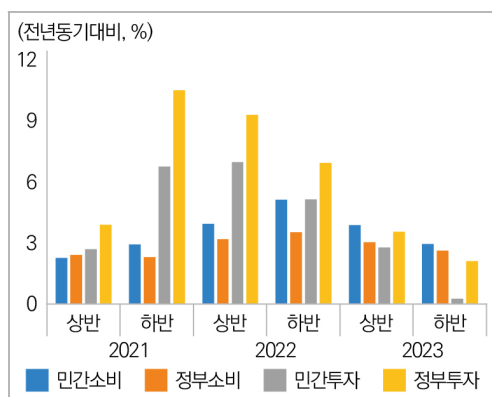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3.9	1.8	2.7	2.2	4.2
실질국내총생산	2.6	0.9	1.3	1.1	2.0
GDP디플레이터	1.3	0.9	1.3	1.1	2.2

주: 2023년 하반 및 2024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음영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024년 2.2%로 2023년의 1.1%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그동안 내수 디플레이터와 GDP디플레이터 간의 차이를 크게 벌어지게 했던 교역조건이 2023년 대비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은 2023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악화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며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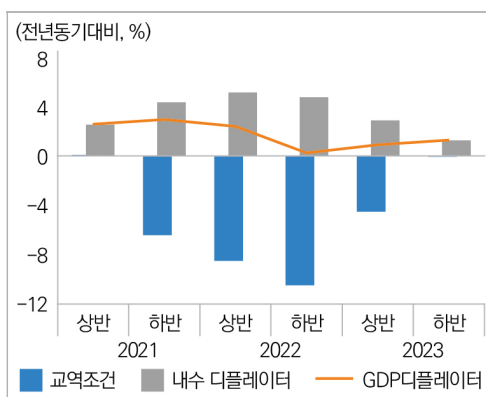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종료 여부, 중국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 가속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가능성, 미·중 갈등 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그림 II-5]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6]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2절 중기 전망¹⁹⁾

• 2023~2027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2% 성장 예상

(전년대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¹⁾	2023~2027 ²⁾
1.1	2.0	3.0	2.6	2.3	2.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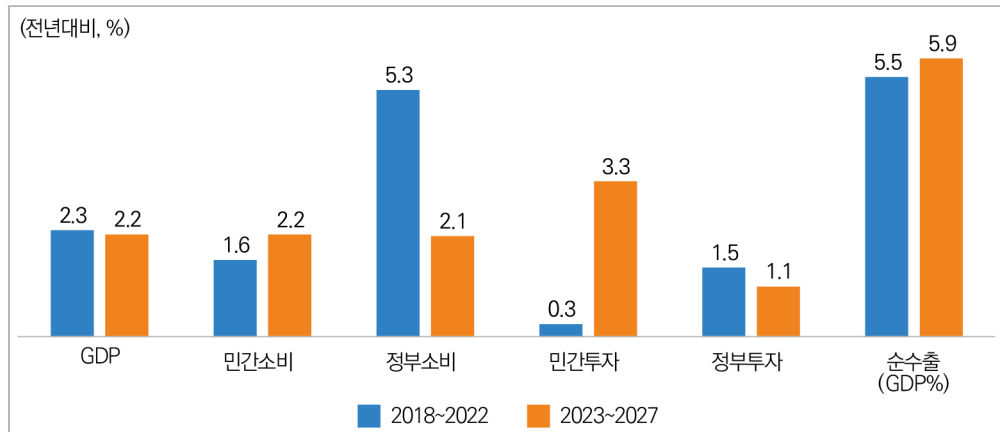
주: 1) 2017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하 원고에서 동일

2) 2022년 말부터 2027년 말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하 원고에서 동일

2023~2027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2% 성장할 예정이다. 이전 5년(2018~2022년)에 비해 성장세가 조금 낮아지겠으며, 앞으로 5년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여 내수 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에 비해 상승하겠으나 순수출 기여도는 하락하겠다(연평균: 내수 1.6 → 2.4%p, 순수출 0.7 → -0.2%p).

우리 경제는 2023~2024년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약되겠으나 2025~2026년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잠재GDP 수준을 회복하겠다. 2027년 이후로는 성장률이 다시 균형성장경로²⁰⁾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그림 II-7] 실질GDP 지출부문별 중기 전망(5년단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9) 이 전망은 예결안 심의시 정부 경제성장률 전제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경제 정책 방향 및 관련 공청회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20) 2023~2027년 기간중 잠재GDP 성장률은 2.1% 내외로 추정된다.

제3절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2.0%, 정부 2.4%
- 2024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4.2%, 정부 4.9%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을 국회예산정책처는 2.0%, 정부는 2.4%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같았으나,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항목의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높았다. 수출(통관기준)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정부보다 낮았다.

[표 II-4]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4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전년대비 증가율,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실질GDP	2.0	2.4
민간소비	2.2	2.2
정부소비	2.2	-
정부투자	1.0	-
설비투자	4.5	2.5
건설투자	0.2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3.8
수출(통관기준)	7.2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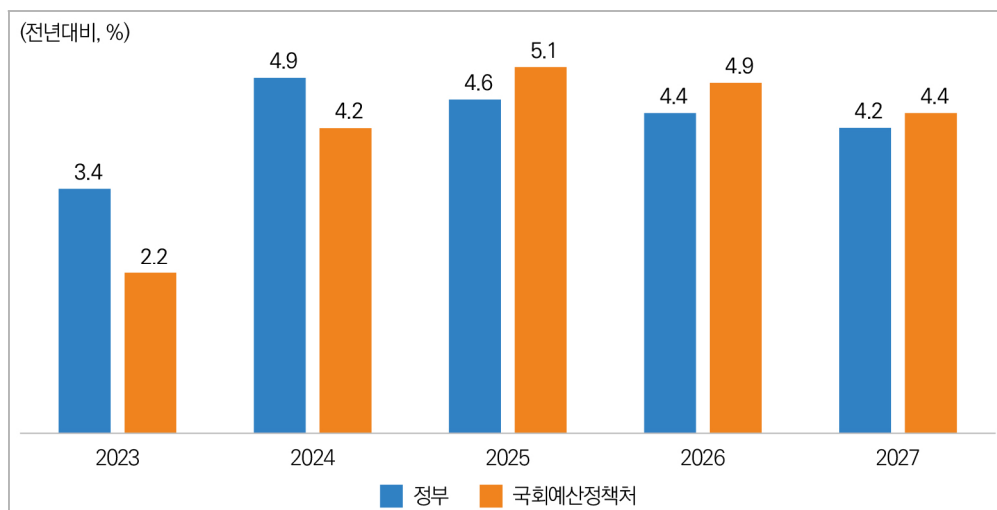
주: 기획재정부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은 통관기준으로만 전망치를 제시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24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4.2%, 정부가 4.9%로 보고 있다. 2023년은 각각 2.2%와 3.4%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명목성장률 전망치 간 차이는 교역조건 변동 방향에 대하여 견해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3년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교역조건 악화로 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1%p 정도 밀돌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교역조건이 2023년에 비해 개선되면서 내수 디플레이터와 GDP디플레이터 간 차이가 줄어들 전망이다.²¹⁾

2025~202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를 0.5%p 상회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질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성장률이 다시 균형 성장경로에 가까워질 예상인 2027년에는 정부 명목성장률과의 차이가 0.2%p로 줄어든다.

[그림 II-8]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과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와 2.4%로, 정부는 각각 3.3%와 2.3%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내수 디플레이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부소비 및 투자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정부소비 및 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2.2%, 1.0% 증가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정부소비	4.0	2.5	1.3	1.9	2.4	2.1	2.2		
정부투자	-5.1	2.7	-0.9	0.9	1.1	0.9	1.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플레이터 오름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 지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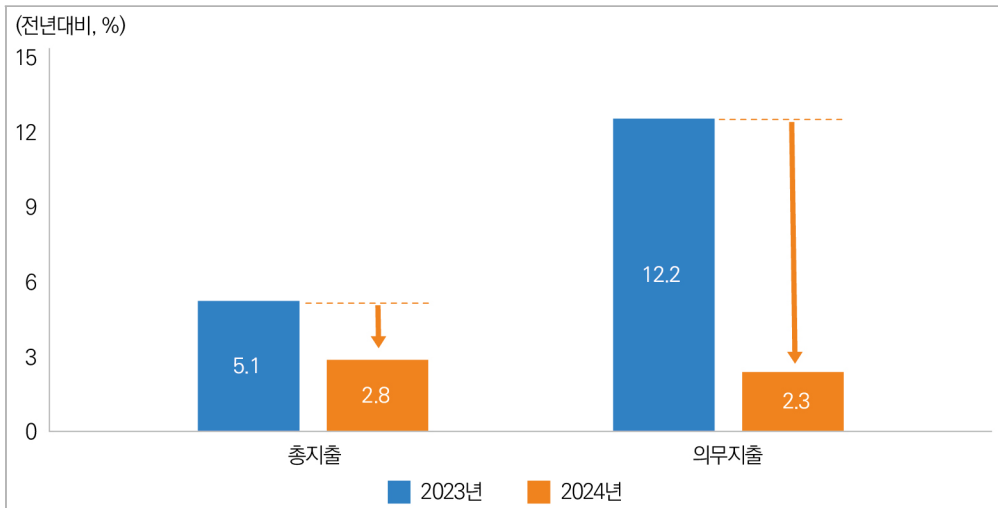
2024년 정부지출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 비해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재정수입 여건 악화와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모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2.2%, 1.0% 늘어 2023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1. 정부소비

2024년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늘어 2023년(1.9%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정부의 재정지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정부소비디플레이터 등이다.

2024년 정부의 총지출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4년 중앙정부 예산안 상 총지출은 656.9조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여 2023년(국회확정예산 대비 5.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다. 특히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348.2조원(2.3%)으로 2023년(340.3조원, 12.2%)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며 관련 정부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림 II-9] 2024년 총지출과 의무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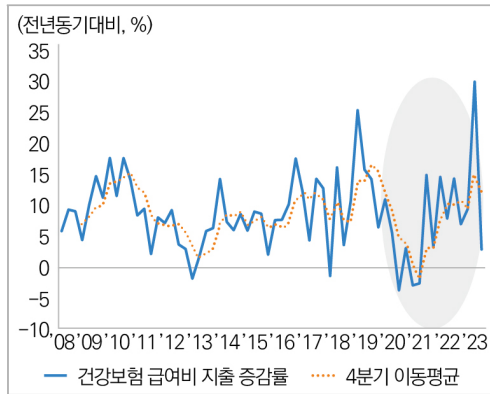
주: 202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반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증가 추세로 회복되며 정부소비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정부가 가계에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무상급식 등과 함께 사회보장현물수혜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76.7조원)가 명목정부소비(377.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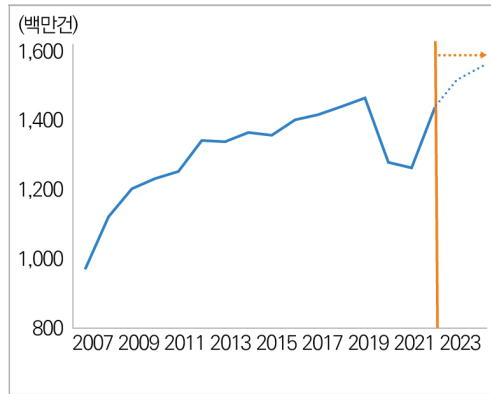
년과 2021년 전년대비 각각 2.9%, 7.9% 증가하여, 이전 기간(2009~2019년)의 평균 증가율 9.1%를 크게 하회하였다.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건수는 2022년 빠르게 회복되며 13.9%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6.4%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2022년 들어 9.3%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였다.

[그림 II-10]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림 II-11]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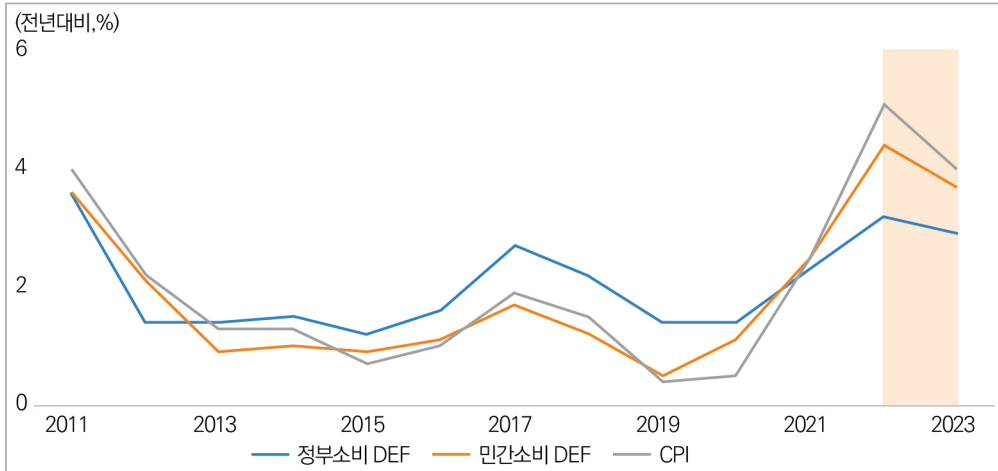


주: 점선은 2023년과 2024년 전망치로 2023년 상반기 및 코로나19 이전 기간(2009~2019년)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지출 예산은 명목액을 기준으로 집행되고 국민계정 상의 관련 명목정부소비 지출 항목에 계상된다. 한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의 비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가격변수가 정부소비디플레이터이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명목 정부지출액을 실질화하는 가격변수이며, 가격이 상승(하락)할수록 실질 지출액은 감소(증가)하게 된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2023년 2.7%(상반기 3.0%, 하반기 2.5%)에서 2024년 2.5%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명목정부소비 증가율이 2023년 4.8%(전망)에서 2024년 4.7%로 낮아지는 가운데 실질정부소비 증가세 둔화를 완화하는 요인이다. 2023년 상반기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1분기 3.4%에서 2분기 2.6%로 빠르게 안정되며 동기간 명목정부소비의 가파른 증가세 둔화(7.5%→3.6%)에도 불구하고 실질정부소비 지출을 지지하는 요인이었다.

[그림 II-12]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이



주: 2023년은 상반기 중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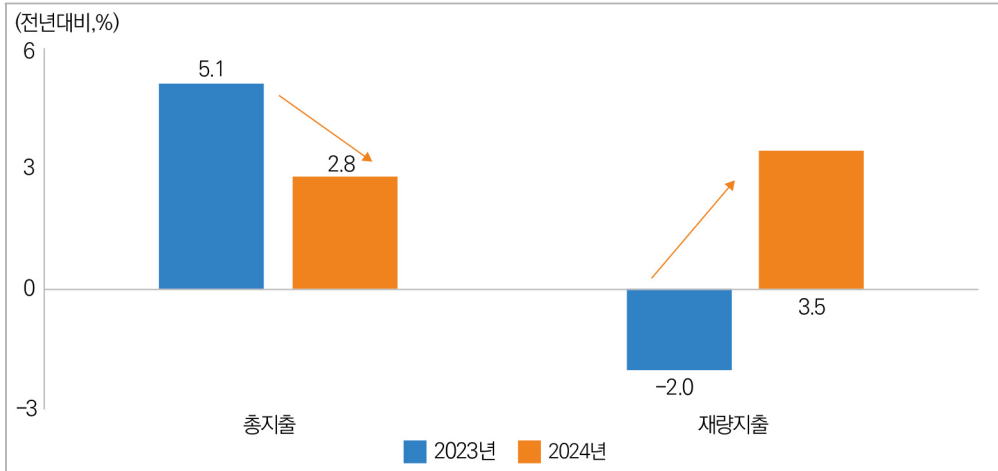
2. 정부투자

2024년 정부투자는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 늘어 2023년(0.9% 전망)과 비슷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2024년 정부투자의 결정 요인은 정부의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 규모, SOC분야 예산, 정부투자 디플레이터 등이다.

2024년 정부의 고정자산투자는 재량지출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2024년 재량지출 규모는 308.7조원으로 전년(국회확정예산 기준 298.4조원) 대비 3.5%(10.3조원) 증가한다. 정부의 재량지출 방향은 4대 분야 중점투자²²⁾, 민생경제 회복지원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이다.

22) 4대 중점투자 분야는 ① 청년, 저소득층, 노인 등의 복지(사회안전망) ②성장동력 확보 ③경제활력 제고 ④국방, 공공안전망 등 국가기능 수행 강화이다.

[그림 II-13] 2024년 총지출과 재량지출 증가율



주: 202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4년 분야별 예산을 보면 SOC, 환경, 국방, 공공질서·안전 분야 등에서 정부 투자 관련 예산의 증가는 정부의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 요인이다. 반면 R&D 분야는 전년대비 16.6%(5.6조원) 줄며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감소 요인이 될 전망이다.²³⁾ 정부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024년 주요 부문별 예산과 환경, 국방,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관련 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II-5] 2024년 SOC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23	'24 예산안	비고	증감액 (조원)	증가율 (%)
도로부문	78,408	78,705	• 건설(5.2→5.1조원) • 안전 등(2.0→2.3조원)	0.0	0.4
철도부문	75,968	80,501	• 건설(4.3→4.2조원) • 안전 등(2.1→2.5조원)	0.5	6.0
항만수자원부문	34,562	42,490	• 건설(1.5→1.6조원)	0.8	22.9
지역 및 도시부문	22,631	18,253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35억원)	-0.4	-19.3
물류·항공·산단 등	38,311	41,400	• 항공·공항(0.3→0.8조원)	0.3	8.1
합계	249,881	261,349	• 전년대비 +4.6%	1.1	4.6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3) 정부투자를 자본재 형태별로 보면 2022년 명목정부투자(106.0조원) 중 건설투자 64.3%(68.1조원), 설비투자 21.3%(22.5조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4.4%(15.3조원) 비중이다.

[표 II-6] 2024년 정부투자 관련 주요 분야별 증액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구분	'23	'24 예산안	주요 내용	증액 (조원)	증가율 (%)
환경	물환경	44,048	47,889	• 하수관로설치	0.4	8.7
국방	방위력 개선	169,169	177,986	• GOP 과학화, 핵초소형 위성체계 • F-15K, 특수작전 헬기 성능개량 등	0.9	5.2
공공 질서 · 안전	경찰	128,064	132,978	• 현장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등	0.5	3.8
	해경	18,260	19,252	• 함정건조, VTS 구축	0.1	5.4
	재난 관리	16,246	22,440	•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0.6	38.1

주: 2024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표 II-7] 2024년 R&D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3	'24 예산안	주요 내용	증감액 (조원)	증가율 (%)
과학기술 통신 분야	100,223	90,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기초연구(과기부) (16,367→16,363)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290→1,101)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755→1,076) 	-0.9	-9.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75,714	62,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국제협력 (1,061→1,748)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186→1,645) 	-1.3	-16.8
교육 분야	29,879	12,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5,290→3,927)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262→196) 	-1.7	-58.2
보건 복지 분야	10,979	1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KARPA-H 프로젝트 (495, 신규) 글로벌연구협력지원 (41→287) 	0.1	9.3
SOC 분야	11,030	8,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503→594)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 기술개발 (113→159) 	-0.3	-26.3
기타 부문	82,953	72,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80, 신규) 환경성질환예방관리핵심 기술개발 (139→163) 	-1.0	-12.2
합 계	310,778	259,152	전년대비 △16.6%	-5.2	-16.6

주: 교육·기타 부문 R&D 총량 감소 중 일부(1.8조원 규모)는 R&D→일반 재정사업 재분류에 기인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제2절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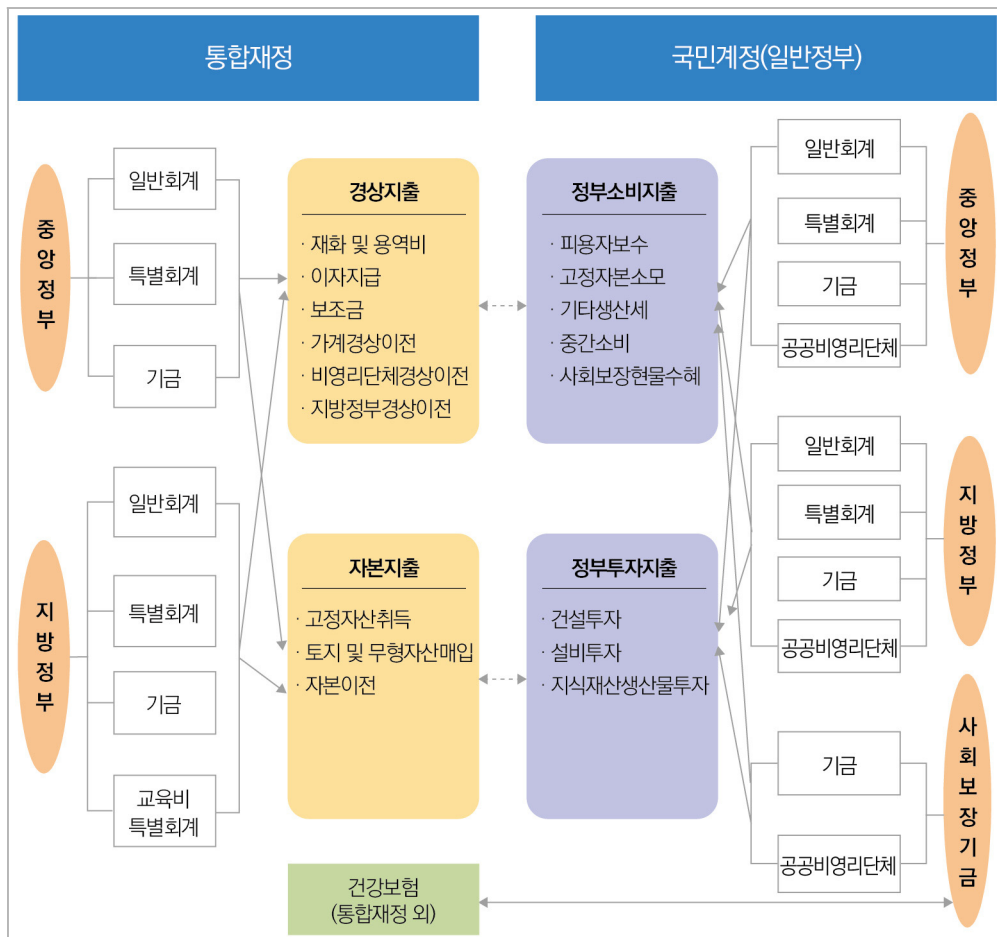
● 2023~2027년 중 정부 소비 및 투자는 각각 연평균 2.1%, 1.1% 증가

- 정부소비는 지난 5년(2018~2022년)에 비해 증가율이 연평균 3.2%p 하락
- 정부투자는 지난 5년에 비해 증가율이 연평균 0.4%p 하락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정부소비	1.9	2.2	2.4	2.2	2.0	5.3	2.1
정부투자	0.9	1.0	0.7	1.4	1.4	1.5	1.1

[그림 II-14] 통합재정과 국민계정의 정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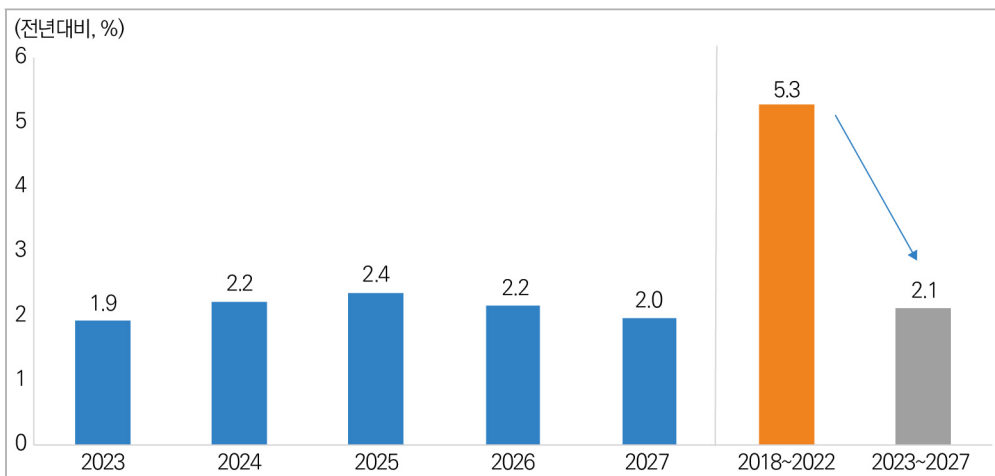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정부소비

2023~2027년 기간 중 정부소비는 연평균 2.1% 증가하여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5.3%)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명목성장률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여건 악화,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이다.

[그림 II-15] 중기 정부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율, 명목GDP성장률, 명목정부소비 증가율 간의 실증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²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증가율을 전제하였고, 명목GDP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하여 명목정부소비 증가율을 전망한 후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예측치로 실질화하였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와의 장기균형관계를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24) 199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총지출 증가율과 명목GDP성장률이 각각 1%p 상승하면 명목정부소비 증가율은 각각 0.29%p, 0.34%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2023~202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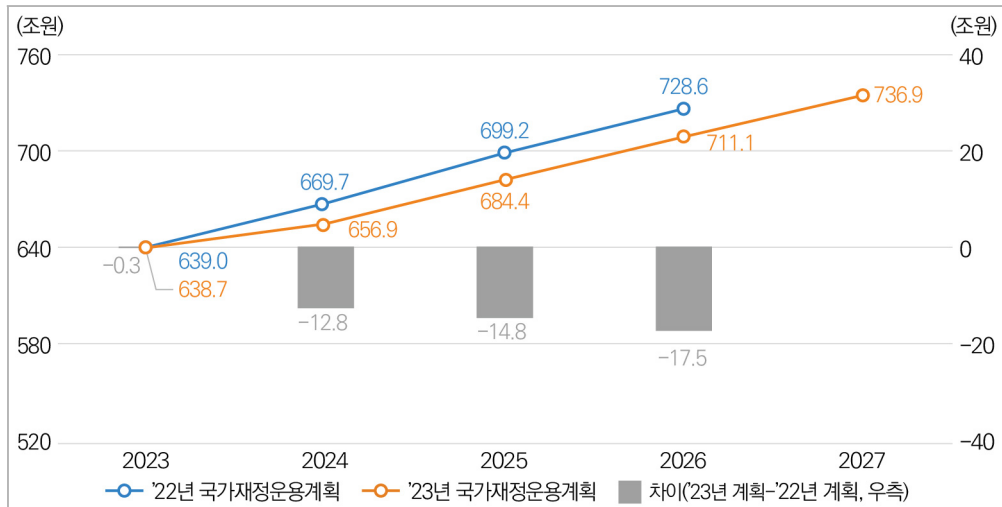
	'23년 ¹⁾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3.6
(증가율)	(5.1)	(2.8)	(4.2)	(3.9)	(3.6)	-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5.0
(비중)	(53.3)	(53.0)	(54.5)	(55.4)	(56.1)	-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2.0
(비중)	(46.7)	(47.0)	(45.5)	(44.6)	(43.9)	-

주: 1) 202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3. 8.

2023년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지출계획을 2022년과 비교 가능한 2024~2026년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4~2026년 기간 중 총지출은 2022년 계획 대비 2024년 -12.8조원, 2025년 -14.8조원, 2026년 -17.5조원, 연평균 -15조원 축소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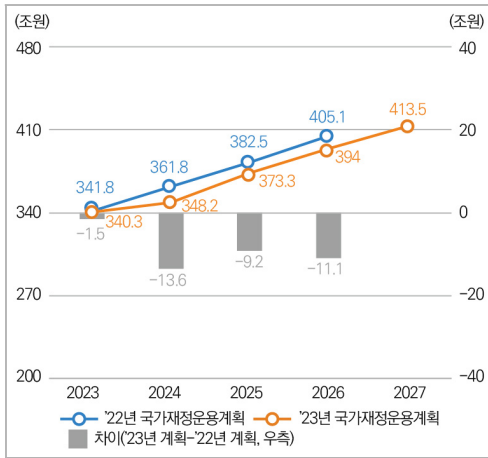
[그림 II-16] '22년과 '23년 중기 재정지출계획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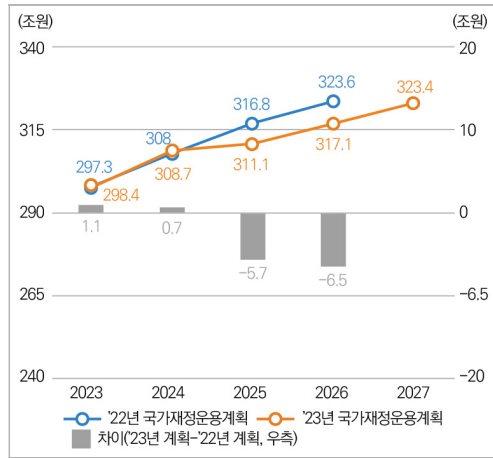
2024~2026년 기간 중 의무지출은 2022년 계획 대비 2024년 13.6조원, 2025년 9.2조원, 2026년 11.1조원, 연평균 11.3조원 축소 편성되었다. 동기간 재량지출은 2022년 계획 대비 2024년 3.8조원, 2025년 5.7조원, 2026년 6.5조원, 연평균 3.8조원 축소 편성되었다.

[그림 II-17] '22년과 '23년 중기 재정지출계획의 의무지출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림 II-18] '22년과 '23년 중기 재정지출계획의 재량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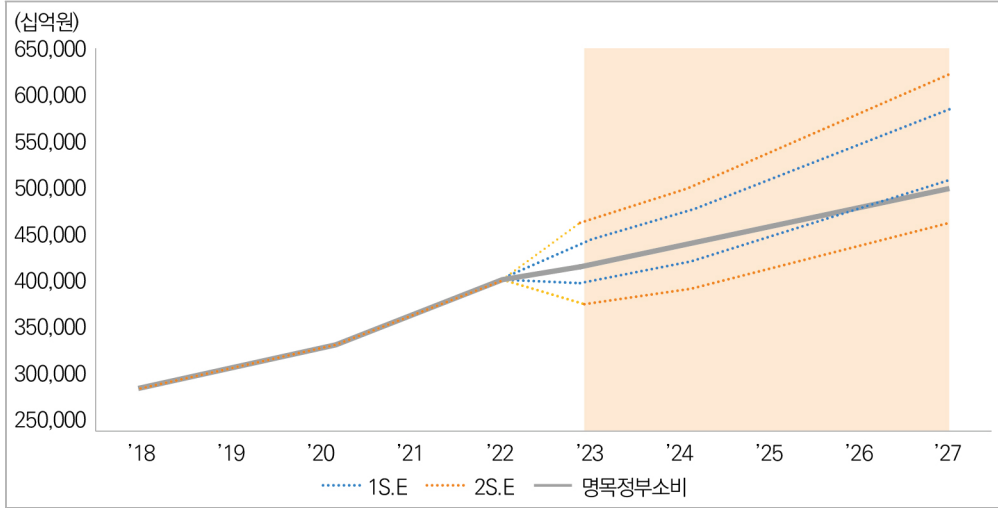
아래의 중기 명목정부소비와 정부소비디플레이터에 대한 최종 전망치는 모형에 측치에 전년도 중기 재정계획 대비 추세적인 감소세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표 II-9] 중기 정부소비 전망

	2023	2024	2025	2026	2027	'18~'22	'23~'27
실질정부소비	1.9	2.2	2.4	2.2	2.0	5.3	2.1
명목정부소비	4.8	4.7	4.5	4.3	4.0	7.5	4.5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2.7	2.5	2.1	2.1	2.0	2.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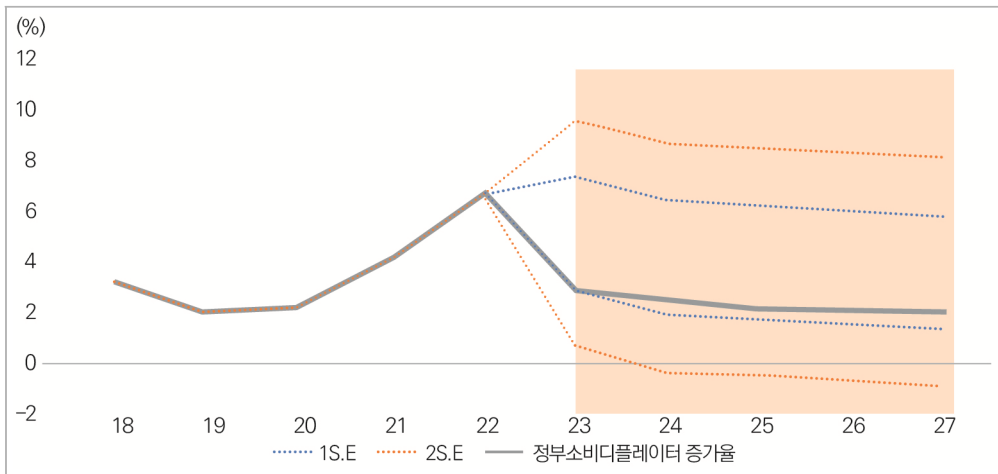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19] 중기 명목정부소비 예측치와 신뢰구간



주: 1) 명목정부소비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20]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예측치와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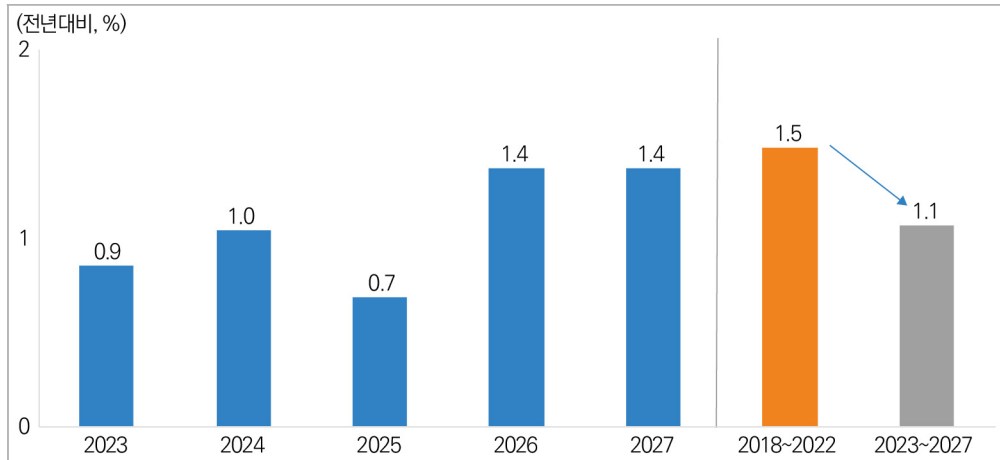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정부투자

2023~2027년 기간 중 정부투자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1.5%)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II-21] 중기 정부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정부투자는 재정지출 증가율과 명목정부투자 증가율 간의 실증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²⁵⁾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증가율을 전제하였고, 명목정부투자를 전망한 후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예측치로 실질화하였다. 정부투자디플레이터는 민간투자디플레이터와의 장기균형 관계를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표 II-10] 중기 정부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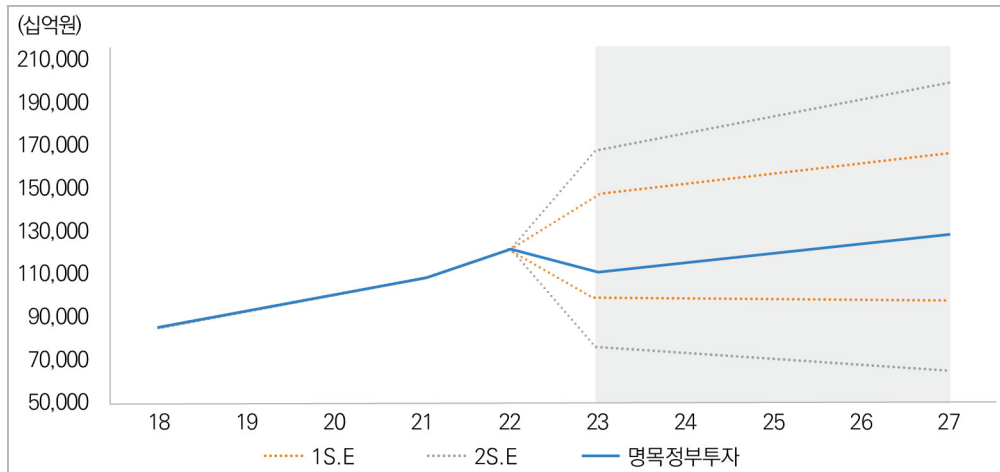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	2027	'18~'22	'23~'27
실질정부투자	0.9	1.0	0.7	1.4	1.4	1.5	1.1
명목정부투자	3.7	3.8	3.0	3.6	3.6	5.5	3.6
정부투자 디플레이터	2.7	2.8	2.3	2.3	2.2	4.1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5) 명목정부투자는 명목정부소비와 달리 명목GDP 성장률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980년부터 2022년 연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총지출 증가율이 1%p 상승하면 명목정부투자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8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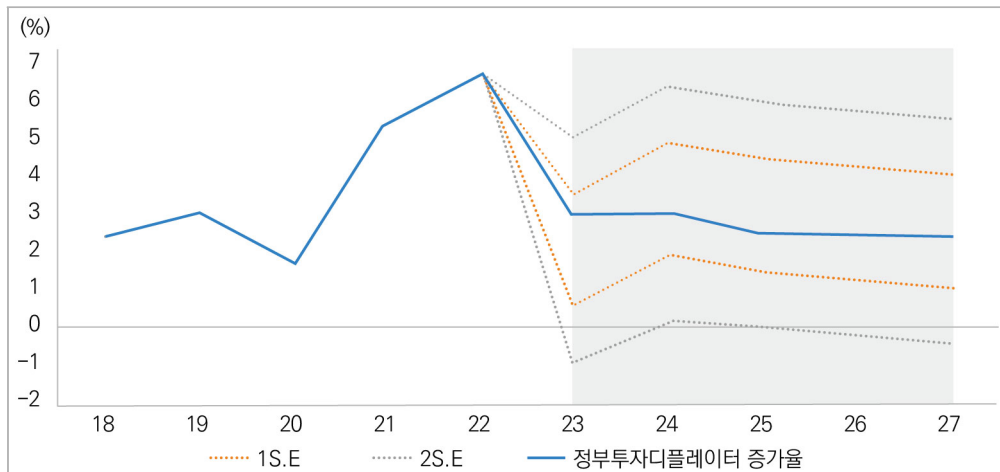
아래의 중기 명목정부투자과 정부투자디플레이터에 대한 최종 전망치는 모형예측치에 전년도 중기 재정계획 대비 추세적인 감소세와 투자디플레이터 관련 변수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그림 II-22] 중기 명목정부투자 예측치와 신뢰구간



주: 1) 명목정부투자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23]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예측치와 신뢰구간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4장

민간소비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민간소비는 2.2%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4.1	3.1	1.7	2.4	2.2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누적된 소비 여력	•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대
• 소득 여건 개선	• 실질임금 하락
• 소비심리 상승	• 국내 경기둔화

2024년 민간소비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간소비는 연간 소비액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보상소비 수요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견인해오던 서비스 소비의 경우 2023년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II-11] 국내소비지출

		2019	2020	2021	2022	'23.1/4	'23.2/4
재화	(원계열,조원)	359.4	365.9	382.5	380.4	96.4	90.1
	(전년동기대비,%)	3.0	1.8	4.5	-0.6	-0.8	-1.3
서비스	(원계열,조원)	485.4	448.6	463.7	499.2	125.9	128.7
	(전년동기대비,%)	2.8	-7.6	3.4	7.7	7.8	2.7
합계	(원계열,조원)	844.6	812.9	844.5	879.1	222.3	218.6
	(전년동기대비,%)	2.9	-3.8	3.9	4.1	4.0	1.0

주: 재화 = 내구재 + 준내구재 + 비내구재

자료: 한국은행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민간소비의 하방 요인으로서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대, 실질임금 하락, 국내 경기둔화 등을 들 수 있다. 2023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²⁶⁾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둔화로 실질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²⁷⁾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질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도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이 실제로 임금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어 왔던 점을²⁸⁾ 고려할 때, 최근까지의 물가상승이 즉각적인 임금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최근 세계 경기둔화, 고금리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소비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II-12] 가계대출 증가 규모(전월대비)

(단위: 십억원)

	'23.1월	'23.2월	'23.3월	'23.4월	'23.5월	'23.6월	'23.7월
주택담보대출	-498	-1,027	-3,130	-2,296	1,937	4,090	3,429
기타대출	-6,766	-4,463	-5,940	-2,126	-1,725	-2,347	-1,075
합계	-7,264	-5,491	-9,069	-4,422	212	1,743	2,353

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표 II-13]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단위: 천원, %)

	'22.1/4	'22.2/4	'22.3/4	'22.4/4	'23.1/4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3,876 (3.2)	3,358 (-1.1)	3,588 (-1.7)	3,556 (-1.1)	3,773 (-2.7)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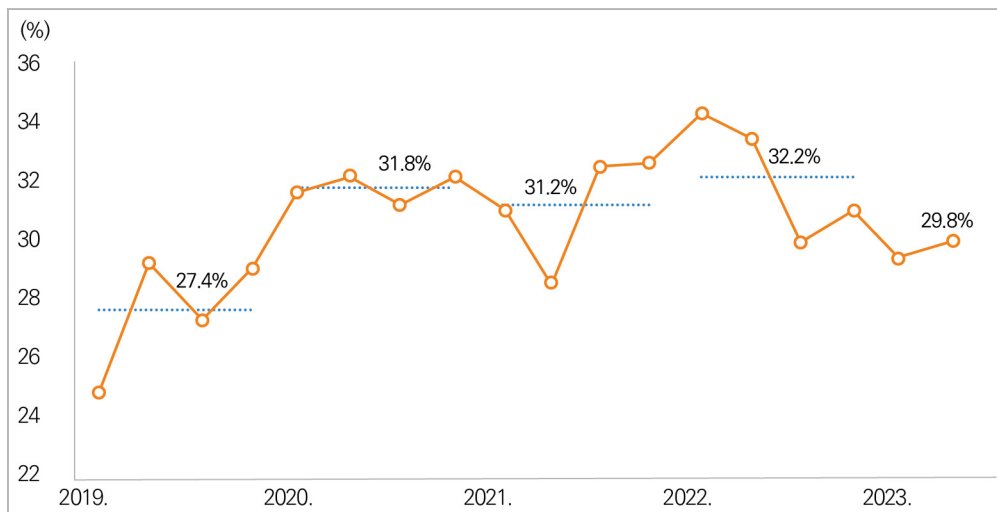
26) 전월대비 증감액 기준

	'23.1월	4월	5월	6월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5.2	3.7	3.3	2.7	3.4
예금은행 대출금리(잔액기준, %)	4.8	5.0	5.1	5.1	..
27)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	-0.7	1.3	1.8	2.4	..

28) 오삼일·이종하·배기원,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22.4.25.

그러나 가계의 누적된 소비 여력과 소득 여건 개선, 소비심리 상승 등의 상방 요인으로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흑자율은 2019년 연평균 27.4%에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연평균 31.8%로 상승하였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가계의 흑자율은 29.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가계의 누적된 소비 여력은 아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계의 월평균 실질근로소득 역시 2023년 들어 2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 여건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림 II-24] 가구 흑자율



주: 흑자율 = [1-(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자료: 통계청

[표 II-14] 가구당 월평균 실질근로소득

(단위: 만원, %)

	'22.1/4	'22.2/4	'22.3/4	'22.4/4	'23.1/4	'23.2/4
실질근로소득	456.6 (3.1)	410.4 (-1.1)	434.2 (-2.2)	429.5 (-0.6)	462.4 (1.3)	414.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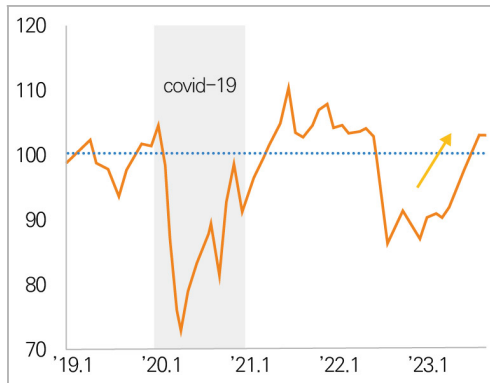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9)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3년 1/4분기 2.7%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월평균 실질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던 가구원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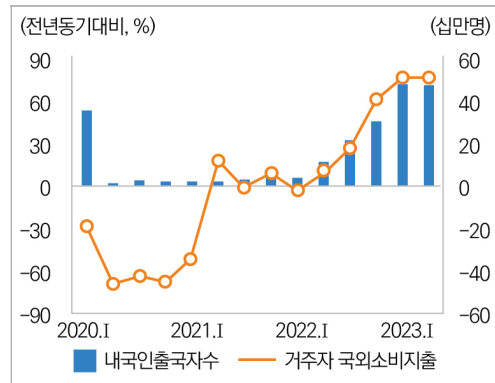
소비자심리지수는 2023년 6월부터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심리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국제선 운항 정상화³⁰⁾로 해외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 또한 민간소비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5]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6]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30) 2022년 6월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 수립·추진으로 지난 1년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642%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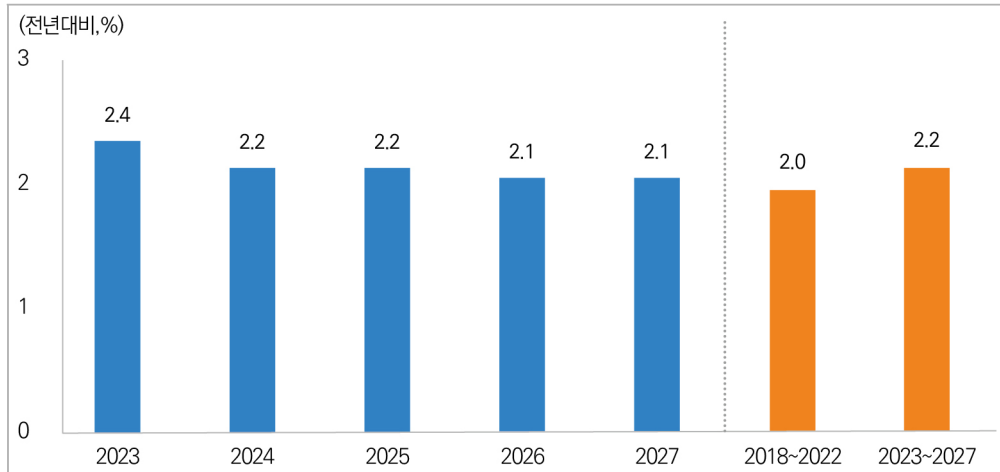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2%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2.4	2.2	2.2	2.1	2.1	2.0	2.2

[그림 II-27] 중기 민간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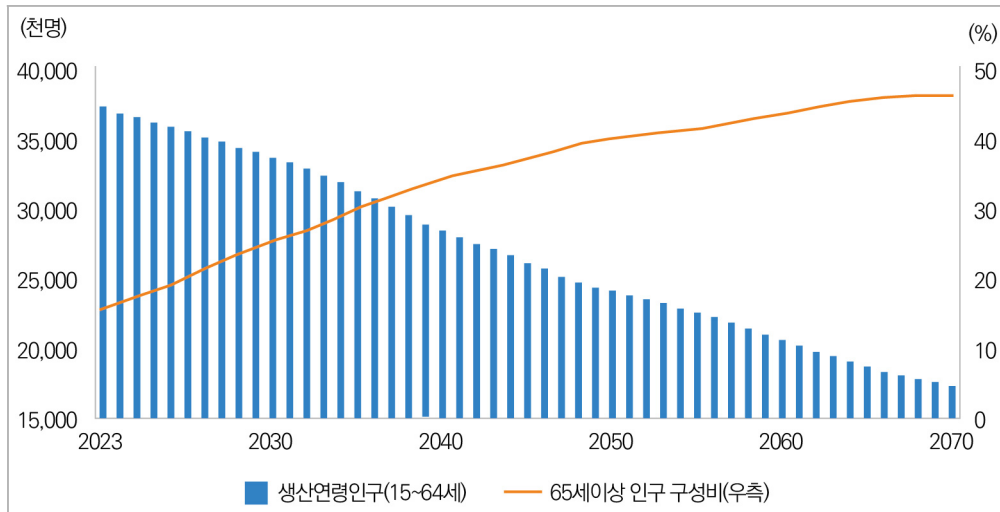
2023~2027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중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수준(2%)으로 안정화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3.4%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027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³¹⁾.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중기 민간소비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2027년 기간 중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³²⁾.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소비

31) 중기 소비자물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7장 소비자물가” 부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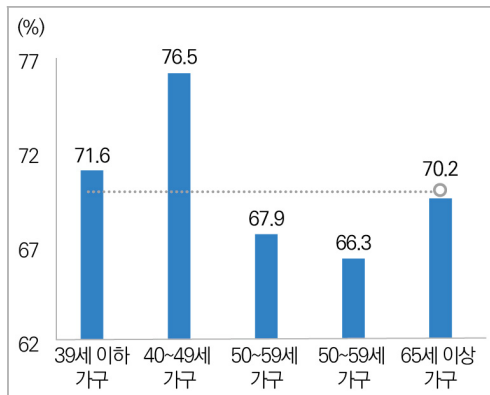
성향³³⁾은 69.9%로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70.2%)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령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기 민간소비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28]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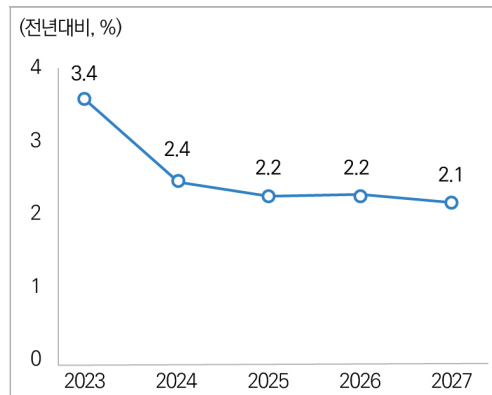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II-29]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주: 2023.2/4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30]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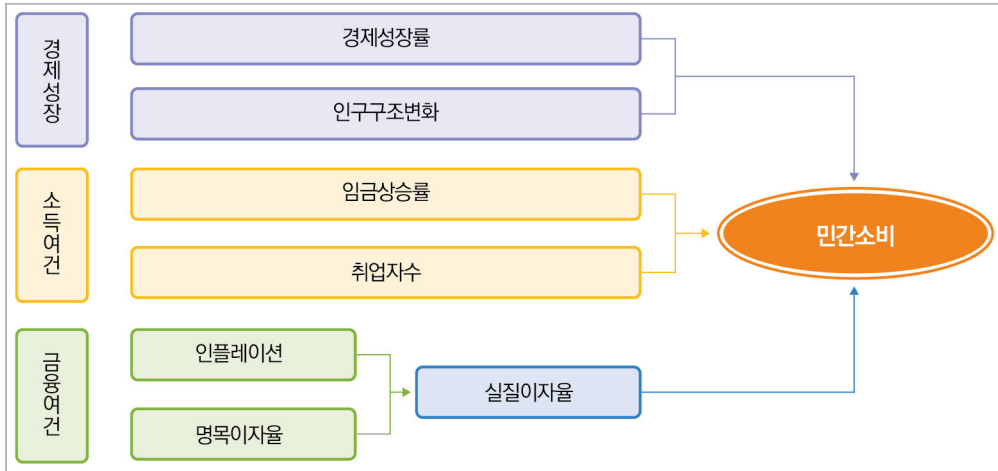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2)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19년)15.1→(2020년)16.0→(2021년)16.8→(2022년)17.7

33)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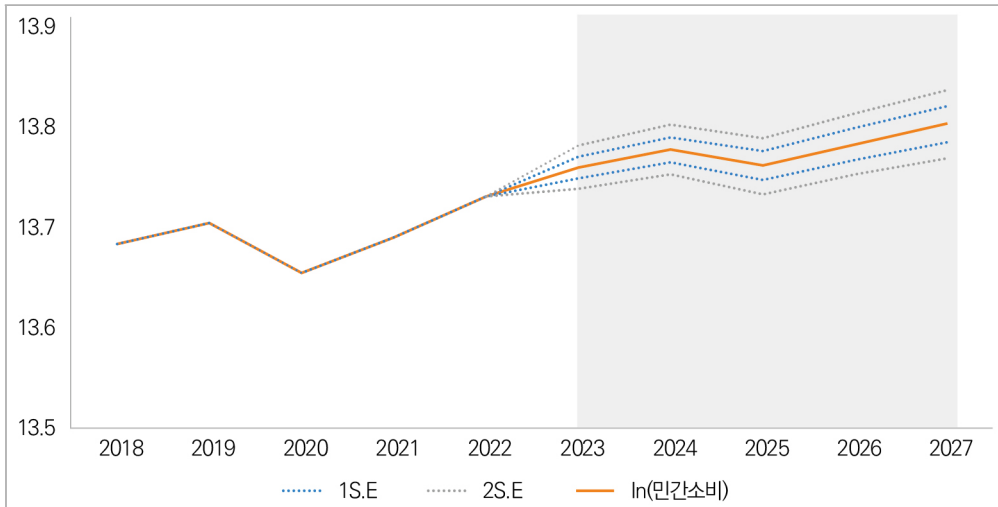
2023~2027년 중기 민간소비는 민간소비와 경제구조, 소득여건, 금융여건 등의 관계를 고려한 NABO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전망되었다. 최종 중기 민간소비 전망치는 모형에서 산출된 예측치를 중심으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정량 및 정성적 요인을 반영하여 95% 신뢰구간 내에서 조정되었다.

[그림 II-31] 민간소비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32] 중기 민간소비 예측치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5장

민간투자

제1절 2024년 전망

- 2023년 민간투자는 2.6% 증가할 전망
 - 유형별로는 건설투자 0.2%, 설비투자 4.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증가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민간투자	0.4	3.1	0.1	1.5	2.6	
건설투자	-2.8	1.8	0.3	1.0	0.2	
설비투자	-0.9	5.3	-3.7	0.6	4.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9	3.6	3.3	4.4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예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관련 선행지표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부문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등 자금조달 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R&D 관련 예산 삭감

2024년 민간투자는 전년대비 2.6% 증가할 전망이다.³⁴⁾ SOC 예산 증가(건설투자),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설비투자), 신성장부문 투자 확대(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건설 선행지표 부진(건설투자),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설비투자),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R&D 예산 삭감(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이 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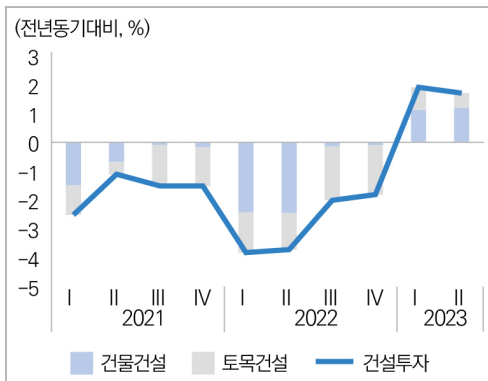
신용재 경제분석관(wshin@assembly.go.kr, 6788-4656), 건설투자, 설비투자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4) 민간투자는 각 유형별 투자를 합하여 총고정자본형성을 전망한 후 정부투자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가.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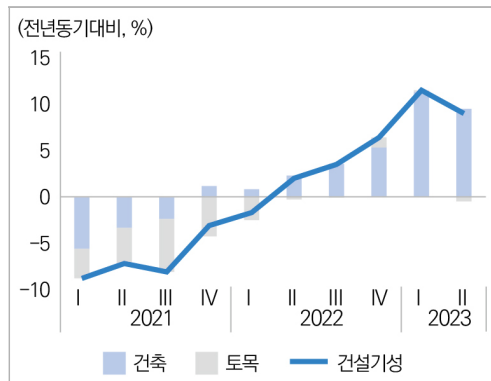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방요인으로는 SOC 예산 증가, 토목건설 수주 증가 등이 예상된다. 반면 하방요인으로 건물건설 관련 선행지표 부진, 주택 미분양, 건설비용 상승 등이 지목된다.

SOC 예산 증가 및 토목공사 수주 증가는 상방요인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6.1조원을 2024년 SOC 예산으로 배정하였는데, 이는 작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해당 예산은 교통 인프라 확충, 인프라 유지보수·개량 사업 등에 투입된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의 토목건설 수주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9.6%, 22.8% 증가하며 토목공사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II-33]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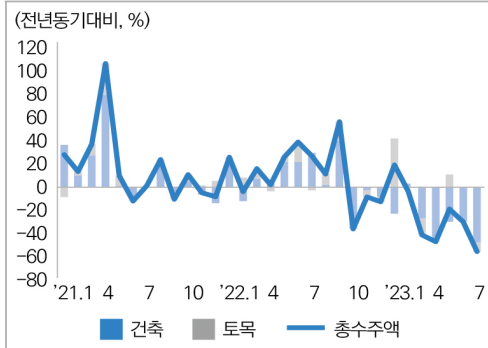


[그림 II-34] 건설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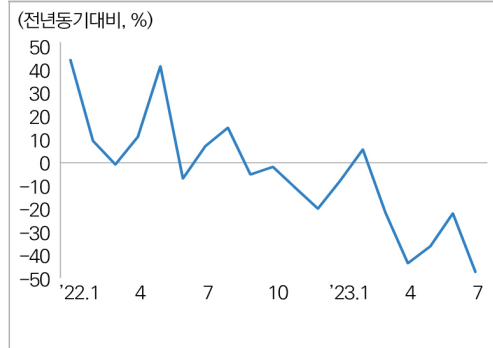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 부진은 하방요인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반기 건설기성액 등 건설투자 관련 동행지표는 건물건설(건축)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건축허가면적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2023년 2분기까지의 누적 착공실적은 9.2만호로 지난 5년(2018~2022년) 동분기 평균(22.1만호) 대비 58.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8만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3년 2분기 189,213호로 전년동기대비 27.2% 하락하였다.

[그림 II-35]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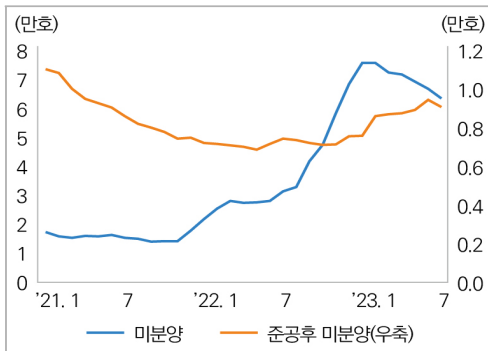
[그림 II-36]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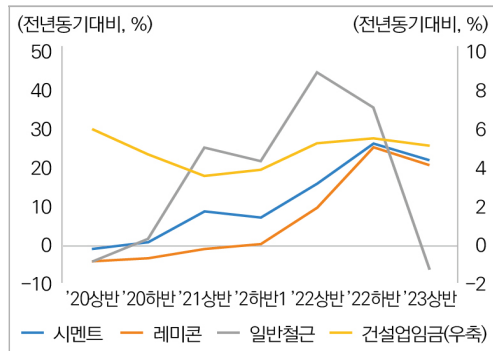
미분양 문제는 하방요인으로 예상된다. 전체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³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미분양은 건설사의 현금흐름 악화와 유동성 문제로 이어진다.³⁶⁾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건설사는 PF 대출관련 원리금을 보유자금을 이용하여 상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부실·도산 가능성이 증가한다. 건설사 위기는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건설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II-37]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38] 건설자재 및 건설업 임금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비용 상승도 하방요인으로 예상된다. 건설자재값은 최근 시멘트 등 비금속 자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³⁷⁾ 이에 더해 인건비 증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비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³⁸⁾

35)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발생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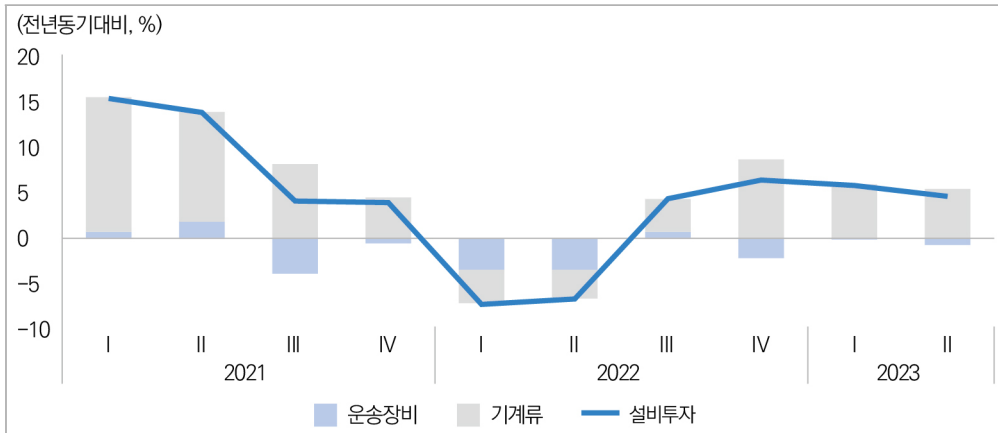
36)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2%에서 2023년 3월 2.0%로 3개월 만에 0.8%p 증가하였다.

37) 2023년 8월까지 국내 7개 주요 시멘트 업체 중 3개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여 나머지 업체의 가격 인상 가능성 역시 높아 하반기에도 비금속자재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설비투자

2024년 중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의 상방요인은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세계개편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이다. 반면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 등은 하방요인으로 예상된다.

[그림 II-39]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전망의 상방요인이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최근 5년(2018~2022년) 전체 설비투자액의 25.7%를 차지하는 설비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 하반기부터 IT 부문 경기회복과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황은 2024년 2023년의 위축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5] 2024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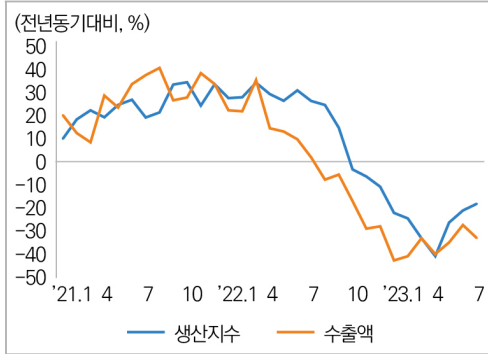
	Gartner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WSTS)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 ¹⁾
2023년	-11.0	-10.3	-18.6
2024년	18.5	11.8	22.9

주: 1) 반도체 장비 시장 매출 전망

자료: 각 사 보도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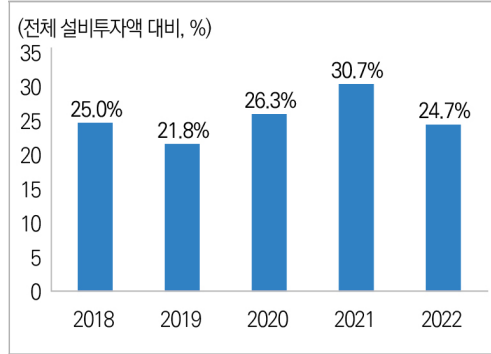
38)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평균임금은 작년 동기 대비 6.7%, 상반기 대비 4.0% 증가하였다.

[그림 II-40] 반도체 생산지수 및 수출액



자료: 통계청

[그림 II-41] 반도체 설비투자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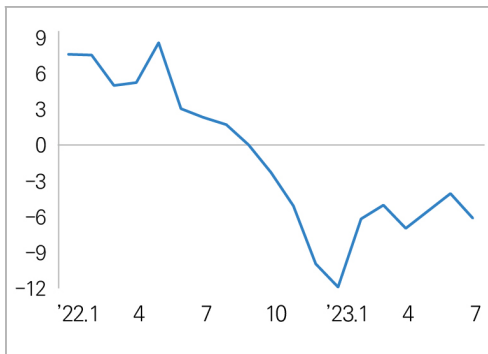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2023년부터 개편·시행된 법인세 제도는 전망의 상방요인으로 예상된다. 새 제도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95%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해외 자회사 여유 자금의 국내 유입 비용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해외유보금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설비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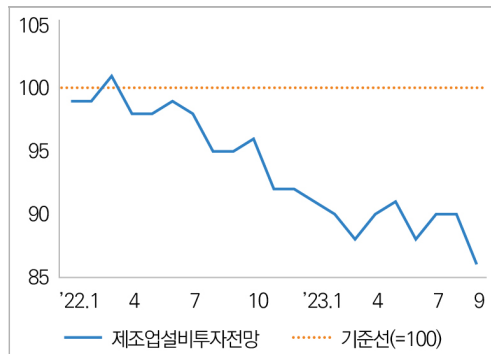
반면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은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이다. 전체 설비투자의 절반 이상(53.2%, 2018~2022년 평균)을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2022년 9월 이후 마이너스이며³⁹⁾, 한국은행의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도 2022년 3월부터 100 미만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설비투자의 회복 속도는 향후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부문 업황과 금리, 환율 등 대내외 여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42] 제조업 설비투자 압력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43]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

39) 설비투자 조정 압력은 생산지수 증감률에서 생산능력지수 증감률을 차감한 값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향후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40) 설비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BOX 5] 세계개편과 기업투자

2023년 1월 개편·시행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쌓아둔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에 활용할 유인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입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올 때 그 금액의 95%를 비과세 대상(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세계개편 이전 대비 낮은 비용으로 해외자회사의 여유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상반기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90억 달러(약 38.5조원)로 1980년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해외자회사의 이익금 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자회사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투자수익수입⁴¹⁾은 -52.4억 달러로 1998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⁴²⁾ 이는 세계개편을 통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며 기업들이 해외유보금을 수입배당금의 형태로 들여오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상반기 유입된 대부분의 유보금은 기업의 차세대 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해외자회사		국내모회사
현행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법인세율로 과세	배당 →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
개정	(상동)	배당 →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세계개편안」, 2022.7.

[2023년 상반기 주요기업 반입 배당금 규모 및 설비투자 내용]

기업	반입 배당금 규모	설비투자 내용
삼성전자	21조 8,457억원	•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 파운드리 부문 첨단 공정 수요 대응 목적 투자
현대차그룹	7조 8,000억원	• 전기차 전용 생산설비 신설
LG전자	6,000억원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경쟁력 강화

자료: 언론기사 종합

41) 재투자수익 규모는 (순영업잉여-배당금)×직접투자자의 지분율로 산정되어 해외법인의 배당되지 않은 유보이익 중 직접투자자(모기업)의 몫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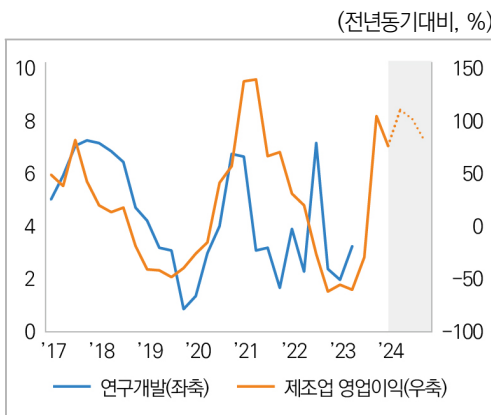
42) 이는 해외자회사 영업손실로 재투자수익수입이 감소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024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4% 성장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기업경영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연구개발 부문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⁴³⁾ IT 제조업 기업들 중심의 실적개선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해외법인 이익금을 국내본사로 들여오면서⁴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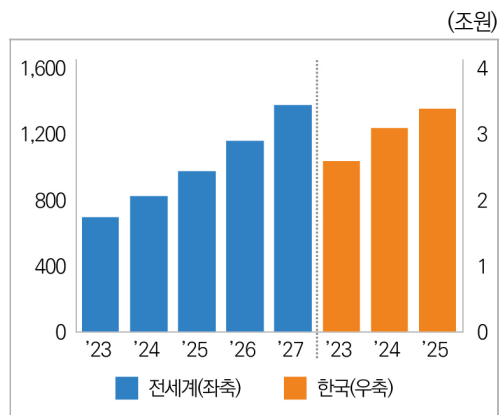
또한 미래전략산업과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수요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부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II-44] GDP 연구개발 및 제조업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



주: 코스피상장 제조업 기준
자료: 에프엔가이드, 한국은행

[그림 II-45] AI 시장 규모 전망 (조원)



자료: 프레스턴스리서치, 한국IDC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 감소는 2024년 전망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도 R&D 예산은 25.9조 원으로 전년(31.1조원)대비 16.6%(5.2조원) 감액됐다⁴⁵⁾.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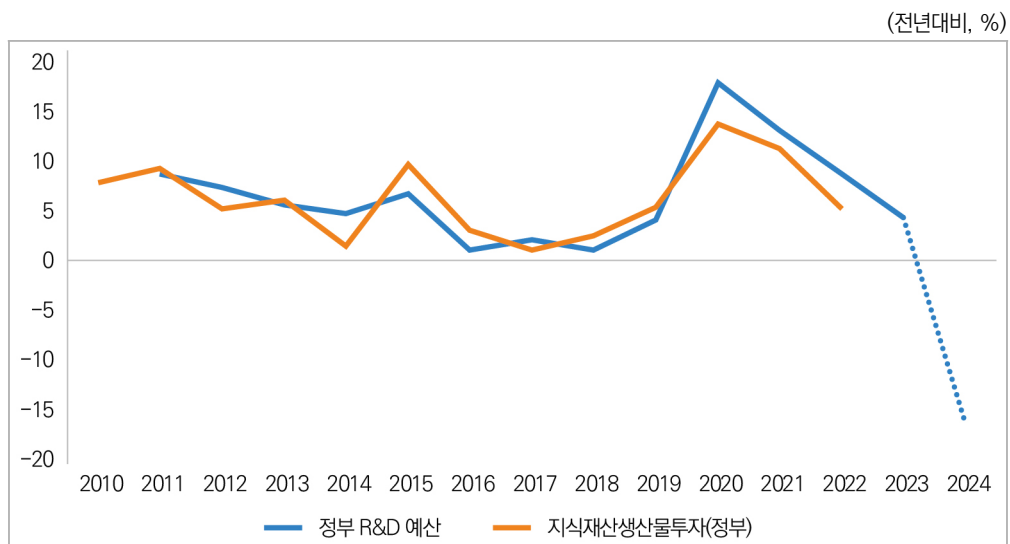
43) 2021년도 명목으로 전산업 연구개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9.5%이다.

44) 2023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해외유보금의 국내유입이 확대되었다.

45)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⁴⁶⁾이 높지 않으나 예산 감액은 중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기초분야 등의 연구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⁴⁷⁾

[그림 II-46] 정부 R&D 예산 추이



주: 24년은 예산안 기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명목치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46)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명목 기준 9.5%, 실질 기준 9.3%이다.

47) 다만 그간 과잉투자된 사업 축소와 유사과제 통합합 등의 구조조정으로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민간투자 구축효과 감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민간투자는 연평균 3.0% 증가

- 유형별로는 건설투자 1.7%, 설비투자 3.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2% 증가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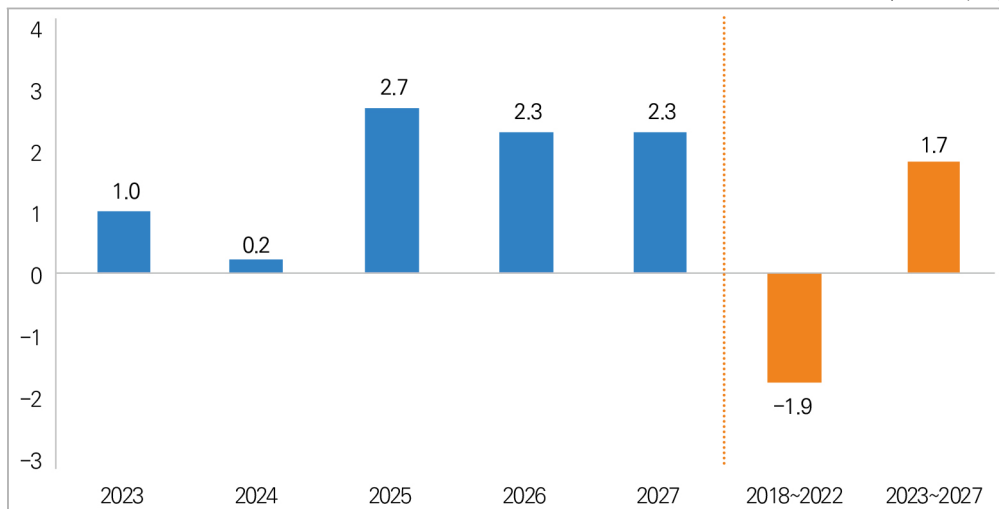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민간투자	1.5	2.6	4.0	3.4	3.3	0.2	3.0
건설투자	1.0	0.2	2.7	2.3	2.3	-1.9	1.7
설비투자	0.6	4.5	3.7	3.1	3.1	1.2	3.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3	4.4	4.7	4.5	4.3	4.4	4.2

가. 건설투자

2023~2027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 예산 증가 및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중기 전망의 상방요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7] 중기 건설투자 전망

(전년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2027년 SOC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SOC 예산 증가는 토목공사 발주를 늘려 중기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예상된다.

[표 II-16]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예산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평균
총지출(조원)	638.7	656.9	684.4	711.1	736.9	-
- 증가율(%)	8.9	2.8	4.2	3.9	3.6	3.6
SOC(조원)	25.0	26.1	26.2	27.3	28.0	-
- 증가율(%)	-10.7	4.6	0.1	4.2	2.8	2.9
SOC/총지출(%)	3.9	4.0	3.8	3.8	3.8	-

자료: 기획재정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중기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계획은 6개 신도시와 7개 공공주택지구⁴⁸⁾ 구축을 목표로 하며 최초 계획입주연도는 2025~2026년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현재 착공 중인 도시는 3개(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왕숙2)로 나머지는 착공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초입주는 기존 예상 대비 1~2년 지연된 2026~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지표의 부진은 중기 건설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주액은 2022년 4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건설수주가 건설투자에 통상 4~6분기 선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건설수주 감소의 영향은 2024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023년 하반기에도 -6.6%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건설투자에 7~8분기 선행하는 건축허가면적도 2022년 3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여 그 영향이 2024년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나타나며 건설투자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8)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6개이며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7개 지구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은 중기 건설투자의 결정 요인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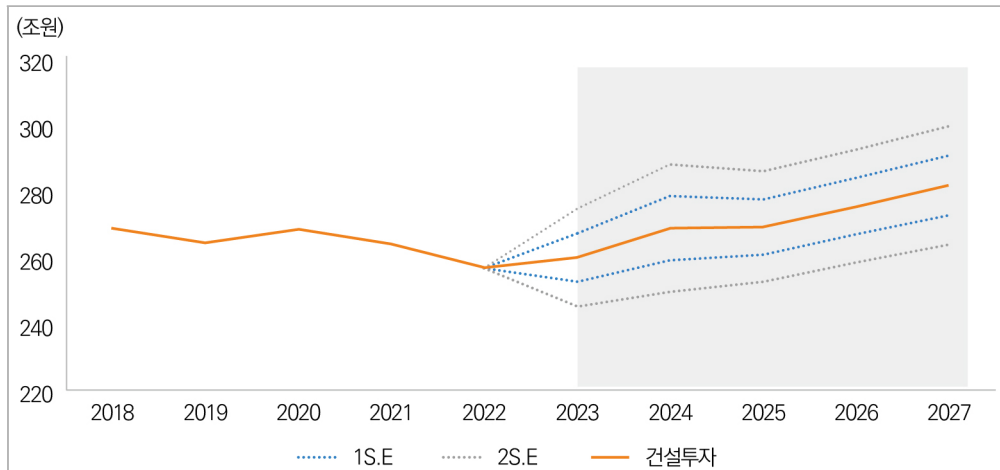
[그림 II-48] 건설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은 건설투자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2022~2026년 기간 중 건설투자 예측치는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 및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조정하였다.

[그림 II-49] 중기 건설투자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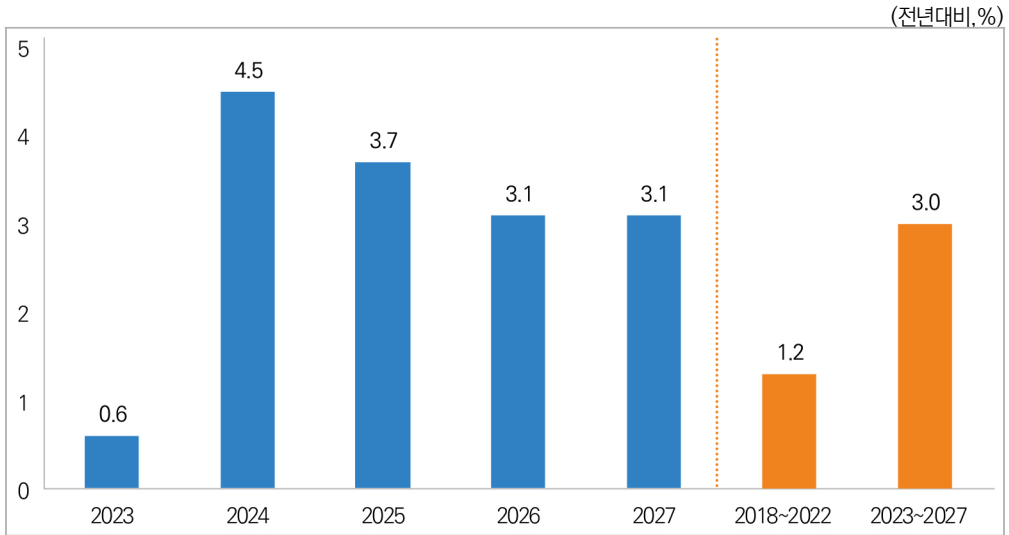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설비투자

2023~2027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의 상방요인으로 전기차, 고성능 반도체 관련 설비 수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II-50] 중기 설비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기차 수요 확대는 중기 설비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예상된다. EU는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화석연료 사용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2년부터 승용차 탄소 배출량을 마일당 82g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내연기관차 기술개선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치로 사실상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표 II-17] 주요 기업 전기차 관련 설비투자 계획

기업	내용
현대차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하반기 생산을 목적으로 전기 PBV 공장 신설 (연간 15만대) • 2030년까지 전기차 라인업 확대, 전동화 부품 전환 등 24조원 투자 계획
르노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이후 부산공장에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연간 20만 대)

자료: 언론기사 종합

또한 생성형 AI 관련 기술이 주목받으며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설비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BM(고대역폭 메모리)⁴⁹⁾ 등 고성능 반도체는 일반적인 D램 대비 6~7배의 가격대를 형성하며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어 반도체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예상된다.

[표 II-18] 생성형 AI 시장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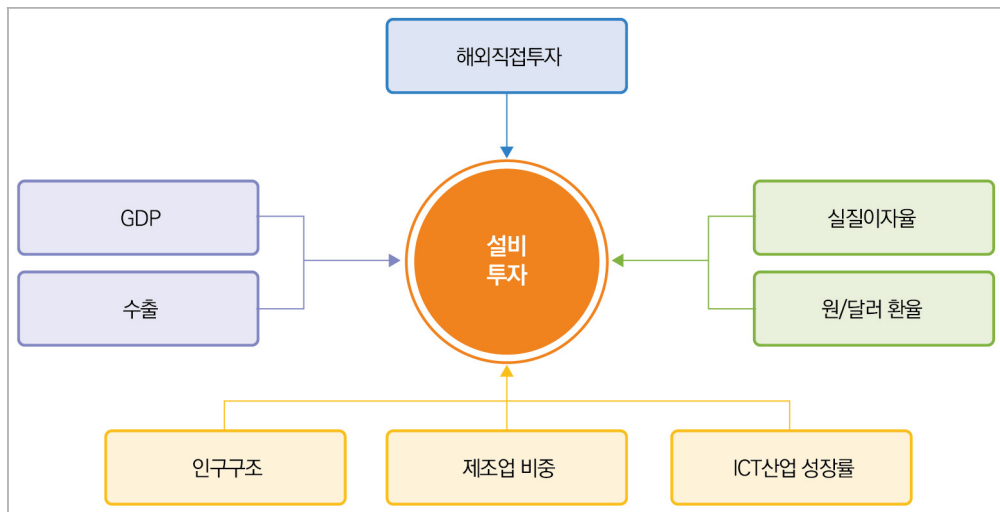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매출액	67	137	217	304	399	548	728	897	1,079	1,304

자료: Bloomberg

아래 그림은 중기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보여준다.

[그림 II-51] 설비투자자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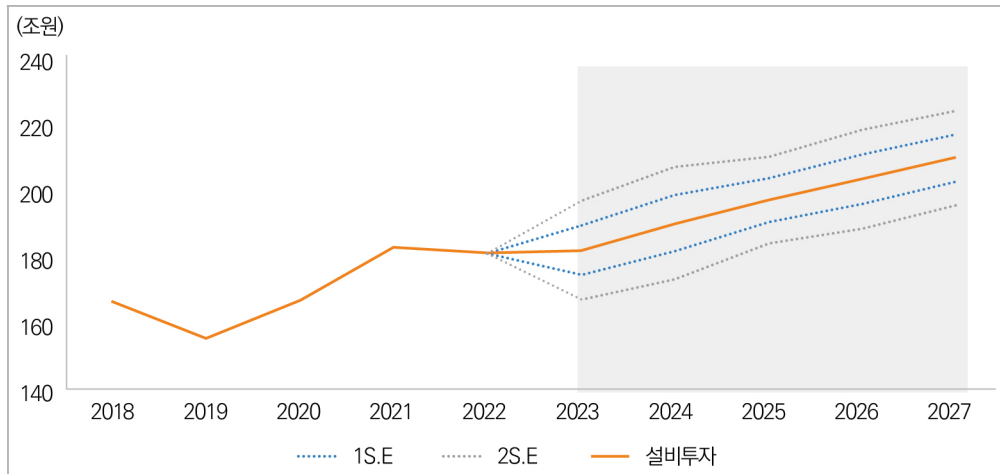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9) 생성형 인공지능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학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성능 GPU의 생산에 고성능 반도체인 HBM이 투입된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기존 D램 대비 높은 대역폭(메모리에서 한번에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양),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 큰 용량을 가져 고성능 GPU 생산에 필수적이다.

다음 그림은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2022~2026년 기간 중 설비투자 예측치는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 및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조정하였다.

[그림 II-52] 중기 설비투자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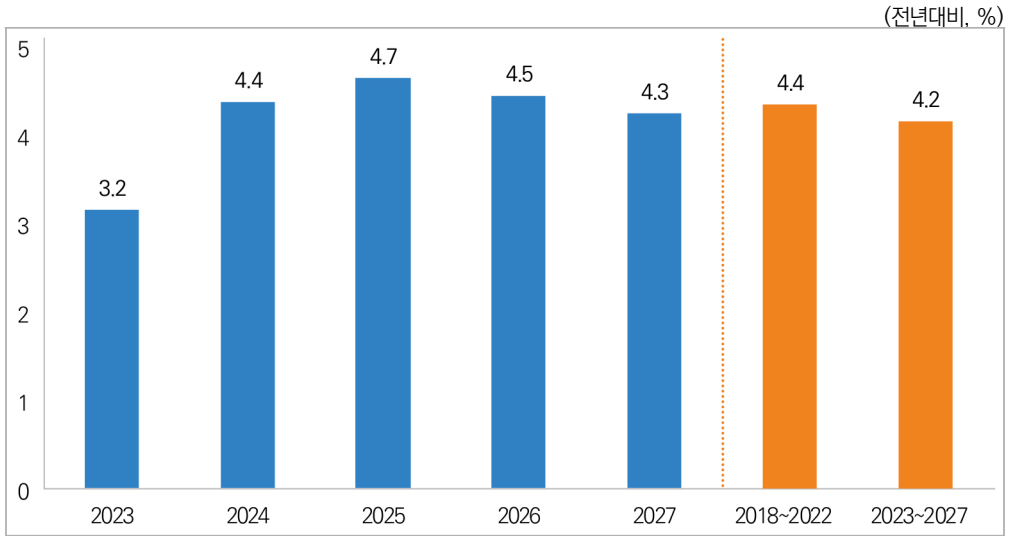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023~202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성장률인 4.4%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및 국내 인공지능, 패키지소프트웨어⁵⁰⁾ 등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는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0) 패키지소프트웨어는 용도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상품으로 주로 오피스SW, 사무용SW, 보안SW 등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하며, 최근 구축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II-53]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표 II-19] 글로벌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 규모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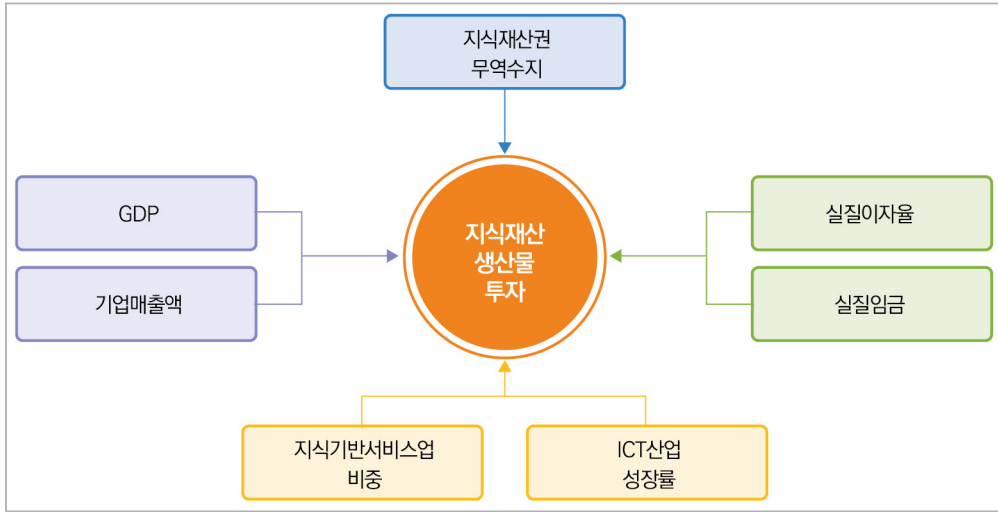
(전년대비, %)

	소프트웨어		
	패키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2021 ^(E)	10.5	12.0	24.7
2022 ^(E)	9.3	14.3	22.9
2023 ^(E)	9.6	14.2	21.3
2024 ^(E)	10.3	14.4	20.4
2025 ^(E)	11.1	14.8	19.6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DC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전망은 NABO 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아래 그림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간의 관계를 도식하였다. GDP, 기업매출액 등의 수요요인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이자율, 임금 등의 비용요인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재산권 수출 등의 요인과 소프트웨어 관련 해외시장 규모 확대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54] 지식재산생산물투자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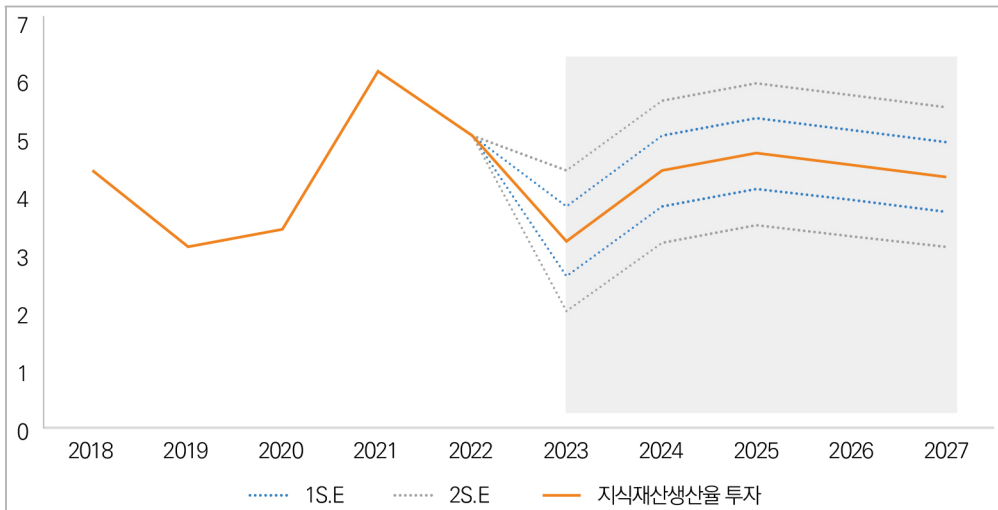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55]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예측치

(전년대비, %)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6장

대외거래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총수출은 7.0%, 총수입은 7.5% 증가할 전망
- 2024년 통관수출은 7.2%, 통관수입은 5.7% 증가할 전망
- 2024년 경상수지는 36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총수출	3.4	-0.9	1.5	0.3	7.0
총수입	3.5	4.4	0.2	2.2	7.5
상품수출(통관)	6.1	-12.4	-6.8	-9.6	7.2
상품수입(통관)	18.9	-7.7	-13.3	-10.5	5.7
경상수지	298	37	243	280	360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세계수입수요 확대	• 중국경제 성장세 약화
•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 IT 경기 회복 속도 둔화

2024년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7.0% 증가할 예정이다. 주요 국제기구에 따르면⁴⁶⁾,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량증가율은 각각 2.8%, 3.3%로 2023년 2.6%, 1.9%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가 DDR5,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PC,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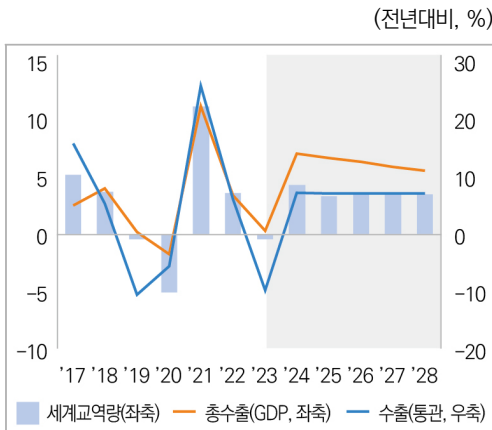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46) 세계경제성장률은 IMF, OECD, World Bank 그리고 세계교역량증가율은 IMF와 World Bank의 최신 전망치의 단순 평균값이다. 자세한 내용은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참고

력 산업과 관련된 IT제품의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회복의 시기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2차전지, 선박, 전기차 등도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총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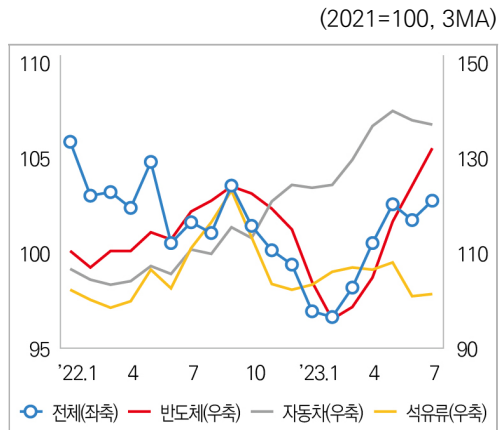
한편 예상보다 더딘 중국경제의 회복속도와 성장세 약화는 수출의 하방요인이다. 부동산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성장 모멘텀 둔화가 이어지는 경우 향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⁷⁾

[그림 II-56] 수출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네덜란드경제 정책분석국(CPB)

[그림 II-57] 수출물량지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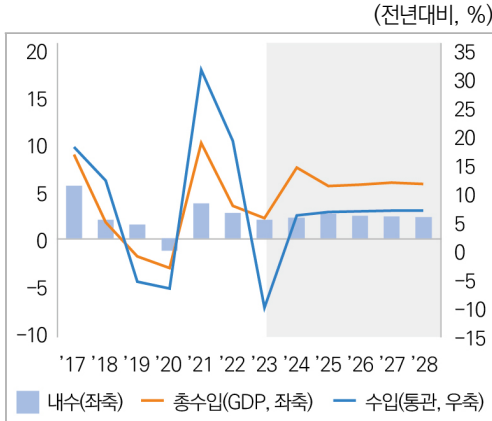
2024년 총수입(국민계정, 실질)은 7.5%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중간재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소폭 개선되는 점도 수입의 상방요인이다. 다만 반도체 등 제조업의 높은 재고 수준은 수입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엔데믹 이후 늘어난 해외 여행 등 서비스 수입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⁴⁸⁾

47) [BOX 6]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우리 경제 참조

48) 2023년 2분기 총수입에서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18.9%로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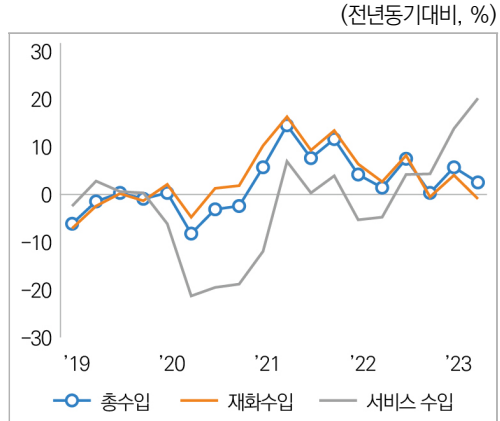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1Q	2023.2Q
총수입 중 서비스 수입 비중 (%)	21.4	18.5	16.7	16.1	16.6	18.9

[그림 II-58] 수입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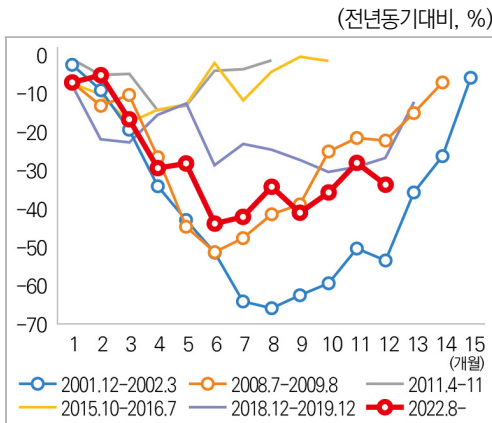
[그림 II-59]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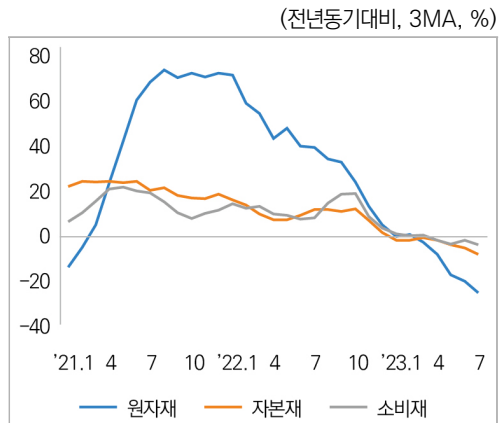
2024년 통관기준 수출은 7.2%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IT품목의 단가 하락세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2024년에는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수출규제 등 미·중갈등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수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통관기준 수입은 5.7%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 정도에 따라 증가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수입전망의 상방 위협이다.

[그림 II-60] 반도체 수출 하강속도 비교



주: 5개월 이상 반도체 수출이 하락한 시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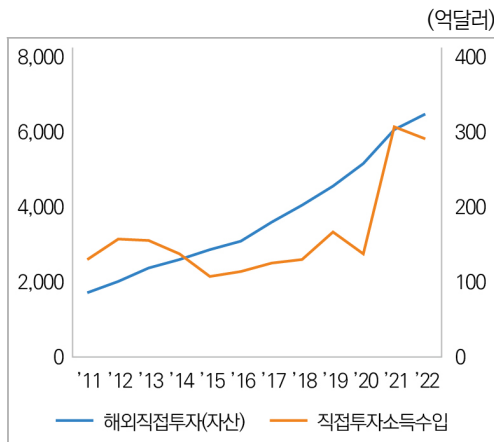
[그림 II-61] 유형별 수입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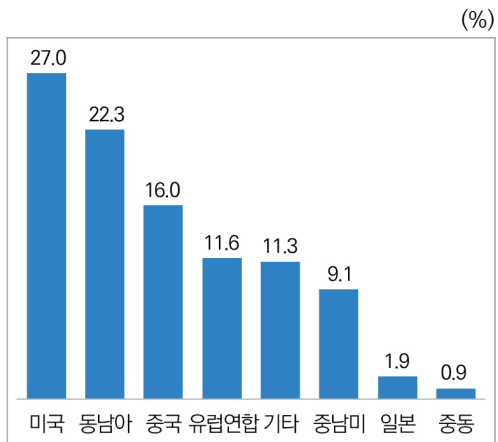
2024년 경상수지는 360억달러 흑자로 2023년(280억달러 예상)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⁴⁹⁾로 인해 중국인 방한객수가 증가하면서 여행수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예정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해외직접투자⁵⁰⁾ 자산은 2022년 기준 6,476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세법 개정⁵¹⁾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산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미·중간 무역갈등 심화 등은 전망의 하방 위험이다.

[그림 II-62] 해외직접투자자과 투자수입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3] 해외직접투자 자산의 국가별 비중



주: 2022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9) 2017년 사드배치 이후 한국행 단체관광을 금지해오던 중국정부는 8월 11일부터 한국행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한 바 있다(2023년 8월 10일 발표). 다만, 중국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중국 소비심리 둔화 등의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

50) 해외직접투자(oversea direct investment, ODI)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해외생산기지를 확대하거나,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에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영참가 또는 기술제휴와 대체자산 투자 등의 대외투자를 의미한다.

51) 2023년 1월부터 국내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기로 하였다(기존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2%, 총수입은 연평균 5.4% 증가
- 2023~2027년 중 통관수출은 연평균 4.3%, 통관수입은 연평균 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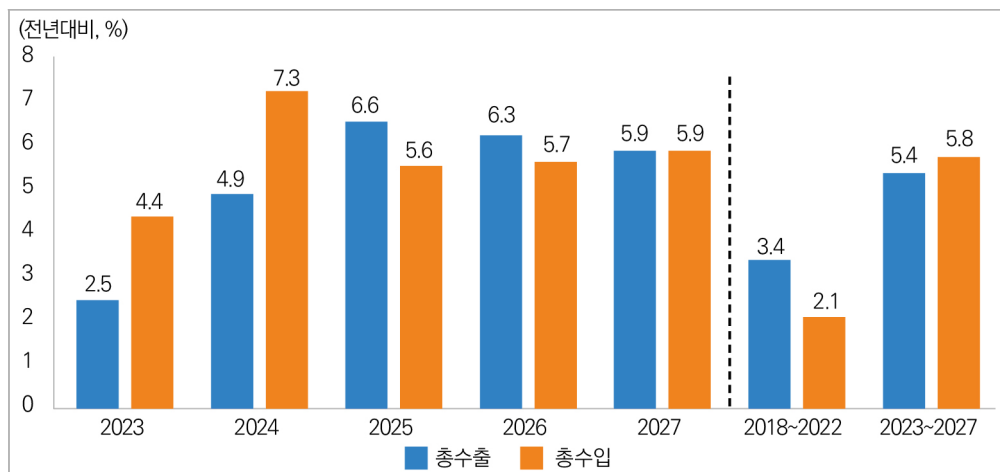
(전년대비, %, 억달러)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총수출	0.3	7.0	6.6	6.3	5.9	3.4	5.2
총수입	2.2	7.5	5.6	5.7	5.9	2.1	5.4
통관수출	-9.6	7.2	7.1	7.1	7.1	4.3	4.3
통관수입	-10.5	5.7	6.4	6.5	6.6	9.8	2.9
경상수지	280	360	430	500	570	656	428

2023~2027년 총수출은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성장률인 3.4%보다 1.8%p 높은 수준이다. 세계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증가율 증가가 총수출 증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3~2027년 총수입은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성장률인 2.1%보다 3.3%p 높은 수준이다. 수출 수요 증가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회복은 총수입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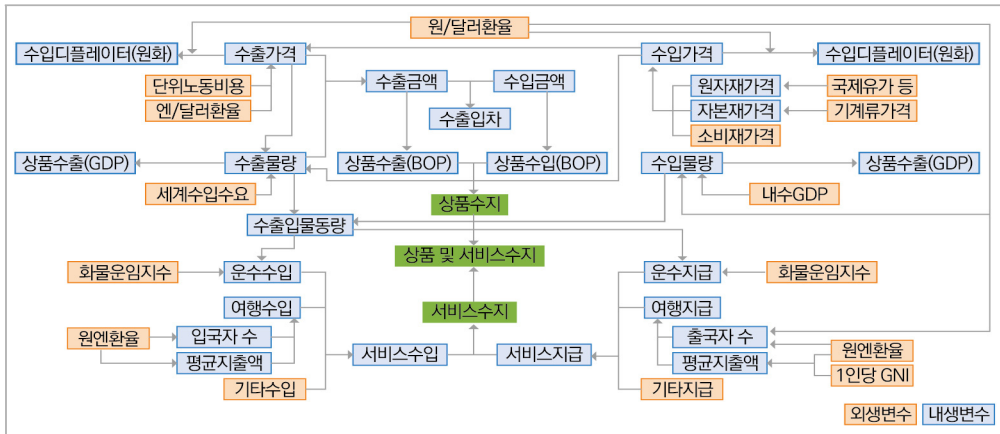
[그림 II-64] 중기 총수출 및 총수입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아래 그림에서는 중기적으로 대외거래 부문 결정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2023~2027년 기간 중 대외거래 지표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전망하였다. 수출은 세계수입수요, 단위노동비용, 환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수입은 소비 투자 등 내수(GDP) 성장률, 국제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수출물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서비스 교역부문에서는 운송수지의 경우 국제화물운임, 수출입물동량이, 여행수지는 소득수준(1인당 GNI)과 환율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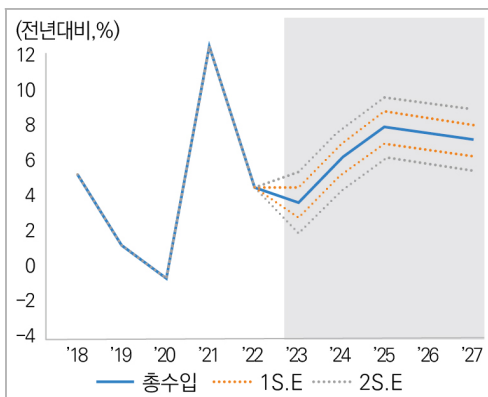
[그림 II-65] 대외거래부문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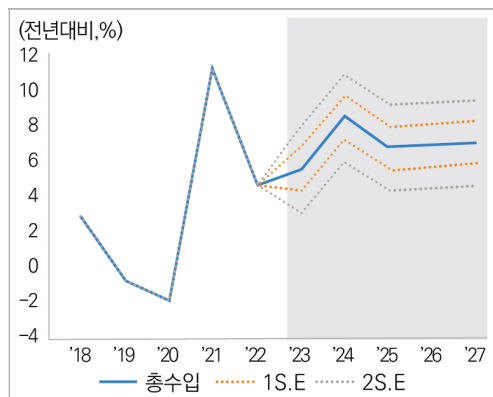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총수출 및 총수입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그림 II-66] 중기 총수출 예측치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 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67] 중기 총수입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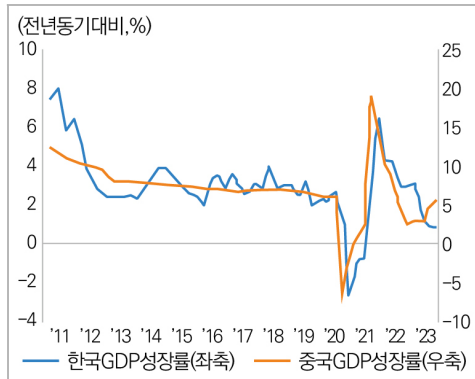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 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 6]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우리 경제

우리나라는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중국이 고성장하는 시기에 동반 성장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도 점점 커져 202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23%가 중국으로 향하였으며, 이 중 중간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⁵²⁾ 중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며 동조화되는 구조는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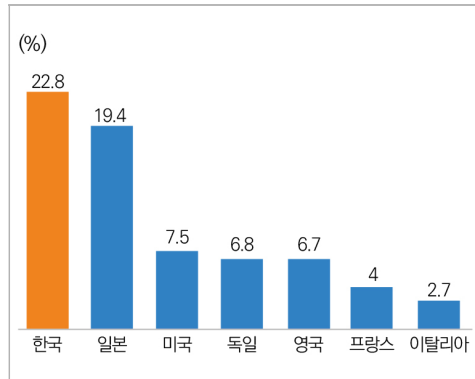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속에서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둔화로 중국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자, 소비 등 내수도 위축되고 있다. 또한,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제기하였다.⁵³⁾

[한·중 경제성장률 추이]



주: 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중국 국가통계국

[대중수출의존도 국제비교, 2022년]



주: 대중국수출의존도 = 대중국수출/대세계수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UN Comtrade Database

52)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G7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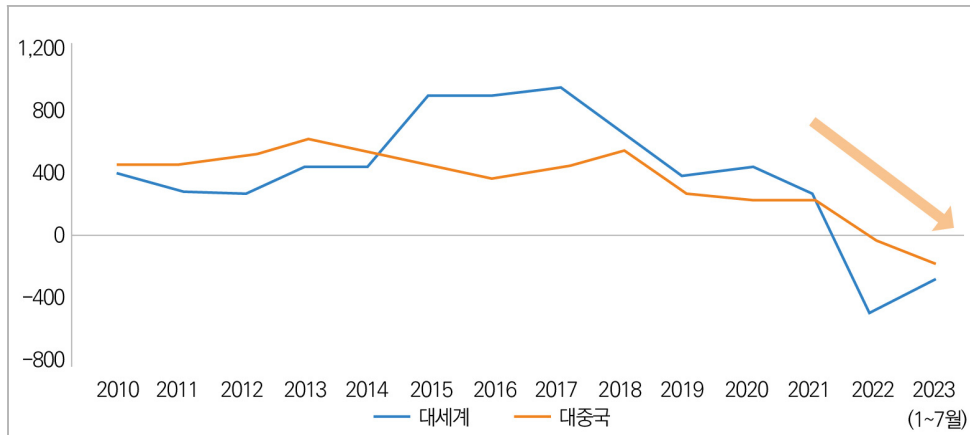
53) [BOX 2]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중기 전망 참조

[BOX 6]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우리 경제

중국경제의 부진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중국경제 둔화가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며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5월부터는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으며 최근까지도 이 같은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⁵⁴⁾

[우리나라의 대세계 및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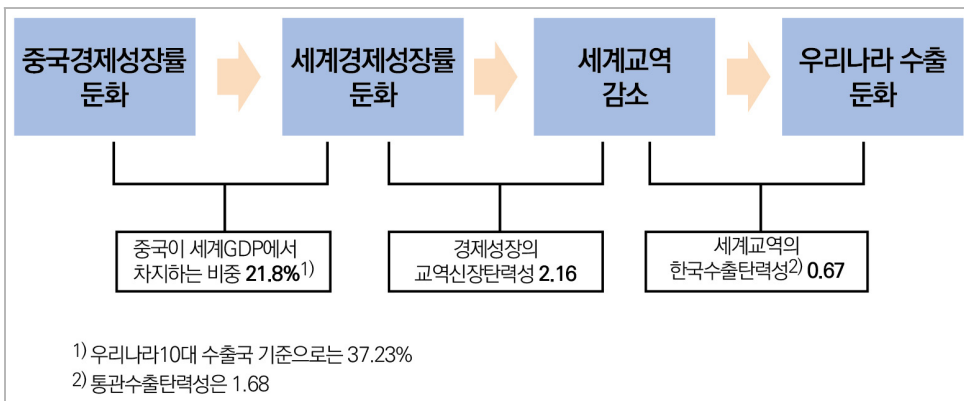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 1%p 하락은 우리나라의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을 0.32~0.56%p, 통관수출을 0.79~1.39%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지난 20여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왔으며 특히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400억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기록해온 점을 고려하면 대중 무역수지 적자 지속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2010~2022년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는 약 462억달러이며, 동기간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약 405억달러로 조사되었다).

[BOX 6]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우리 경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경제성장률이 세계교역량 및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시산한 결과이다.⁵⁵⁾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1.8%)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낮추며, 이는 다시 세계교역량 감소와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요약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분석 방법 요약]



주 : 중국경제 둔화는 수출입 등 교역부문,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환율 등 금융부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세계수입수요 등 상품교역량의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성장률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국의 부동산 발 내수 둔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소비재 수출에 대한 직접 영향 외에도, 세계교역량을 감소를 통해 전반적인 수출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대중 의존적 수출구조와 한·중 경제 간 성장 동조화 경향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중기적으로 우리경제의 구조적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55) 중국경제 둔화는 수출입 등 교역부문,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환율 등 금융부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국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에 따라서도 그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 분석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는 2.4% 상승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5.1	4.0	2.7	3.4	2.4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물가의 하방경직성 • 국제유가 상승 • 공공요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 비용상승 압력 완화

2024년 소비자물가는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 물가를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 또한 3%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I-20]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2.1/4	2/4	3/4	4/4	'23.1/4	2/4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2.8	3.5	4.0	4.2	4.0	3.8
총지수	3.8	5.4	5.9	5.3	4.7	3.2
상품	4.7	7.6	7.9	6.5	5.8	2.8
석유류	22.5	36.3	23.7	7.6	-4.1	-20.0
서비스	3.0	3.5	4.1	4.1	3.8	3.6
개인서비스	4.2	5.1	6.1	6.2	5.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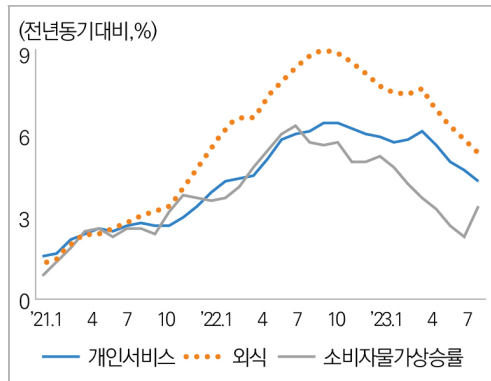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소비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는 서비스 물가의 하방경직성,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물가 지속성이 높은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⁵⁶⁾ 외식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3년 8월 5.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도 느리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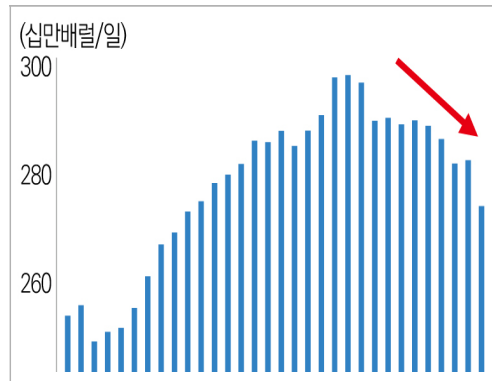
국제유가의 경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⁵⁷⁾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OPEC의 감산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68]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그림 II-69] OPEC 원유생산량



자료: CEIC

56) 가중치 10% 이상 품목 중 물가 지속성 상위 3개 품목(추정기간 2011.1/4~2023.2/4):

외식(0.83), 개인서비스(0.32), 공업제품(0.30)

물가 지속성은 다음과 같은 AR(p) 모형의 자기시차계수(ρ_i) 합으로 도출하였다.

$$\pi_t = c + \sum_{i=1}^p \rho_i \pi_{t-i} + \epsilon_t$$

또한, 지속성 계산에는 전기대비 물가상승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는 경우 지속성이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김태정·박광용·오금희, 2012).

57) OPEC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였으며, 2023년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자발적 추가 감산 조치를 발표

주요 공공요금 인상 또한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그간 미뤄져 왔던 주요 공공요금(전기, 가스 등) 인상이 단행되면서 전기·수도·가스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⁵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이후 예정된 주요 공공요금 인상 또한 소비자물가의 상방 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상반기 중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의 상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I-21] 공공요금 인상 계획: 수도권

부문	내용
지하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1,250원 → 1,400원('23.10.7.~) 1,400원 → 1,550원('24년) (인천) 1,250원 → 1,400원(1·2호선 요금 기준, '23.10.7.~)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1,200원 → 1,500원('23.8.12.~) (인천) 1,250원 → 1,500원(간선버가요금 기준, '23.10.7.~)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공사) 전력량요금 13.1원/kWh 인상('23.1.1.~) 8.0원/kWh 인상('23.5.16.~) 농사용요금 6.5원/kWh 인상('23년) 6.5원/kWh 인상('24년) 6.4원/kWh 인상('25년)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1.04원/MJ 인상('23.5.16.~) (서울) 1,000원 → 1,250원(기본요금 기준, '23.7.1.~) (인천) 840원 → 1,000원(기본요금 기준, '23.8.1.~)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480원 → 580원(가정용 상수도 요금 기준, '23.1.1.~) (인천) 470원 → 540원(가정용 상수도 요금 기준, '24년) 540원 → 620원(가정용 상수도 요금 기준,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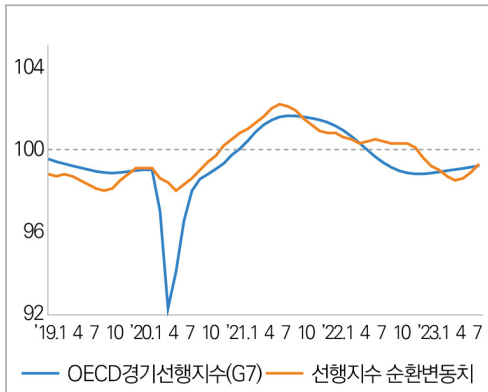
자료: 보도자료 종합

그러나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비용상승압력 완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최근 중국발 수요 위축,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둔화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8) 전기·수도·가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월)28.3→(6월)25.9→(7월)21.1→(8월)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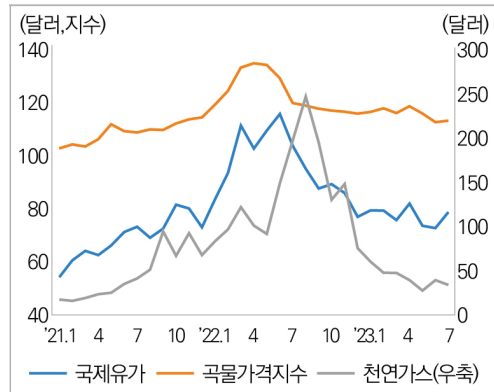
또한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이 고점(2022년) 대비 하락하고 있는 점 또한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는 2023년 하반기 들어 OPEC의 감산조치로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2023~2024년 연간으로는 2022년 95.8달러/배럴(3개 유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 가격 또한 최근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중단(2023.7.17.)으로 상승 압력이 발생⁵⁹⁾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난해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70]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통계청

[그림 II-71] 국제원자재 가격



자료: Bloomberg

생산자물가상승률 하락⁶⁰⁾, 공공요금 인상속도 조절 등의 요인은 비용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4년 중 주요 공공요금이 인상속도를 조절하며 동결되는 경우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9) 한국 곡물자급률(%): (2019년)21.0→(2020년)20.2→(2021년p)18.5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중단이 국내 곡물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에는 흑해협정을 통한 수입 물량이 없으며,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제분용 밀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7.27.).

60)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월)5.1→(5월)0.5→(6월)-0.3→(7월)-0.2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시차상관계수 (2000년 이후, 분기자료)	t-2	t-1	t	t+1	t+2
	0.64	0.72	0.73	0.58	0.39

제2절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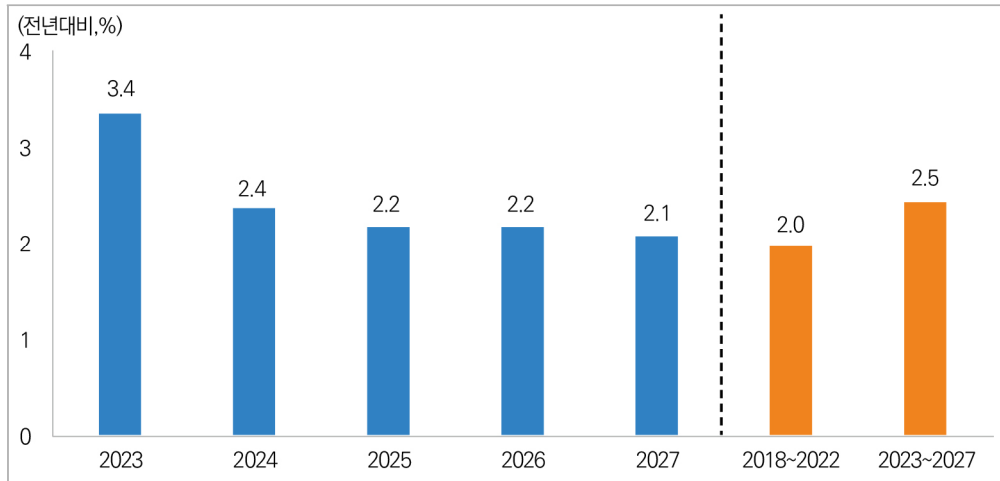
- 2023~2027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5% 상승
 - 지난 5년(2018~2022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3.4	2.4	2.2	2.2	2.1	2.0	2.5

[그림 II-72]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전년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2027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5% 상승할 전망이다. GDP 갭은 2026년부터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⁶¹⁾, GDP 갭이 플러스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중기 시계에서 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5년 이후 원유를 포함한 주요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급등한 주요 원자재가격은 2024년 중 정점을 찍고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1) 중기 GDP 갭과 관련된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 IV- 성장부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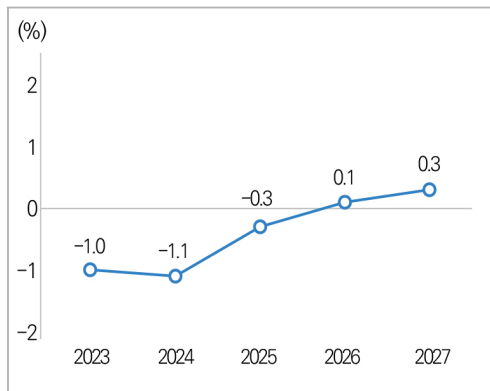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중기 시계에 걸쳐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⁶²⁾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로 인상된 이후 5차례 연속 동결되었으며, 2023년 중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2024년 이후 소비자물가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2] 국제원자재가격 전망(중간값)

	두바이유(달러/bbl)	철광석(달러/MT)	소맥(센트/부셸)
2023	81.0	111.1	668.0
2024	91.0	100.0	640.0
2025	88.0	90.0	623.0
2026	79.0	90.0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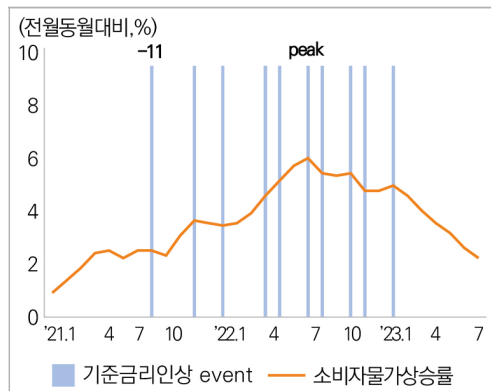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II-73] GDP 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74] 기준금리인상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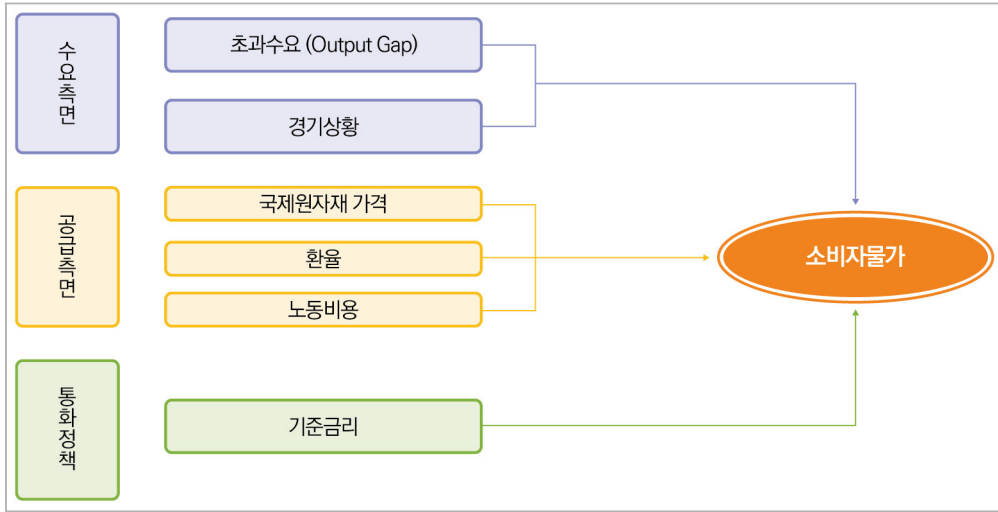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3~2027년 중기 소비자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수요측면, 공급측면, 통화정책 등의 관계를 고려한 NABO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전망되었다. 최종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모형에서 산출된 예측치를 중심으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정량 및 정성적 요인을 반영하여 95% 신뢰구간 내에서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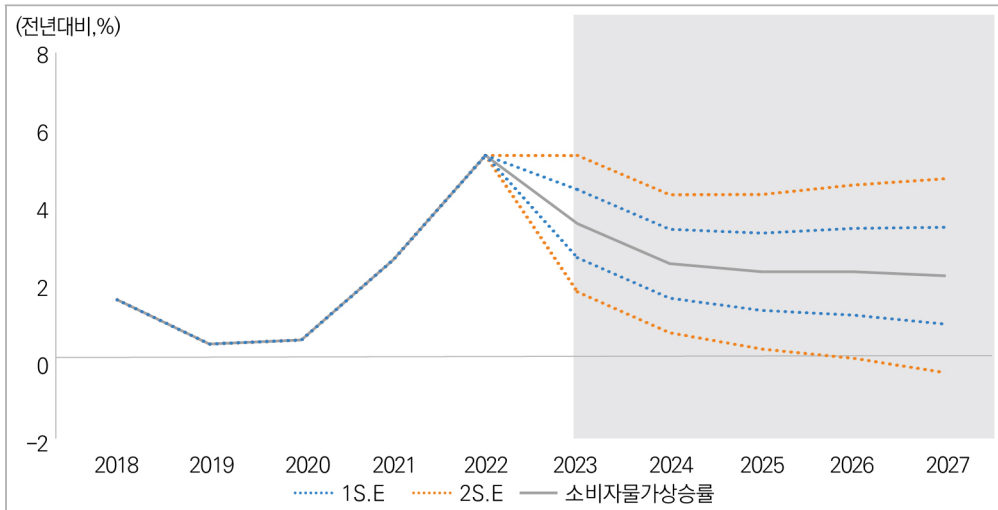
62)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속변수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시차변수와 기준금리 상승률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효과는 최대 11분기(약 3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보고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최대 (peak) 영향은 약 1년 후에 나타나지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3~4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Coibion 2012; Cloyne and Hürtgen 2016).

[그림 II-75] 소비자물가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76] 중기 소비자물가 예측치



주: 1) 예측모형에 기초한 전망치에 대한 ± 1 과 ± 2 표준오차 신뢰구간
 2) 예측치는 모형 예측치와 모형 외의 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판단을 결합한 최종 예측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NABO 10년 전망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명목GDP	2.2	4.2	5.1	4.8	4.4	4.1
실질GDP	1.1	2.0	3.0	2.6	2.3	2.2
디플레이터	1.1	2.2	2.0	2.2	2.1	1.9
소비자물가상승률	3.4	2.4	2.2	2.2	2.1	2.5
임금상승률	2.9	3.0	3.4	3.2	3.2	3.1
취업자 증감률	1.2	0.8	0.8	0.5	0.3	0.7
실업률	2.7	3.0	3.2	3.3	3.3	3.1
국고채금리(3년)	3.5	3.0	2.8	2.6	2.5	2.9
회사채금리(3년, AA-)	4.3	3.6	3.3	3.2	3.1	3.5

	2028	2029	2030	2031	2032	'28~'32
명목GDP	4.0	3.9	3.8	3.7	3.7	3.8
실질GDP	2.1	2.0	1.9	1.9	1.8	1.9
디플레이터	1.9	1.9	1.8	1.8	1.9	1.9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2.0	2.0	2.0	2.0
임금상승률	3.2	3.2	3.1	3.1	3.1	3.2
취업자 증감률	0.3	0.2	0.1	0.1	0.1	0.2
실업률	3.4	3.4	3.4	3.3	3.3	3.4
국고채금리(3년)	2.5	2.4	2.4	2.3	2.2	2.4
회사채금리(3년, AA-)	3.1	3.0	3.0	2.9	2.8	3.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NABO 10년 전망

향후 5년(2023~2027년) 중 전망은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국제원자재가격, 금리, 환율 등 주요 대내외 변수에 대한 전제치로부터 출발하였다.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 민간투자, 수출입 등의 지출부문별 실질변수 및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물가변수는 주어진 전제치와 부문별 결정 요인 등을 고려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민간 소비는 가계 소득변수, 정부지출은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지출 계획,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의 자본재형태별 투자는 관련 수요 및 금리 등의 비용변수가 주요 결정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최근 고용상황, 정부 정책 등 외생적 요인을 바탕으로 전망하였고, 임금상승률 전망에는 근로자 1인당 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였다.

이후 5년(2028~2032년) 중 전망치는 2027년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과 부분별 장기추세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측 요인과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을 고려한 물가방정식을 이용하여 전망하고, 2028년 이후에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과 GDP-고용간 균형관계, 인구변화 등을 바탕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았다. 임금상승률은 2023~2027년과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전망한 결과 지속 하락하여 3%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고채(3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는 국내 경제여건과 미국 국채 금리 변화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였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32년 2%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Economic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I)

발 간 일 2023년 10월 5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주)명문기획 (tel 02·2079·9200)

ISSN 3022-0718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043-10
ISSN	3022-071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